

기본연구
2010-14

충청남도 건축디자인 제도 도입과제 및 운영의 실효성 제고방안

한상욱 · 서수정

기본연구
2010-14

충청남도 건축디자인 제도 도입과제 및 운영의 실효성 제고방안

2010.12

충남발전연구원

ISBN : 978-89-6124-148-9 03350

기본연구 2010-14

충청남도 건축디자인 제도 도입과제 및 운영의 실효성 제고방안

한상욱 · 서수정

발 간 사

21세기를 맞이하여 정보화와 지방화 사회의 도래에 따라 세계는 국가경쟁력의 시대에서 도시경쟁력의 시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도시경쟁력을 필요조건으로 도시디자인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2007년에 건축기본법을 제정하여 건축디자인에 대한 기본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중앙정부도 디자인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하면 지역의 경관을 포함한 디자인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 싸여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제도, 정책, 사업을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에 대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며, 더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중장기계획안에서 건축디자인사업의 관리체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건축디자인 관리를 위한 제도의 틀을 형성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건축디자인 관리의 첫 단추를 끼운다는 측면에 있어서 일선 행정에서 실무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연구는 건축디자인 관련 법 등의 제도와 관련된 논의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과연 지방자치단체는 무엇부터 추진해야하는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하여 건축디자인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보다 합리적이고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연구에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한상욱 연구위원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서수정 박사님, 그리고 실무에서 많은 조언을 해주신 조준배 영주시청 도시디자인관리단장님, 안창주 영주시청 도시디자인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연구수행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연구심의위원에게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 12월 31일
충남발전연구원장 박 진 도

연구요약

1. 연구 배경 및 목적

21세기 도시중심시대로 흐르면, 개별 도시들은 공간의 가치가 부각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하는 삶의 질 향상과 도시브랜드 제고, 관광수입 증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창조적인 도시디자인을 적극 도입코자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입장에서 단기간내에 가장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제도적인 틀을 구축 데에 목적이 있다.

2. 주요 연구내용

선진사례 검토시 건축디자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통합적인 조직을 구성한다는 점, 전문분야 및 행정의 개선을 위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효율성 증대와 통합적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건축관련 추진기구를 조직운영하고, 해당 추진기구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속기관으로 두어 그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점,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부터 디자인 심의 및 자문기능을 강화하고, 민간부문으로 병행 및 확대하고 있다는 점, 공공재단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발굴·기획·운영하고 있다는 점과 건축단계별 평가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었다.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도입하기 위해 해결해야할 과제로는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 건축디자인관련한 통합적 관리를 위한 전문조직을 구성해야한다는 것이다. 충청남도에서는 공공디자인을 시작으로 경관계획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공감하고, 이에 대한 관련조직의 통합부서 운영이 아산시와 보령시를 살펴보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통합부서는 아직은 디자인 관리차원의 협력체계가 아니라 행정지원 차원의 협력체계라고 볼 수 있으며, 도시공간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협력체계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충청남도·시·군에서는 전담조직을 조직하는데 있어 현재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바, 단기적으로는 해당 시·군의 예산과 인력 등의 현실적 조건을 고려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행정참여 촉진과 주민참여 행정의 구현이라는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

고, 장기적으로는 전담조직 및 상설기구 형태인 디자인 관리단의 형태로 추진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도적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축디자인을 제도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서 조례의 제정은 강력한 제도이나, 조례는 상당기간의 준비기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과 주민을 비롯한 일선 공무원의 의식변화에 따른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의회의 동의와 일정기간 동안의 설득이 필요하다는 점이 단점으로 거론되므로, 단기적으로는 훈령과 예규를 통한 건축디자인 제도의 질적 성숙을 유도하는 전략을 취해야 할 것이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건축기본법에 의한 시범사업의 다양화와 확대가 예상되는 바, 다양한 건축도시 공간환경 만들기 경쟁사업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3. 결론 및 정책 제언

건축디자인과 관련하여 시행상에 발생할 문제에 대한 법적인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아직 건축디자인 제도는 우리나라에 생소한 제도이고, 이를 시험적으로 추진하여 경험적으로 얻어진 결과가 없다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그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전반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것은 단시간내에 이루어지는 사안이 아닌만큼 장기간에 걸친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한다. 더불어서 건축디자인관련하여 타 위원회와의 중복성을 탈피하기 위한 심의·자문기준 마련을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타위원회에서 행해지는 심의내용과 자문내용을 검토하고, 건축디자인이 자리잡아야할 심의 기준 마련 또는 통합적 심의를 구축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차 례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3
2. 연구내용 및 방법	5
1) 연구 내용	5
2) 연구방법	6
3. 용어의 정의	9
1) 건축	9
2) 건축물	10
3) 건축의 공공성 및 공간환경	10
4) 건축디자인	11
5) 공공디자인	11
제2장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 틀 설정	12
1. 건축디자인 관련제도 연구	12
1) 건축정책의 방향모색에 관한 연구	12
2) 건축기본법 제정에 관한 법제 연구	13
2. 건축디자인 정책 실현수단에 관한 연구	14
3. 본 연구의 차별성	16
1) 선행연구 검토 결과 요약	16
2) 본 연구의 차별성	17
4. 분석의 틀 설정	18

제3장 건축디자인 관련 정책·제도와 지방자치단체 도입과제 20

1. 우리나라의 건축디자인 관련제도	20
1) 건축기본법	20
2) 경관법	26
3) 공공디자인	39
4) 검토종합	45
2. 선진 건축디자인 관련 정책 및 제도	46
1) 영국의 건축정책 사례	46
2) 네덜란드의 건축정책	50
3) 일본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52
3. 지방자치단체 도입시 문제점	63
1) 충청남도의 건축디자인 행정체계 현황	63
2) 건축디자인 관련 관리체계	68
3) 건축·도시관련 업무 수행 현황 및 문제점	69
4) 문제점 및 개선방향	73

제4장 충청남도 건축디자인 제도 도입·운영의 실효성 제고방안 79

1. 건축디자인 전문조직 구축 운영	79
1) 건축디자인 전문조직의 유형	79
2) 건축디자인 전문조직의 단계별 추진방안	81
3) 전문조직의 위상과 역할	82
4) 공공건축가의 역할 강화	84
2. 제도적 위상 확보	85
1) 단기 조례제정의 문제점	85
2) 훈령과 예규를 통한 건축디자인 제도의 성숙 유도	87
3. 건축디자인 기준 설정 및 적용	89
1) 적용대상별 방향 설정	89
2) 지방자치단체 건축디자인 기준 설정 기본방향	93
3) 단계별 건축디자인 기준 설정 안)	94
4. 건축디자인 적용 및 확대방안	101
1) 건축기본계획의 수립	101

2) 교육 및 홍보방안	101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03
1. 요약 및 정책제언	103
2. 향후 연구과제	105
참고문헌	106
<부록 1> 건축기본법 및 시행령	111
<부록 2> 경관법 및 시행령	121
<부록 3>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130
<부록 4> 영주시 디자인관리를 위한 운영규정	141

표 차 례

<표 3-1> 건축기본법의 용어정의와 구분	21
<표 3-2> 건축기본법의 체계	23
<표 3-3> 건축기본법에서의 공공성 획득을 위한 규정	25
<표 3-4> 경관법 구성 내용	29
<표 3-5> 경관법 구성의 문제점 분석	34
<표 3-6> 공공디자인협회에서 정의한 공공디자인의 범주와 영역	40
<표 3-7> 공공디자인 대상별 관련법률 및 한계점	42
<표 3-8> 네덜란드 건축정책 제정	52
<표 3-9> 충청남도 건축디자인 관련 조직 형태	64
<표 4-1> 디자인 전문조직 유형별 특성 평가	81
<표 4-2> 사업유형별 건축디자인 기준 적용방향	92
<표 4-3> 단계별 국가건축디자인기준과의 비교	95
<표 4-4> 단계별 건축디자인기준에 따른 업무단계별 수행업무 및 주체	99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의 주요내용과 수행절차	8
<그림 3-1> 건축기본법 체계 및 수단	24
<그림 3-2> 건축기본법에 의한 디자인 기준 적용 범위	26
<그림 3-3> 경관법과 관련법 체계의 관계	29
<그림 3-4> CAFE의 조직체계	47
<그림 3-5> KAP의 추진체계	55
<그림 3-6>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사례	57
<그림 3-7>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조직도	59
<그림 4-1> 디자인 관리단의 행정조직체계상의 위상과 구성(안)	84
<그림 4-2>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디자인 기준의 적용대상	89
<그림 4-3> 디자인 과정 전체 단계별 디자인 기준	100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기에 국토의 많은 부분을 조성함에 있어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함에 있어 그 형태와 내용에 있어서 부적절하고 쾌적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으며, 이에 대한 반론으로 최근에 이슈화 되고 있는 방안이 경관, 공공디자인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건축의 공공적 측면에서 볼 때, 개별 건축주체의 자유방임적인 경쟁으로는 올바른 건축 및 건축환경이 구현되기 힘들다는 것이 문제의식의 시발점이며, 건축이 도시와 지역의 측면에서 폭넓게 연계되고 생활환경으로서 자리잡아야 한다는 것이 건축기본법의 취지이자 현재의 건축디자인의 흐름이다.

향후 국가중심시대에서 21세기 도시중심시대로 흐르면, 각 개별 도시들은 공간의 가치가 부각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하는 삶의 질 향상과 도시브랜드 제고, 관광수입 증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창조적인 도시디자인을 적극 도입코자 하고 있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도시브랜드 및 정체성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단계별 관리시스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한상욱, 2009).

국가 및 지자체의 각종 경관계획,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등에는 합의하지만, 이를 실천하기 위한 기본원칙은 사실상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업의 기획, 계획,

공사, 관리 등의 관리시스템이 부재한 상태에서는 통합된 디자인 및 이미지 창출이 곤란한 점도 일각에서 지적되기도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들이 일회성, 전시성 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사업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건축과 관련된 여러 행위 및 이를 뒷받침하는 법령과 제도는 기본적인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운영되어 온 것에 대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건축학회, 2007)

이러한 법령 및 제도는 소극적인 제도로서 선진적인 창의적인 건설기술과 건축문화를 실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자각하에 건축기본법이 제정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¹⁾

건축물 및 공간환경 디자인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및 제도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내용으로는 역량있는 전문가의 초기 참여 배제, 디자인 가치보다 실적 중심의 계획이 선정, 업무단위 성과관리로 인한 장소 중심의 통합디자인 곤란, 공급자 중심의 일방향적 디자인 과정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는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을 2008년에 제시하였다(서수정, 2008).

중앙정부의 건축디자인 정책은 건축행위에 관한 규제나 디자인 자체를 정하는 것이 아닌 전과정에 있어서 지켜야 할 기본원칙으로 업무지침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으나(2009, 한상욱), 지방자치단체입장에서는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접목시킬 것인가가 가장 큰 현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유는 건축디자인 기준의 대상이 공간환경과 공공공간을 포괄하고 있으며, 디자인 전과정을 총괄 조정, 관리할 수 있는 협력적 설계관리 시스템을 구축토록하고 있고 있기 때문이다. 그 대상을 살펴보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각종 시범사업²⁾, 공공건축조성사업³⁾, 각종 개발사업⁴⁾의 대부분의 공공이 추진하는 사업을 거의 포괄하고, 그 추진과정에서 각 단계별 업무방향 설정을 위한 기준으로 적용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디자인 정

1) 현재는 건축기본법(07.12)이 제정되었고, 대통령실 산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주도하에 2008년에 도시경관건축디자인 설정방안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2009년에는 시범사업 기획을 마치고 시행 예정중임

2) 국가상징거리조성사업, 살고싶은 도시 및 지역만들기,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사업 등

3) 학교, 문화시설, 보건시설 등 공공건축물

4) 도시개발사업 : 신도시, 택지개발, 주택건설사업 등

도시재생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등

기성시기지 공간환경개선사업 : 가로특화사업, 상징거리 조성사업 등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 조성사업 : 공원, 광장, 도시기반시설 등

SOC사업

책수립과정에 적용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에서 언급한 대상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입장에서는 공공이 행하는 모든 사업을 포괄하는데 반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 관련사업 추진시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중앙정부 예산을 획득하기 위한 점에 중점을 두다보니,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디자인 정책 및 적용에 난색을 보이는 입장이다.

이러한 점을 정리하면,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입장에서 현재까지 논의되거나 시행되고 있는 건축디자인, 공공디자인사업, 경관계획·사업의 도입배경은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지만,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사업을 그 적용 범위(공간환경, 공공공간), 타법률과의 중복성, 통합추진체계의 미흡 등과 같은 문제로 인하여 효율적인 통합적 추진이 어렵다는 점에 기인한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중시하는 기조로 변화하는 흐름속에서 지자체의 특수성을 반영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개별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난제된 현실적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건축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중앙정부의 건축디자인 기준의 활용과 시행을 위해서 충청남도 입장에서 건축디자인 정책을 단기간내에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제도적인 구축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목적을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충청남도 차원에서 건축디자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제시코자 한다.

건축디자인 정책은 건축, 도시, 조경, 경관, 공공디자인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행정정책으로서 건축행정과 도시계획행정의 연계가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축디자인시책의 종합성을 고려해야할 현재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건축행정, 도시디자인행정, 옥외광고물 행정, 녹지행정 등을 종합 관리할 수 있는 협력체계의 구축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건축디자인부서의 역할정립 및 관련제도(조례 등)의 통합정비가 요구된다.

둘째, 통합적 추진을 위한 관리시스템의 구축방향을 설정코자 한다.

도시경관을 결정하는 대부분의 건축물의 80%이상은 건축심의를 받지 않는 소규모 건축물이 대부분이며, 특히, 학교, 법원, 검찰청, 관공서등의 공공건축물은 협의 및 심의과정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거나 협의도 없이 디자인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20-30년간 지속되면 지역의 경관을 훼손하고 지역간의 불균형을 초래할 할 것이다.(국토해양부, 2008)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행정가, 전문가, 사업주체, 주민 등 다수 주체간 일정수준 이상 디자인의 질을 확보하는 협의시스템이 필요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협력체계를 진행하기 위한 사전협의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취지에서 건축이나 경관분야에서 사전협의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디자인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동안 서로간의 마찰을 해소하기 위한 사전노력은 미흡한 실정이며, 공사 진행과정 중에 문제발생으로 잦은 설계변경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사업비 증가 등 많은 문제 등을 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드백제도가 필요하며, 유사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가진단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스템을 유연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디자인 리뷰 및 평가 제도⁵⁾의 운용이 필요하고, 시공 후에는 사후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시공의 적절함을 평가하고 이에 따른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드백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셋째, 거버넌스 구축 측면에서 건축디자인 관련 추진조직의 정비방안을 마련코자 한다.

건축디자인은 건축, 도시, 조경, 토목, 역사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가 관여하게 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게 되며 각 분야의 전문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단계별로 참여하느냐가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협업시스템 구축이 중요한 사항이 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택지개발, 뉴타운사업 등에 MA(Master Architect), MP(Master Planner)제도가 도입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계획 혹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지정하게 되고, 특히 전문가 참여 및 협업에 대한 명확한 위상정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각 분야간의 업무조정, 협력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의 활용에 있어서 한계를 노정하고 있으

5) 지자체별로 디자인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건축디자인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허가 절차에 사전협의과정을 도입하고, 자가진단시스템을 활용하여 프로젝트 초기단계에서부터 최종단계까지 요구되는 사항을 체크함으로써 디자인을 관리하는 제도임.

므로, 광역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제도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보다 체계적인 협업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전문가 참여의 위상정립, 업무범위, 업무협업 규정 등이 관련 조례(경관, 건축디자인 기준 등)을 통해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설정되어야 한다.

2.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1) 주요 연구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인 충청남도의 건축디자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조직 정비, 심의기능 조정(관리시스템), 협력운영체계 구축방안(전문가 협업시스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연구를 수행한다.

첫째,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지자체 적용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토한다. 기존연구를 검토하여 건축디자인정책의 지자체 적용시 나타나는 문제점을 검토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따라서, 건축기본법의 주요내용, 건축디자인의 주요내용, 건축디자인의 지자체 접목시 발생할 수 있는 사업 및 체제상의 문제점 등 검토한다.

둘째, 선진국의 건축디자인정책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사업과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체제와 관리시스템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고, 지자체의 적용 가능성을 판별하기 위한 분석틀을 설정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 영국, 일본, 네덜란드와 같은 선진사례를 검토한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조사한다.

우선, 건축디자인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시책의 특성과 더불어 건축디자인 협력체제상 조직형태, 역할, 업무분장, 조례 등의 관련된 근거조직형태 및 업무내용을 조사한다. 또한, 디자인 관리시스템에 있어서의 전문가 활용형태를 고찰하고, 충청남도에 적용가능한 내용을 도출

한다.

셋째, 충청남도의 건축디자인 정책은 현재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충청남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제도, 조직, 업무분장을 검토하여 현재 충청남도의 건축디자인관련 운영 실태를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건축디자인 정책 실효성 확보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건축디자인 관련부서 및 내용의 역할 정립 및 조례 정비방안을 제시하고, 충청남도 차원의 디자인 정책 추진전략 및 장단기 부문별 개선과제를 제시한다.

2) 연구방법

연구의 방법은 크게 제도분석 및 문헌고찰, 사례조사 및 실태조사, 외부전문가에 대한 원고 위탁 및 자문 등의 방법을 수행한다.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공무원의 의식조사나 타 관련법·계획상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정도를 조사하여야 하지만, 현재 본 연구에서는 정책 도입의 초기단계라고도 볼 수 없는 상황으로 관련 공무원의 인지도는 현격하게 낮을 것으로 판단되어 의식조사는 제외하였다.

공무원의 설문조사를 제외한 사유로는 사전 시군공무원의 인터뷰시 건축디자인관련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시군과 그렇지 않은 시군이 건축기본법에 대한 인지정도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타났다.

관련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시·군이라하더라도 공공디자인과 경관에 대한 인지도는 높았으나, 건축기본법에 대한 인식정도는 관련담당의 1-2명 정도만이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건축기본법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미인지상태로 확인되었다.

반면, 중점적으로 관련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시군의 경우는 건축기본법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더불어, 관련전문가들의 인터뷰시 충청남도 관련공무원은 업무분장상 사업집행 및 관

리적 성격이 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건축기본법의 본질에 대한 미인지상황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 대안으로 전국의 건축디자인관련 정책을 선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의 인터뷰를 실시하는 것으로 대체하였다.

(1) 제도분석 및 문헌고찰

건축디자인정책은 중앙정부에서 추진코자 하는 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용하고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추진하느냐에 있어서 효율적인 통합적인 체제를 구축하느냐가 지방자치단체의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중앙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책 및 제도의 주요 내용을 검토 분석하고, 관련 정책과 관련하여 차별성을 검토하였다.

(2) 사례조사 및 충청남도 실태조사

기존 연구에서 검토된 국내의 사례지역과 선진 외국의 사례를 조사하며, 조사내용은 연구목적과 연구내용에 부합토록 협력체계, 전문화 협업시스템, 디자인 관리시스템을 조사하였다. 수행방법은 국내 및 충청남도의 실태조사는 연구책임자가 시행하며, 해외조사는 사례조사를 관련문헌을 통하여 연구자가 시행하며, 국외의 사례조사를 시행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둔다.

〈그림 1-1〉 연구의 주요내용과 수행절차

구분	연구방법
(제1장) 문제의 제기	· 연구의 배경, 목적, 방법, 절차
(제2장)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틀 설정 · 건축디자인 관련 제도 연구 · 건축디자인 정책 실현수단에 관한 연구 · 본 연구의 차별성 · 분석틀 설정	· 이론 · 선행연구 동향분석
(제3장) 제도 · 정책과 자치단체 도입과제 · 우리나라의 건축디자인 관련제도 · 외국의 관련제도 및 정책 · 지방자치단체 도입시 문제점과 해결과제	· 국내외 건축디자인관련 정책 및 제도 비교 분석
(제4장) 충청남도의 건축디자인 도입과제 및 운영 실효성 제고방안 · 관련제도 개선 · 관리시스템 구축 · 추진조직 개선방안 · 건축디자인 적용 · 확대방안	· 전문가 인터뷰 · 관련 공무원 인터뷰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 연구요약 및 한계

3. 용어의 정의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존에 암묵적으로 통용되어온 용어와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용어와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용어를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대부분의 용어는 건축법과 건축기본법에 의하여 정의된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크게 대별되는 것이 건축법과 건축기본법으로서 건축법과 건축기본법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을 하나의 행위로 규정한다는 점에서는 건축기본법과 동일하지만, 행위의 범주가 개별건축물로 한정되어 있고, 개별건축물을 시공하는 행위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건축물은 건축행위 결과라는 일대일 관계를 갖는 개별건축물의 시공행위라고 할 수 있다.

건축기본법은 건축물과 건축을 구분하면서 건축물은 제3조1항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건축은 단순히 짓는 일이 아니라 그것을 짓기 이전에 기획하고 설계하고, 짓고, 유지관리하는 전 과정의 행위를 지칭하는 환경조성 전과정의 행위체계라고 볼 수 있다.

1) 건축

건축의 정의⁶⁾는 건축법과 건축기본법에 의하여 정의될 수 있는 데, 건축법(제2조8항)에서는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건축기본법(제3조7항)에서는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건축법은 개별 건축물에 귀결되기 전의 행위중 시공단계를 중심으로 서술한 반면, 건축기본법에서는 건축물을 포함한 공간환경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였고, 과정에 있어서도 건축행위뿐만이 아닌 전 과정을 포괄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의 정

6) 건축기본법상 건축디자인의 정의(제3조4항)

-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조성으로 건축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설계하고 개선하는 행위 / 목표지향적 환경조성 행위체계

7) 건축기본법의 제정 및 문제인식의 배경은 ① 생활환경적 측면에서 기존의 환경요소의 개별화, 분절화로 인한 환경요소의 연계성, 통합성 부재 ② 조성방법상 개별요소의 개선, 대가 의존적 접근으로 인한 장소 중심의 통합시스템 부재에서 출발하였다는 점에서 건축법과 건축기본법에 의한 해석의 차이가 발생함

의를 건축기본법에 의한 건축으로 한정한다.

2) 건축물

건축물의 정의는 건축법(제2조2항)에서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건축기본법(제3조1항)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로 정의하고 있다. 건축물의 정의는 건축행위로 나타나는 모든 결과물을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는 점은 공통적이지만, 앞서 언급한 건축법과 건축기본법의 건축에 대한 범위를 한정함에 있어서 차이로 인하여 그 결과물 역시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기본법에 의한 건축물로 한정한다.

3) 건축의 공공성 및 공간환경

건축의 공공성은 건축기본법에 의거한 국민의 일상적 생활공간, 사회적 자산, 문화적 유산이라는 공공적 가치를 우리 사회에 실현하는 건축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시키고, 이를 올바르게 구현하기 위한 것을 말하며, 사회공동체 모두의 참여와 노력으로 건축을 통한 공간환경을 기획하고 설계하는 창조적 활동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한다.

공간환경은 도시 및 지역의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와 그 안에 부속되는 내용물, 공공공간 및 경관을 말하며, 도시와 지역에 속하는 건축물이 함께 이루어내는 공간구조와 그 구조를 형성하는 사람의 행위와 목적, 기능 및 생활, 공간구조의 상이를 연결하는 공공공간과 그것이 이루는 경관적 특성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존재하는 건축물의 역할을 명시하는 것이다. 즉, 다른 일상생활적 기반위에서 도시 및 지역의 경관적 특성을 생산하는 목적물과 그 행위를 내포하는 개념이다.

4) 건축디자인

건축디자인은 건축기본법에 의한 건축행위에 대한 일정의 디자인 행위라고 하면, 그 범위와 내용에 있어서 포괄적이다. 유럽의회결의안(2001)에서 나타났듯이, 건축은 지적, 문화적, 예술적, 전문적 활동이며, 국가의 사업에 있어서 건축서비스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건축서비스는 문화적인 동시에 경제적인 전문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 건축디자인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설계하는 창조적 활동과 건설공사에 의한 그 실현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건축디자인은 건축기본법에 의한 건축행위에 대한 디자인 행위로 정의하여 사용한다. 이것은 제목부터 본문까지 통일되게 적용한다.

5) 공공디자인

공공디자인은 현재 충청남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시군의 일선 공무원이 건축디자인과 공공디자인의 개념에 있어서 가장 혼선을 빚는 개념이기도 하다.

현대사회에서의 디자인은 크게 사적영역과 공공영역의 디자인으로 크게 구분되며, 도시는 사적디자인과 공공디자인 모두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디자인의 여러 분야중 공공을 대상으로 하는 디자인을 공공디자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 대상영역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사적디자인과 공공디자인으로 나눌 수는 없으며, 사적 영역이라 하더라도 공적 목적에 의한 영역까지도 공공디자인에서 포함하고 있다. 공공디자인의 주요 영역은 공공공간, 공공정보, 공공시설, 공공용품으로 크게 나뉜다.⁸⁾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기술한다.

8)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2006), “공공디자인진흥법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

공공공간은 도시경관, 공공건물, 도로, 개반공간, 역사공간, 특별지역, 도시색채계획, 야간조명계획 등이 포함되며, 공공시설은 가로시설물, 개반공간에 설치되는 각종 장치물을 말한다.

공공정보는 국가기구 상징물, 국가행사 상징물, 국가 인증물, 국가정보시스템, 정부간행물과 포스터, 지방자치단체 상징물, 교통안내시스템, 관광정보시스템, 옥외광고물을 말하며, 공공용품은 공공기관용품, 공공서식류, 국가조직 통합물, 공공관리용품등을 말한다

제2장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 틀 설정

1. 건축디자인 관련제도 연구

건축디자인 관련된 법에 관련된 연구는 크게 건축기본법과 관련하여 무미건조하고 훼손된 건축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으로 건축정책의 방향 전환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전제하에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밝히는 연구와 건축기본법 자체에 대한 법제 연구로 크게 양분할 수 있다.

1) 건축정책의 방향모색에 관한 연구

건축기본법과 관련해서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며, 그 건축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로는 공공건축의 개념 정립, 정책방향,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가 대표적이다.

서수정 외 2(2007)은 공공건축의 가치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방안에서 건축과 공간환경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사회적 담론으로부터 출발하여 공공건축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공공건축의 문제점을 관료화, 획일화, 개별화의 경향을 뺏에 따라 사회적 기능이 미약하고, 시설별로 건설·관리주체가 분리되어 전체 도시공간 차원에서 문화적 연계성이 낮은 점을 문

제점으로 적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설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외형적인 디자인 수준 향상에 국한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된 사회적 공간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조성현황을 조사하면서 중앙정부 중심의 관료화된 공급체계로 인한 지자체의 자율성 미흡, 공급자 중심의 획일화된 시설 공급, 기능적 측면만을 고려한 창조적인 공간계획 창출 미흡, 칸막이식 행정으로 인한 중복성과 획일성, 조성 과정중 권위적이고 위압적인 공간 디자인 등을 개선해야할 과제로 지적하였다.

이 연구는 공공건축에 대한 일반적이고 보편타당한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국한되며, 공공건축의 근본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주민의 생활공간으로 기능하기 위한 제도개선, 전문가 참여, 행정지원 등에 대해서는 후속과제로 남겨 두었다.

이상민 외 2인(2007)은 도시 공공공간 개선방향 설정을 위한 개념 정립 및 현황조사 연구에서 공공공간의 개념 및 범위, 관련제도 및 조성현황, 국내외 사례검토를 통해 공공공간의 본질적인 개선과 지속적 개발을 위해서는 현대사회에 적합한 공공공간 개념을 정립하고 공공공간 활용에 대한 다각적인 고려와 다양한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기반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를 위해 공공공간 범위의 확장과 다양화, 공공공간 이용가치의 극대화, 파트너십에 의한 공공공간 조성, 통합적 계획 및 지원체제 구축, 지속적 관리 운영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정책화 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개념정립, 현황분석이 주된 내용으로서 공공공간의 개념을 확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나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연구의 한계로 남겨놓았다.

2) 건축기본법 제정에 관한 법제 연구

건축디자인 관련법의 근간은 건축기본법이며,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건축기본법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건축관련 법규 및 정책 현황에서 우리나라의 건축관련 법령이 대부분 규제

법으로서의 성격을 갖으며 건축정책을 추진하거나 건축을 진흥하기 위한 법이 없다는 데에서 출발하였다.

이와 관련된 법규는 입지선정에서 설계·시공·건설·관리 운영에 이르기 까지 212개 관련 법령이 산재하여 적용됨을 검토하였으며, 대표적인 관련법으로는 건축법⁹⁾, 국토기본법¹⁰⁾, 경관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정리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건축기본법의 성격이 기본법으로서 선언적 성격과 실행방안적 성격을 동시에 충족하는 균형을 잡고자 노력하였고, 그 실행적 성격은 건축기본계획의 내용¹¹⁾에 따르도록 하였다.

2. 건축디자인 정책 실현수단에 관한 연구

건축디자인 정책 실현수단에 관한 연구로서는 외국의 선진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제시하는 사례연구와 국가건축디자인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계획과제를 제시하는 연구로 크게 구분된다.

외국의 선진사례를 비교 검토한 연구는 건축기본법 연구(2006)에서 유럽,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핀란드, 스코틀랜드 등의 사례를 분석하여 건축정책의 주요내용, 중앙과 지방의 추진기구, 재정지원 및 규모 등을 제시하였다.

9) 1934년에 제정된 조선시가지 계획령을 개편하여 1962년에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이 제정된 이후, 최근의 건축법개정(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개정2006.9.27, 시행일 2007.9.28)에 이르기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외하고 건축법만 해도 타법에 의한 개정을 포함하여 40여 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건축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대부분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이 규제완화, 절차간소화, 건축기준의 현실화에 대한 것이었다

10) 국토기본법은 국토계획을 범부처·범지자체 차원에서 실천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우선 그것은 개방형 통합국토축 실현, 본격적인 개방화 시대에의 대비, 친환경적 국토관리 등의 과제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국토계획의 절차법에 그치고 있는 현행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확대·개편하여 국토관리의 이념법 및 실천법으로서의 성격 부여)

11)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 국민의 건축 사용실태 및 사용만족도에 관한 사항, 지역의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대책, 우수한 설계기법 및 첨단건축물 등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국가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예산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며, 기금과 특별회계의 용도에 설계경기에 의한 건축디자인 사업 및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이 연구에서는 프랑스, 네덜란드의 지방차원의 건축정책 추진기구를 소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일정부문 지역건축가의 역할과 지역공동체가 보유한 설계자문단에 대해 검토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건축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 실현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국가단위의 건축정책에 대한 공통적인 특성을 도출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어 지방단위의 건축정책 방향, 조직, 업무 분장, 지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빈약한 점이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조임식 외 1(2009)는 건축의 공공적 인식과 참여를 증진시키는 해외 건축센터의 역할에 관한 연구에서 네덜란드 건축센터를 사례로 설립 배경, 운영체제, 관련주체별 상관관계, 주요기능 및 재정 지원등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네덜란드 건축협회는 건축센터와 아카이브,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이 긴밀하게 연계된 복합적인 운영체제를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일반 대중에게 전시와 교육의 형식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건축기본법 시행과 관련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의 중심적 지원기관이자 공공적 건축문화 증진의 중심적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점에서는 시사점으로 언급하고 있다.

서수정(2008)은 건축기본법에 의한 지방정부 건축디자인 기준의 바람직한 기획·운영이라는 연구에서 지방정부의 디자인 정책과 건축디자인 기준을 시행에 따른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인식의 폭에 대한 견해차를 제시하고, 건축기본법에 의한 건축디자인은 결과중심이 아닌 다양한 관련자가 참여하는 디자인 프로세스를 중시하는 의사결정 방안을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기획 및 계획, 설계, 시공, 관리단계에 이르기 까지 중앙부서, 교육청, 민간전문가, 지자체, 지역주민이 각 단계별 참여 방법을 일제로 제시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도시디자인을 운영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공공건축가 중심의 디자인 거버넌스 구축, 체계적인 디자인 관리시스템 마련, 전문 행정인력의 확충과 교육·홍보 등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3. 본 연구의 차별성

1) 선행연구 검토 결과 요약

국가차원의 건축디자인 정책이 일부 선도적 그룹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선행연구 검토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차원의 건축디자인정책에 대한 방향설정과 정책화를 통한 근거법의 제정으로 총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성과가 있으나 향후 전개방향에 대한 체제정비, 사업화·시책화를 위한 방안 제시가 부족하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관련법과 관련시책이 부처별로 쏟아지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계획과제만을 제시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자체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추진방향에 있어서 관련연구가 필요하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입장에서는 건축기본법에 의거하여 법을 시행해야하는 행정입장에서는 과거의 행정단독이 아닌 관련자와의 거버넌스를 구축해야한다는 점에 있어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다양한 선진해외사례분석과 지자체 시책의 전개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해 그 방향성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성이 높다.

둘째, 집행수단으로서 건축기본법에서 조례로서 위임한 사항과 관련하여 그 적용범위에 대해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건축기본법은 규제법이 아닌 유도법으로서 그 적용대상이 지방자치단체의 거의 모든 건조환경과 관련된 행위에 적용되는 바, 그 적용 범위에서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높고, 건축기본법에 의거하여 강제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행정편의의 관행적인 집행으로 건축기본법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건축기본법에 의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어느 범위까지 적용 범위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입장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전

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 법과의 관련선상에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제시가 이루어져야한다.

셋째, 건축기본법 시행 후 지방자치단체입장에서는 관련 행정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연구, 즉, 행정추진 조직적 측면에 관한 연구가 미흡하다. 건축기본법 시행이후 중앙차원에서는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추진조직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한다는 총론적이고 일반화된 계획과제 성격의 제시는 있지만,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형태 고려가 미흡한 연구로서 향후 연구과제로 남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건축기본법과 경관법을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경우, 경관법도 2007년에 제정되어 그 시행을 두고서 상당기일이 소요되었고, 더불어 조직의 정비에 있어서는 일부 지자체만이 전략적으로 추진할 뿐 모든 지자체에서는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축기본법과 관련된 행정에 바로 접목이 가능한 실현가능한 현실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본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의 출발이자 시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발한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의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적 성격이 강하다면, 본 연구는 이를 현장에서 시행하기 위한 통합적 추진에 초점을 맞춘 점이 차별성이라고 할 수 있다.

건축기본법에 의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를 어디까지 적용하여야 하는 것 우선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건축기본법에 의거한 장소기반의 지역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관련법, 특히 경관법과의 차별성을 검토하여 제시함으로써 타법과의 관련선상에서 혼선을 최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련법 특히, 경관법과의 차별성을 부각하기 위한 검토를 시행한다.

더불어서,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전문가라면 누구나 주장하는 바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은 건축디자인 관련 법령이 212개에 이르며, 이와 관련하여 모든 건축디자인제도를 통합하기란 사실상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중앙과 지방의 근본적인 차이점에 기인하는 데, 중앙부처는 관련정책을 입안하고, 이를 정책화하여 실현시키고자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중앙 1개 부처의 업무를 전담하는 것이 아닌 타 관련 부처의 정책을 다분야에 걸쳐서 모두 수행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특히, 도시 및 건축분야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는 그 업무의 속성상 지방자치단체의 기획이나 계획보다는 현재까지 주어진 관련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관리할 것이냐는 관리적 측면이 강하다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건축디자인 관련 부서의 통합적 추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사례를 검토하고, 실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관련 공무원의 인터뷰를 실시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것은 현장접근적인 방향으로 향후 본 연구의 정책적 실효성을 거양하는 바에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분석의 틀 설정

본 연구는 건축기본법 제정 이후,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건축디자인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 등 제도적 개선, 심의기능 통합방안, 행정추진조직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목적 달성을 위한 분석의 틀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우선, 국내외 사례를 통해 건축디자인 행정업무의 특성을 파악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적용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축디자인 행정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서 건축기본법에 의

한 조례의 뒷받침을 받아야하는 바, 건축디자인 기준의 성격과 위상, 그리고 그 적용대상 및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된다.

따라서, 우선, 건축기본법에서 위임된 건축디자인 조례에서 수렴해야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건축디자인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토록 하며, 아직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선진국의 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셋째, 건축디자인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의 기능강화에 대해서는 건축기본법에 의해 조례에 위임된 위원회의 기능을 중심으로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위원회 참여자, 전문가 참여부문, 심의대상, 심사 및 조사업무의 주요 내용, 사전협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하토록 하며, 이를 시행하기 위한 업무단계별 지침을 마련토록 한다.

넷째, 추진조직에 대해서는 경관관련 추진조직의 형태, 건축디자인 추진조직의 주요 업무분장과 추진조직의 전담 및 확대시 어려운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관련사례를 검토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는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한다.

제3장 건축디자인 관련 정책·제도와 지방자치단체 도입과제

1. 우리나라의 건축디자인 관련제도

1) 건축기본법

(1) 개요 및 의의

건축기본법은 2007년 12월 제정, 2008년 6월 시행되었으며, 이 법의 목적은 건축문화의 진흥을 통해 국민의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이라고 명기되어 있다. 이 법은 계획법적 성격과 절차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설치,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민간전문가의 활용, 건축디자인 시범 사업등의 시행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의의로서는 건축과 건축디자인에 관한 새로운 용어를 정의한 점을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다.

우선 ‘건축’과 ‘건축 디자인’인이란 용어를 새롭게 정의하여 건축의 영역을 확장하였다는 점으로 건축물과 건축에 대한 용어 정의를 건축법과 비교해보면 건축기본법에서 전제하고 있는 ‘건축’에 대한 개념적 특성 내지는 전제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건축’을 정의하면서 건축법

에서는 건축을 하나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건축행위로 발생하는 결과물을 ‘건축물’로 정의하는 일대일 대응관계를 갖는 반면, 건축기본법에서는 ‘건축물’과 ‘건축’을 구분하면서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3조 1항)’로 정의하고, ‘건축’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 관리하는 것(제3조 7항)’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건축기본법에서는 건축행위 이전에 기획하고 설계하고, 짓고, 유지 관리하는 전 과정의 행위를 지칭하고 있는 점이며, 건축행위의 결과물을 건축물과 공간환경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행위체계 전과정을 말한다.

건축디자인 역시 개별 건축물을 설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이 조성으로 건축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설계하고 개선하는 행위(3조4항)’로 정의하고 있다.

건축이 전 과정의 행위를 중립적으로 지칭하는 것이라면 이와 차별성을 두어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목표 지향적인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는 일상생활환경은 개별 건축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보다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환경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고, 그것을 제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 자체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 내는 시스템에 더욱 주목해야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건축기본법은 건축물 자체에 주목하기 보다는 건축물과 공간환경 전반이 형성하는 포괄적 생활환경을 만들어 내는 시스템의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표 3-1〉 건축기본법의 용어정의와 구분

구분		용어	정의
행위 체계	대상을 만들어내는 행위, 과정	건축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하는 것
	가치지향적 행위, 활동	건축디 자인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조성으로 건축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설계하고 개선하는 행위
대상	물리적 환경	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부수되는 시설물
		공간 환경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공공공간 및 경관

		공공 공간	가로·공원·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물리적 환경의 속성	품격	주변환경과의 관계, 규모, 형태, 구조, 재료, 시공수준 등을 통하여 그 목적과 지역의 정체성을 창출할 수 있는 적절성
		품질	안전, 보건, 기능, 쾌적, 자원절약과 재활용 등의 객관적 성능

주) 건축기본법 재정리

(2) 건축기본법의 기본 전제

건축기본법이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봤을 때 건축기본법을 이루는 중요한 개념은 두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우리의 생활환경은 매우 포괄적이고 다양한 요소들의 통합체로 구성된다는 전제이며, 이것은 우리의 생활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요소로서 작동하지 않고, 매우 다양한 요소가 결합된 통합체로서 기능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건축물을 다른 맥락적 환경과 유리시켜 객체로서의 건축물 자체만으로 한정하여 이해하는 방식을 강요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생활환경의 수준을 높게 만들어 나가는 데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에서 근거한다.¹²⁾

둘째, 수준높은 생활환경은 개별건축물이나 공간환경을 구성하는 개별요소들을 우수한 설계자들이 훌륭하게 만들어내는 소위 대가 중심의 방식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며, 그 생활환경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의 질적 수준¹³⁾이 향상되어야 한다는 전제이다.

이러한 취지하에서 건축기본법에서는 제2조(기본이념)에서 별도 조항을 두어 이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전제하에서 출발하다보니 건축기본법은 다른 법령에 비해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것처럼 보이는 경향이 있다.

12) 강인호(2009), 건축기본법의 이해와 건축정책의 새로운 방향 모색, 건축정책위원회 세미나, p4.

13) 통상적으로 말하는 개별건축물의 설계과정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 문제가 아니라 적절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내는 포괄적 행위시스템을 말함

(3) 구성체계 및 실행수단

건축기본법은 크게 총칙(1-6조), 건축정책의 기본방향(7-9조), 건축정책의 수립(10-12조), 건축정책위원회(13-19조), 건축문화의 진흥(20-24조), 부칙으로 구성된다. 건축기본법의 구성체계는 아래 표와 같다.

〈표 3-2〉 건축기본법의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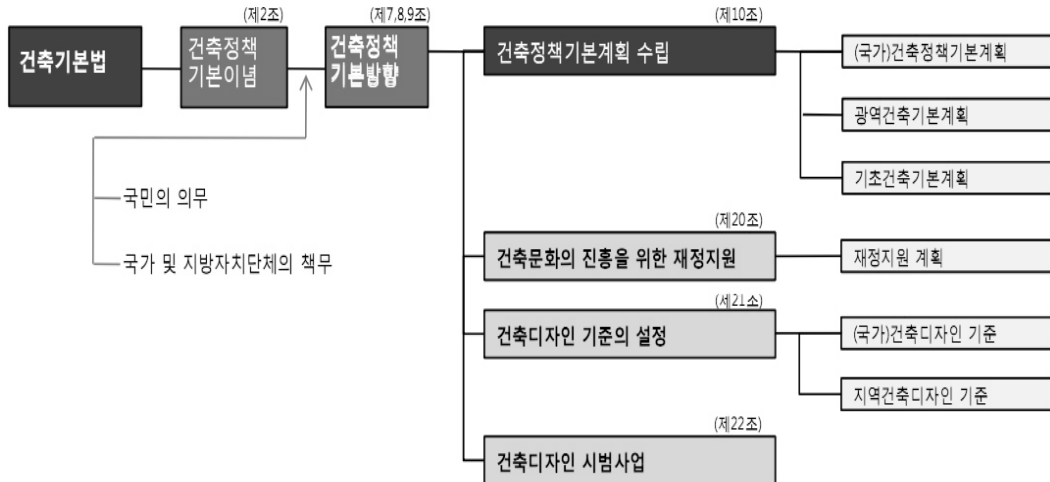
구성	주요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정의)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5조 (국민의 의무)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건축정책의 기본방향	제7조 (건축의 생활공간적 공공성 구현) 제8조 (건축의 사회적 공공성 확보) 제9조 (건축의 문화적 공공성 실현)
제3장 건축정책의 수립	제10조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제11조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 제12조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 등)
제4장 건축정책위원회	제13조(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14조(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 제15조(건축정책 국회보고) 제16조(건축 기본조사) 제17조(기획단) 제18조(지역건축위원회) 제19조(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
제5장 건축문화의 진흥	제20조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제21조(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제22조(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실시) 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 제24조(설계공모의 시행)
부칙	

건축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이념을 실행하는 수단은 정책과 제도 및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책계획은 지향점과 구체적 실행수단을 강구하기 위한 상위적 원칙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이념이라 할 수 있다. 기본이념을 받아서 건축정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하고 건축정책 기본계획은 그 이념과 기본방향이 법률로 정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건축기본법에 의거한 기본방향을 구체화하는 것이 건축정책기본계획이며, 그 내용은 건축기본법 제11조14)와 시행령 3조15)에 근거한다.

〈그림 3-1〉 건축기본법 체계 및 수단



자료 : 정성구, 건축정책기본계획과 건축디자인 기준의 수립방안, 광주발전연구원, 2009

14) 제11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 건축정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건축의 품격 및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4.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대책
6. 우수한 설계기법 및 첨단건축물 등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7. 건축분야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건축디자인 등 건축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9. 건축문화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10. 건축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 및 선도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11.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시행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진흥에 필요한 사항

15) 시행령 제3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11조제1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진흥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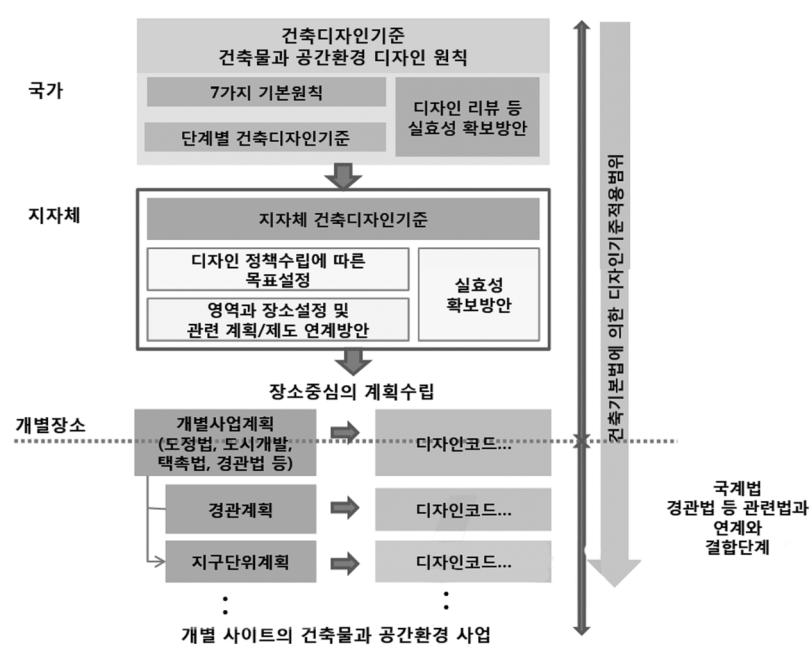
1. 건축물에 대한 국민 교육과 홍보
2.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보존에 관한 사항
3.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4. 건축물과 공간환경에 관한 기록자료의 구축
5. 건축문화진흥 관련 주민자치기구의 설립과 운영 지원 등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건축문화진흥을 위하여 의결한 사항

여기서 주목할 것이 건축기본법은 물리적 대상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정하는 법이라기보다는 물리적 환경을 만들어지는 시스템에 주목하고 있고, 그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움직이는 각 행위주체들의 역할과 의무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건축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정책과 이에 근거하여 수행되는 각종 제도, 사업 등의 실행에 있어서는 내용의 구성뿐 아니라 그것이 작동해 나가는 시스템과 그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는 각각의 행위주체들의 역할과 의무, 협력체계 등을 중시해야하며, 그러한 협력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과정을 조직화하고, 체계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표 3-3〉 건축기본법에서의 공공성 획득을 위한 규정

구분	주요내용
건축의 생활공간적 공공성 구현 (7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고 그 안전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사용자의 건강과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의 이용을 배려하여 조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건축의 사회적 공공성 확보 (8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다원적(多元的) 문화에 부응하고 미래사회의 문화적 요구변화와 기술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건축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이 미래세대에 계승되는 사회·경제적 자산으로서 조성되고, 그 가치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조성하고 사용하는 과정 등에 있어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재이용과 재생을 촉진함으로써 자연과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건축의 문화적 공공성 실현 (9조)	①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조성하여 사용하는 전 과정에서 건축의 문화적 가치가 향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문화적·산업적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창의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이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풍토나 역사 또는 환경에 적합하게 조성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유산을 보전하고, 새로운 건축물 및 공간환경이 기존의 공간환경과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조성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시행한 건축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책성과를 평가하는 등 건축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림 3-2〉 건축기본법에 의한 디자인 기준 적용 범위



2) 경관법

(1) 경관법의 구성과 체계

① 경관법의 구성

경관법은 총 7장에 2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크게 총칙,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칙에서 경관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명기함으로써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확보하였다.

경관계획에서는 경관계획 수립권자와 대상지역의 범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주민제안제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경관계획의 수립,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자료 활용에 관한 사항,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경관계획의 승인,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된 경관·미관지구의 관리 원칙을 정하고 있다.

경관사업에서는 사업의 대상과 민간사업에 대한 승인제도, 민간 합동의 사업 추진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다.

경관협정에서는 경관협정체결의 주체와 효력, 경관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운영회의 설립 및 운영, 협정인가, 변경, 폐지, 협정의 준수 및 승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경관위원회에서는 경관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② 경관법의 체계

경관법의 목적은 경관의체계적 관리를 위해 각종 경관자원들의 보전과 형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국토환경 및 지역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기존의 여러 법령들 속에서 국토의 경관관리를 위한 직·간접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개별 분야에 한정되고 산발적이고 비체계적으로 운영되어 경관의 계획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왔는 바, 경관법은 경관 관련조례에 법적 근거를 제공하여 국토전체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제정한 일반적이고, 기본법적 성격의 법이다.

우리나라의 경관법이 기본법적인 성격을 갖는 반면, 일본의 경관법은 크게 기본법¹⁶⁾적인 내용과 실체법¹⁷⁾적인 내용으로 나뉜다. 기본적인 내용으로는 양호한 경관의 형성에 관한 기본이념, 국가·지방공공단체·사업자·주민 등 경관형성의 각 주체에 대한 책무규정과 정의 등을 규정하고 있고, 실체법적인 내용에서는 양호한 경관형성을 위한 경관계획수립을 통한 구체적인 실행방법과 규제수단을 규정하고 있다.¹⁸⁾ 일본의 이러한 법제의 이원적 체제는 경관을 정비·보전하기 위한 기본이념, 국민·사업자·행정의 책무, 경관형성을 위한 행위규제를 행할

16) 한국에서는 특정행정영역에서의 국가 행정상 기본적 이념·정책·방침을 밝히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을 가리키며, 국회법·정부조직법·법원조직법 등이 이에 해당됨, 이러한 기본법은 관계법령에 대해서 일정한 지도성 및 방향성을 갖는 것이 요청되며, 그 법 형식이 법률이기 때문에 보통 법률과의 사이에 상하관계가 없는 것이 특징임. 그밖에 일정한 법률관계에서는 보다 기본적인 법률이라는 뜻으로 형법을 범규·형벌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됨(www.naver.com)

17) 권리·의무 등 법률관계의 내용을 정하는 법으로 법률관계의 성립·인정 등의 절차를 정하는 절차법과 대비됨. 민사 실체법으로는 민법·상법 등이, 형사실체법으로는 형법 등이 있음. 헌법은 입법에 관한 실체법과 절차법을 포함하고 있고, 행정법상의 여러법전도 실체법과 절차법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www.naver.com)

18) 최환용(2005), 일본의 경관보호법제, p36.

조직의 창설, 경관형성을 위한 지원조직 등을 명확하게 하고, 동시에 지방공공단체에 대해 필요한 경우 어느 정도의 강제력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¹⁹⁾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은 지역주민 전반의 공감과 합의를 바탕으로 양호한 경관이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개발행위는 기존의 경관과 조화·균형을 이루도록 함과 동시에 경관관리를 경직된 보존위주의 방식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재생적 이용, 복원, 창출까지 이어지는 전향적인 방식을 지향하고 있다.

국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향유하고자 하는 권리로서 ‘경관권’을 선언적으로 표현하고 있다.(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책무에서는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달성하기 위해 경관관리행정의 주체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책무를 규정하고, 경관관리는 국민의 자발적 참여가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식하에 국민이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는 ‘경관의 보전·형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이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내용은 기존에 관련법제들을 상호 유기적으로 운용하게 하는 기본법적 성격의 법률이므로, 관계 법률에서 경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을 경우에는 당해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관계 법률에서 경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을 경우 당해 법률을 우선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며, 기존의 법제들을 상호 유기적으로 운영하여 법제간의 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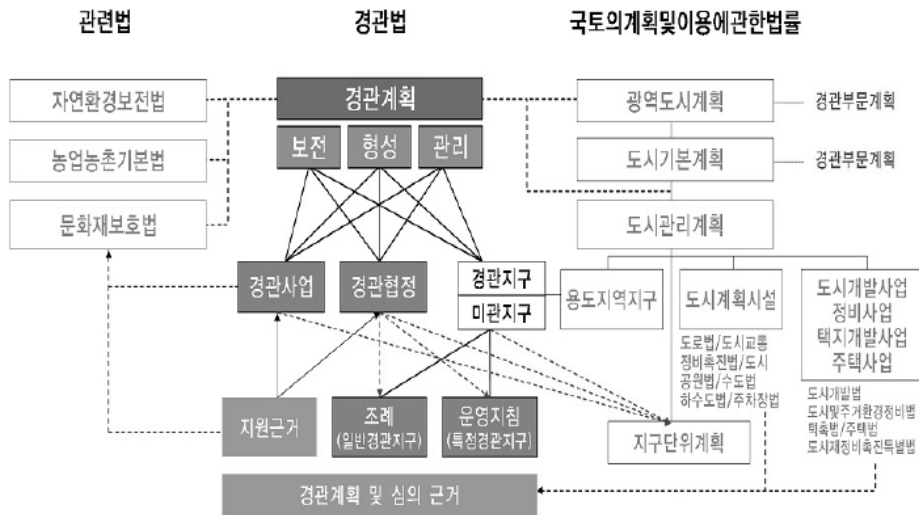
이러한 배경은 국가의 경관관련 법률에서 부분적으로 경관관련 제도를 도입하여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운용되어 종합관리가 곤란한 경관관련 사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을 주요 배경으로 들 수 있다.²⁰⁾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토록 규정하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종전의 경관관리 형태를 유지하게 됨으로써 효율적인 경관관리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²¹⁾

19) 최호운(2008), 전계서, p165.

20) 경관법(안) 심의자료(2006), 전계서,

21) 최호운(2008) 전계서, p167.

〈그림 3-3〉 경관법과 관련법 체계의 관계



자료 : 대한주택공사,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조경학회, 2006

〈표 3-4〉 경관법 구성 내용

구분	조항	조문내용
제1장 총칙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 체계적 경관관리 · 경관자원들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아름다운 국토 및 지역환경 조성(제1조)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의 정의 · 건축물에 대한 정의(제2조)
	경관관리 기본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은 지역의 고유한 자연·역사·문화·생활·경제활동과 긴밀, 지역주민의 합의양호한 경관유지 관리 · 개발행위는 경관 조화·균형 · 경관의 개선·복원·창조 · 자율적 경관행정 운영, 지역주민의 주체적 참여 · 국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향유(제3조)
	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제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관관리·형성 시책강구 및 국민의 이해 노력 · 국민의 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제4조)
	타 법률과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관련 법률과 상호 유기적으로 운용하게 하기 위한 규정(당해 법률 우선 적용)(제5조)
제2장	수립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계획이 수립권자(제6조)

경관 계획		-특별·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
	경관계획 대상	·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제6조 제2호)
	수립의 제안	· 주민(이해관계자)의 참여활성화를 위한 주민제안 제도 · 경관계획의 제안, 제안서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함(제7조)
	계획 내용	· 포함되어야할 내용(제8조) - 경관계획 기본방향 및 목표 - 경관자원 조사 및 평가 - 경관형성 전망 및 대책 수립 - 국제법상의 미관·경관지구 관리 및 운용 - 경관관리 행정체계 및 실천방안 - 경관계획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별 추진 - 그밖에 경관보전·형성에 관한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함) · 경관계획 수립기준(대통령령으로 정함) · 계획의 위계 : 국제법의 도시기본계획내용 부합
	기초조사	·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제9조) -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으로 정함) - 행정기관, 전문기관 조사 자료 활용
	의견청취	· 공청회 및 지방의시 의견청취(제10조) - 경관계획에 필요한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에 관한 규정
	경관계획 의 승인 등	· 경관계획의 승인(제11조) -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경관계획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
제2장 경관 지구	경관·미 관지구 관리	· 경관미관지구의 관리(제12조) - 경관·미관지구를 경관계획에 따라 관리
제3장 경관 사업	경관사업 의 대상 등	· 경관사업의 대상(제13조 제1항) - 가로환경정비의 개선 사업 - 지역녹화와 관련된 사업 -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사업 - 지역 역사·문화적 특성을 살리는 사업 -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 그밖에 경관보전·관리·형성을 위한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사업 · 경관사업 시행 승인 :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 시·도지사, 시장·군수 승인(제13조 제2항) ·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추진협의 체	· 경관사업추진협의체(제14조) - 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 구성, 사업계획의 수립, 경관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단계 참여 - 조직·운영 및 업무(지방자치단체 조례)
	재정지원 및 감독	·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감독(제15조) - 경관사업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 융자지원, 경 관사업자의 감독
	협정체결	· 경관협정의 체결(제16조) · 협정체결자 : 토지소유자 등 전원합의, 효력 : 협정체결 토지소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협정 체결 준수 사항 : 경관법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 국계법의 기반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 제외 · 경관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외장·색채·옥외광고물·공작물 및 건축설비 위치, 건축물·공작물 등의 외부공간 - 토지의 보전 및 이용, 역사·문화경관의 관리·조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협정서의 명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협정 명칭, 대상지역 위치 및 범위, 협정의 목적, 협정 내용 - 협정 체결자, 운영회 명칭 및 주소, 경관협정 유효기간, 경관협정 위반시 제재사항 - 조례로 정하는 사항
경관협정 운영회의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제1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상호간에 운영회를 설립, 자율적 경관협정을 운영 관리 - 운영회 구성 조건과 신고에 관한 내용 대통령령의 규정
경관협정의 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협정의 인가(제1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광역시·시장·군수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가 - 협정인가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 열람
경관협정의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협정의 변경(제19조) - 변경절차 규정
경관협정의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협정의 폐지(제20조) - 폐지절차 규정
경관협정의 준수 및 승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협정의 준수 및 승계(제21조) - 협정준수 의무 등에 관한 규정
경관협정에 관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협정에 관한 지원(제2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정서 작성 등의 자문, 기술, 재정지원 - 사업에 대한 지원내용과 절차를 규정(대통령령으로 규정)
경관위원회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위원회의 설치(제2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광역시·시장·군수 소속하에 경관위원회 설치 - 경관위원회 설치·운영이 어려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한 관련 위원회가 기능 수행 - 공동위원회 운영(대통령령)
경관위원회의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위원회의 기능(제2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경관계획의 승인, 경관사업의 승인, 경관협정의 인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자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경관·미관지구의 관련 운용사항, 경관조례 제정, 경관사업계획 및 운영사항, 경관협의 체결 및 운용 사항, 지방자치단체조례가 정하는 사항
경관위원회의 구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25조)(대통령령)

자료 : 경관법

(2) 경관법의 특성

① 규제보다는 지원 위주의 법 제정

경관법은 기본적으로 규제보다는 지원방안 마련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관관리를 위해서는 규제도 필요하지만, 이와 관련된 규제 수단은 국제법 등 기존 법에서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으므로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바람직하지도 않다. 경관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법적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경관법은 기존 법에 결여되어 있는 유도과 지원수단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에 따라 경관법은 경관보전과 형성을 위한 지자체의 다양한 활동을 뒷받침하는 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즉, 경관법의 일차적인 목표는 법제정 이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던 지방자치단체의 경관계획 수립 및 경관조례 제정에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었으며, 산발적이고 일관성 없는 지자체의 경관관련 계획 및 실행에 체계적인 틀을 마련하고 경관활동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그 초점이 모아져 있다.²²⁾

②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유연성 확보

바람직한 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법은 획일적이고 요식적인 경관계획 수립을 강요하는 굴레가 되지 말아야 하며, 각 지방의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경관계획은 그 계획범위가 일정하지 않고 계획수립의 대상과 목적이 매우 다양하다.

대도시와 중소도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는 각기 다른 경관관리의 필요성과 조건을 가지고 있고, 도시지역, 농촌지역, 도농 통합지역, 국립공원 등 경관계획의 대상도 매우 다양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관할구역 전체를 포괄하는 경관기본계획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기본계획이 없어도 도시내 특정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경관계획만을 수립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도 있다.

경관계획의 이러한 특성을 생각해 볼 때, 경관계획이 강제규정화 되면 지역적 특성에 맞는

22) 이인성 (2006), 경관관련 기존 제도의 문제점과 경관법의 제정 방향, 『도시문제』 41권 454호, pp24-35

자유로운 계획의 수립과 집행이 오히려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광역계획-기본계획-지구 계획과 같이 위계별로 규정화된 경관계획체계를 만드는 것도 자칫 불필요하고 경직된 위계가 강요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그러므로 경관법의 선택적 경관계획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법적 틀을 제공하고 있다.

경관법의 경관계획은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첫째, 강제계획이 아닌 입안권자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고, 둘째, 위계별로 규정화된 체계에 의거한 계획이 아니라, 어떠한 범위와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는 계획이다.

③ 관련법 체계와의 정합성 확보

국계법 등 기존 법에서도 경관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경관법과 이들 관련법이 어떠한 상호관계를 가져야 하는가의 문제는 경관법의 적절한 운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경관계획의 실현을 위해서는 개인 재산권의 제한이 필요한데, 이러한 행위제한은 국계법에 의해 가장 포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경관법에서 별도 행위제한 규정을 둘 경우 기존의 국토계획체계와 이원적 구조를 형성하여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경관법은 강제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경관계획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존의 국토계획 결정절차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운용하도록 만들어졌다.

우리나라의 현행 국토계획체계는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의 위계로 구성되어 있다.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은 수립목적과 대상이 매우 다양할 수 있으므로 광역도시 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각급 계획에 있어서는 부문계획으로 감안될 수도 있고, 경관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는 경우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중간 수준에서 수립될 수도 있다. 경관계획은 보전, 형성, 관리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질 수 있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정지역을 위한 조례, 경관사업, 경관협정 등의 수단이 사용될 수 있으며, 필지별로 보다 상세한 규제와 유도가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 즉, 경관법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국토 및 도시계획 법체계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운용되어야 한다.

(3) 경관법의 한계 및 문제점

① 경관법 구조 및 체계의 문제

경관법으로 경관관리 및 형성과 관련된 사항의 법적 근거는 확보되었으나 경관법은 실천적인 법이라기 보다는 선언적인 기본법으로 자체의 법 틀 속에서 독자적으로 실행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경관법 제정의 취지와 목표에 맞는 경관관리를 도모하는데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경관법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법의 구조 및 체계상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3-5〉 경관법 구성의 문제점 분석

조항	조문내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의 정의 · 건축물에 대한 정의(제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에 대한 정의만 언급 · 경관법에 적용하여 사용할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
경관관리 기본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은 지역의 고유한 자연·역사·문화·생활·경제활동과 긴밀하며, 지역주민의 협의하여 양호한 경관유지·관리 · 개발행위는 경관 조화·균형 · 경관의 개선·복원·창조 · 자율적 경관행정 운영, 지역주민의 주체적 참여 · 국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향유(제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관리, 형성, 복원, 개선, 창조 원칙만 언급 · 양호한 경관유지를 위한 적절한 제한에 관한 기본 이념 포함 필요 · 경관자원을 활용한 관광, 경제활성화 등 포괄적인 기본원칙에 포함 필요
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관관리·형성 시책강구 및 국민의 이해 노력(제4조) ·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제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민의 책문만 언급 · 양호한 경관형성에는 여러 주체가 필요, 전문가, 사업가, 시민단체 등에 대한 책무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타 법률과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관련 법률과 상호 유기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규정(당해 법률 우선 적용)(제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관련 법률 우선 적용 · 법적인 혼선과 법간의 상충 내재 · 타 법률 적용 필요시 관련 규정 및 특례규정을 두어 의제 등의 규정 마련 필요
경관 계획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제6조 제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언급하고 있어 대상지 선정 혼란 예상 · 계획대상 선정 기준설정과 기본방향 제시 필요

경관 계획수 립의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이해관계자)의 참여활성화를 위한 주민제안제도 · 경관계획의 제안, 제안서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함(제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제안자를 주민(이해관계자) 모두 포함 무절제한 제안에 따른 행정력 낭비 및 주민간의 갈등 유발로 실효성 미흡 · 제안자를 토지 및 건물 등 당해 소유자 등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인정된 NPO등 시민단체의 한정적 제안 허용 필요
계획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 포함내용(제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관계획 기본방향 및 목표 -경관자원 조사 및 평가 -경관형성 전망 및 대책 수립 -국계법상의 미관·경관지구 관리 및 운용 -경관관리 행정체계 및 실천방안 -경관계획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별 추진 -그밖에 경관보전·형성(대통령령으로 정함) · 경관계획수립기준(대통령령으로 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의 위계, 국계법의 도시기본계획내용 부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계획의 실천방향은 제시하고 있으나 실행수단(규제 등)에 대한 내용 미흡 · 경관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경관·미관지정에 관한 규정 미흡 · 타법률에서 수립한 계획과의 연계 규정 미흡 · 타 법률에 정한 경관관련 기준·방침등에 대한 적용 규정 미흡 · 계획 실현을 위한 행위제한 등의 규제와 경관관련 상하위계획과 타법률에 의해 수립된 경관관련계획내용, 기본 방침에 대한 조치 규정 필요 (예, 자연환경보전계획, 자연경관영향협의 제도의 기준 등)
기초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관한 규정(제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규정(대통령령으로 정함) -행정기관 전문기관 조사자료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기관, 전문기관 조사자료 활용에 대한 규정은 언급하고 있으나 자료활용 방법(자료의 활용 한계 및 사용의 범위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낮음 · 자료 사용의 한계를 구체화하고 자료 소장처의 자료 공개, 제공의 의무화 규정 도입 필요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관관련 자료 DB구축 의무화 필요
경관 계획의 승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계획의 승인(제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경관계획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승인을 도지사가 결정토록 규정 · 당해 특성을 잘 알고, 해당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위임 필요
경관 미관 지구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미관지구의 관리(제1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관계획에 따라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미관지구를 경관계획에 따라 관리하도록 규정 관리 범위 모호 ·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경관·미관지구 관리와의 관례 모호로 상충시 해결 곤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법(조례)와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 상충방지, 도시계획조례가 정한 규정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 추가로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 필요
경관 대상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사업의 대상(제13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로환경정비 및 개선사업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사업 -지역 역사·문화적 특성을 살리는 사업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개선사업 -그밖에 경관보전·관리·형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사업 · 경관사업시행 승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 시·도지사, 시장·군수 승인(제13조 제2항) ·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사업의 대상한정(가로, 지역녹화, 역사·문화, 농산어촌·자연, 생활환경 개선 등) 등 경관사업 선정기준 미흡 · 경관사업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 다양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므로 지역 특성 및 요소 등 필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되, 유형별 또는 요소별 등의 대상지 선정 기본원칙 및 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 강화
추진 협의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사업 추진협의체(제1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 구성, 사업계획의 수립, 경관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단계적 참여 -조직·운영 및 업무(지방자치단체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체를 주민, 시민단체, 전문가로 한정 구성하여 실효성 미흡 · 경관 중요 요소인 공공시설물을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전기, 통신, 가스, 도로관리청 등) 확대 유기적인 경관 관리 필요
재정 지원 및 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감독(제1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관사업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 융자지원, 경관사업자의 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 등의 지원규정은 있으나 지원범위 및 방법 없음 · 지원범위 및 방법 제시, 지원에 필요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확보 의무 규정 필요
협정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협정의 체결(제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정 체결자 토지소유자 등 전원 합의 -효력 : 협정체결 토지소유자 -경관협정 체결 준수사항 : 기준에 의함 · 경관협정에 포함되어야할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의장·색채·옥외광고물, 공작물 및 건축설비 위치, 건축물·공작물의 외부공간 -토지의 보전 및 이용, 역사·문화경관의 관리·조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협정서 명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관협정 명칭, 대상지역의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정 체결자를 토지 소유자로 한정하므로 공익법인등 협정체결 불가 · 경관협정에 포함되어야할 내용 중 농·산·어촌 경관에 대한 규정이 미흡 · 경관협정 체결 위반에 대한 원상회복 등의 조치 사항 미흡 · 경관협정 체결자 등에 대한 지원 규정 미흡 · 경관협정 체결자 등에 대한 지원 규정 미흡 · 경관협정 체결 대상자를 공익법인 등(토지, 주택공사, 도로공사, 지방단체 등의 투자법인 등) 확대 필요 · 경관협정대상범위도 농·산·어촌 경관요소 포함 필요 · 위반 사항에 대한 원상회복 등의 조치에

	및 범위, 협정의목적, 협정내용, 협정 체결자, 운영회 명칭 및 주 소, 경관협정 유효기간, 경관협 정 위반시 제재사항 - 조례로 정하는 사항	관한 강제 규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지원 규정 필요
경관 협정 운영 회의 설립	·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제17조) -주민상호간에 운영회를 설립, 자 율적 경관협정을 운영 관리 -운영회 구성 조건과 신고에 관한 내용 대통령령의 규정	·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지원제도가 없음 · 행정 및 전문가 지원, 운영에 필요한 보조 금 지원 등 지원제도 필요
경관 협정의 인가	· 경관협정의 인가(제18조) -특별·광역시·도지사·시장·군수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가 -협정인가 한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 열람	· 경관위원회 작성기준 및 방법, 경관위원회 심의기준이 없음 · 경관협정 인가서 작성 기준 및 방법, 인가 절차, 경관위원회 심의기준 마련규정 정의 필요

자료 : 경관법(2008.3.21 법률제8941호)에서 정리

② 실행수단 미비

경관법에 대한 비판 중 하나는 자체적인 실행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즉 규제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강제 이행하기 위한 수단이 경관법에 갖추어져 있지 않다. 경관법을 운용하는 실무부서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완결된 법으로서 강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경관법의 한계로 인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앞서 언급한 경관법의 제정방향, 즉 중복 규제를 최소화하고 지원 및 유도 중심의 법을 제정하겠다는 법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한 결과이다. 경관법에서는 중복규제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별도의 강제규정을 가지지 않고, 규제가 필요한 경우 국제법 등 관련법의 규정을 연계운용하도록 만들어져 있다.²³⁾

그러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경관법을 다루는 부서와 기타 관련법을 다루는 부서가 구분되어 있고, 부서간의 협의 및 공동작업이 쉽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행정일선에서 이러한 법의 취지를 살리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경관법에 자체적인 강제이

23) 경관계획과 국제법의 지구단위계획의 연계운용에 관해서는 한국도시설계학회(2009), 지구단위계획의 활용-도시디자인 및 개발사업에의 적용 참조

행 규정을 만들면 기존 법에 의한 규제와 중복되고 상치될 수 있어서 법 체계 전반에 혼란을 가져올 위험이 매우 크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경관법의 문제라기보다는 현재 수직분할되어 있는 일선 행정체계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경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선 행정의 체계가 개선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당장 개선되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경관법뿐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행정의 수직분할 및 할거체계는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이 문제는 앞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더라도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경관법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관법 자체의 강제규정을 갖추는 것보다 행정부서간의 수평적 연계를 촉진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며, 이는 행정전반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③ 자율성과 위임조항 미비

경관법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경관행정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경관을 다루는 스케일은 매우 큰 범위에서 작은 범위까지 다양할 수 있지만, 경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지방의 특성에 맞는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가장 크다. 그러므로 경관법에서도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경관관리를 최대한 권장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경관관리를 기초지자체에 전적으로 맡기기에는 여러 가지 우려가 따른다. 기초지자체는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만나는 위치에 있으므로 주민들의 민원에 취약하다. 따라서 경관보존을 위해 강제적인 규제가 필요한 경우 이에 따르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약과 불이익에 기초지자체가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기초지자체에 경관관리를 전적으로 위임할 경우 중요한 경관자원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

이러한 이유로 현행 경관법에서는 경관 계획과 실행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결정권은 광역지자체에 주어져 있다. 이러한 결정체계는 강제적인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이지만, 기초지자체의 자율성을 가로막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가 보다 정착되고 성숙되어 지방자치권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이 균형을 이룰 때 기초지자체로 결정권을 대폭 이양하여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와 더불어 경관과 관련된 결정권을 구분하여 상급단체와 기초지자체에 분담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기초지자체에 전적으로 맡기기 어려운 매우 중요한 경관자원의 보존에 대한 결정권은 상급 기관에 남겨두되, 기타 경관 형성과 관리에 관한 대부분의 결정권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경우 결정권의 분담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또한 상하급 기관 사이에 상충된 결정이 내려지거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3) 공공디자인

공공디자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작·설치·운영·관리하는 것으로서 국민이 사용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공간, 시설, 용품, 정보 등의 심미적, 상징적, 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창조적 행위를 말한다.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개념으로는 공공, 공공영역, 디자인 외에도, 공공재, 공공시설, 공물, 공용물, 공공용물, 공공경비, 자연공물/인공공물, 공용재산, 행정재산, 잡종재산, 물건, 원물, 집합물, 영조물, 영조물 법인, 공공단체 등이 있다.

(1) 공공디자인의 영역

‘공공디자인’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작·설치·운영·관리하는 것으로서 국민이 사용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공간, 시설, 용품, 정보 등의 심미적, 상징적, 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창조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물리적인 공공공간 뿐 아니라 비가시적 영역을 모두 포함한 공공영역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이러한 공공디자인의 모든 영역이 정책 대상이 될 수는 없으므로, 정책 대상으로서의 한정 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적 차원이 공공디자인과 지역적 차원의 공공디자인의 구분도 수반되어야 한다.

공공 디자인의 광역적 영역 및 범주는 Ground에 도로와 같이 부착되거나 각종 시설물이 설치되는 것, 기차나 지하철과 같은 시설의 통행의, 조명의 비춤, 소리의 울림 등의 형태를 가지고 Figure로 작용하는 것을 말한다.

〈표 3-6〉 공공디자인협회에서 정의한 공공디자인의 범주와 영역

구분			세 부 내 용	관 련 영 역
공공공간 디자인 (Public Space Design)	도시 환경	야외공공공간 계 (open space)	공원, 운동장, 묘지, 공공기관 부속용지, 광장, 놀이터, 집회시설, 보도, 쌈지공원 (pocket park) 혹은 기타 유사 기능의 공간디자인	공간디자인, 공간연출 실내환경디자인, 실내건축 환경디자인 색채디자인 조경설계, 조경디자인 건축공학, 건축설계 도시설계, 도시계획, 도시공학환경공학, 토목공학, 교통공학 문화재 관리, 보존과학 사회복지학 등
		기반시설공간 계	도로, 주차장, 터널, 철로, 고가도로, 교량, 관개/배수시설, 상하수도시설, 하수처리장, 발전소 혹은 기타 유사 기능의 공간디자인	
	공공 건축 및 실내 환경	행정공간계	공공안내소, 마을회관,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전화국, 동사무소, 군사공간, 교도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사, 정부 행정부처 건물, 외국공관 건축물 혹은 기타 유사 기능의 공간디자인	
		문화/ 복지공간계	시민회관, 문화재, 체육관, 경기장, 공연장, 국공립 복지시설, 국공립 의료시설, 보육원, 기념관, 박물관, 미술관, 휴게소 혹은 기타 유사 기능의 공간디자인	
		역사시설공간 계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지하철역, 공항, 항만, 고속도로 휴게실 혹은 기타 유사 기능의 공간디자인	
		교육/ 연구공간계	국공립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유아원, 교육원, 훈련원, 연구소, 도서관, 연수원 혹은 기타 유사 기능의 공간디자인	
공공 시설물 디자인 (Public Facility and Product Design)	교통 시설	보행시설물계	보행 신호등, 휨스(Fence), 볼라드(bollard), 가드레일(guardrail), 가로표식, 에스컬레이터, 정류장, 자전거 주차대, 육교, 지하도, 보행 유도등 등과 같은 시설물의 디자인	제품디자인 산업디자인, 공업디자인 운송기기디자인 가구디자인 공예, 조소, 조각 환경디자인 패션디자인, 의상디자인 복식디자인 교통공학, 인간공학, 산업공학 등
		운송시설물계	신호등, 교통차단물, 속도억제물, 주차시설, 주차요금징수기(parking meter), 공공기관 소유 차량 등과 같은 시설물의 디자인	
	편의 시설	휴게시설물계	벤치, 의자, 쉼터(shelter), 옥외용 테이블 등과 같은 시설물의 디자인	
		위생시설물계	휴지통, 음수대, 재떨이, 화장실, 세면장 등과 같은 시설물의 디자인	
		판매시설물계	매점, 무인 키오스크(kiosk), 자동판매기, 신문가판대 등과 같은 시설물의 디자인	
	공급 시설	관리시설물계	맨홀, 전신주, 보행등, 신호개폐기, 전력구, 분전반, 환기구, 우체통, 소화전, 방재시설, 범죄예방장치, 신원확인장치 등과 같은 시설물의 디자인	
		정보시설물계	공중전화, 풍향계, 시계, 온습도계, 인포부	

			스(info booth), 관광안내시설, 지역 안내도, 교통정보판 등과 같은 시설물의 디자인	
		행정시설물계	각종 집기와 도구, 제복, 가구, 문구, 표찰, 무인 민원처리기 등과 같은 시설물의 디자인	
공공매체 디자인 (Public Communication Design)	정보매체	지시/유도기능매체계	이정표, 교통표지판, 지역/관광 안내도, 버스노선도, 지하철노선도, 방향유도사인, 규제사인, 자동차 번호판, 각종 픽토그램 등과 같은 시각매체의 디자인	시각디자인, 그래픽디자인, 광고디자인, 포장디자인, 커뮤니케이션디자인, 영상디자인, 멀티미디어, 인터랙션디자인, 조명디자인, 색채디자인, 전자공학, 정보통신공학 등
		광고기능매체계	광고판, 현수막, 포스터, 게시판, 간판, 배너(banner), 기(flag), 홍보영상 등과 같은 시각매체의 디자인	
	상징매체	행정기능매체계	국가상징사인, 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사인, 국가기관 상징사인, 각종 증명서, 공문서 서식, 각종 출판물 표지, 각 기관 웹 페이지 등과 같은 시각매체의 디자인	
		유통기능매체계	화폐, 여권, 교통카드, 채권, 기념주화, 우표 등과 같은 시각매체의 디자인	
		환경연출매체계	벽화(mural painting), 슈퍼그래픽(super graphic), 미디어 아트(media art), 오감연출매체(sound scape, light scape) 등과 같은 시각매체의 디자인	
공공디자인 정책 (Public Design Policy)	행정 및 정책계		문화진흥정책, 산업정책, 보건복지정책, 환경/자원정책, 기술정책, 문화행정, 지역개발, 관광자원개발, 이벤트 산업, 국민건강진흥, 스포츠복지, 예술정책 등 공공디자인을 진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정책학, 문화학, 행정학, 도시공학, 조경학, 보건학, 지역개발, 관광학, 신문방송학, 국제학, 법학, 교통공학 등
	관련법규계		경관법, 도로교통법, 건축법, 의장법, 산업디자인 관련법, 산업재산권법, 보건복지법, 문화재보호법, 교통안전법, 행정법 등과 같은 공공디자인을 진흥할 수 있는 법의 연구	

(3) 공공디자인 관련 법률과 한계점

공공디자인은 공공 공간, 시설, 용품, 정보 등 넓은 영역에 걸쳐서 분포하므로 각각 다양한 법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각 항목마다 적용 사항이 달라 그 제작·설치·운영·관리가 어려우며, 공공디자인의 중요한 의미가 되는 심미적, 상징적, 기능적 가치에 대해서는 제작·설치·운영·관리의 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또한 각 항목마다 제작·설치·운영·관

리의 주체가 달라 동일공간에 대해서도 여러 주체가 함께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공공디자인이라는 개념이 공공이 주도하여 행위의 산물로 발생하는 피상적인 객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과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디자인의 대상과 관련된 관련 법률과 관련하여 그 한계점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표 3-7〉 공공디자인 대상별 관련법률 및 한계점

분류	세부내용	관련법률	한계점
대중공간 디자인	야외 공간	국토 개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자연공원법,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건축법, 도시 개발법, 주차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도시 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 규모, 위치에 대한 규정만 있으며, 도입시설에 대해서도 정의와 수량에 대한 규정 - 심미성, 기능성, 상징성 등 디자인 요소에 대한 항목이 전무 - 동일공간에 조성시, 시설 각 항목별로 주체가 달라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행정 공간		
	공원, 운동장, 묘지, 공공기관 부속용지, 광장, 놀이터, 보도, 주차장		
	문화/복지 공간	건축법,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용도변경, 조경,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만 있음 - 행정공간의 기능성, 상징성, 심미성 등 디자인 요소에 대한 항목이 전무함
역사 시설 공간	공공안내소, 마을회관,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전화국, 동사무소, 군사 공간, 교도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사, 정부 행정부처 건물, 외국공관 건축물	건축법, 관광 기본법, 관광 진흥법, 문화 산업 진흥 기본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재 보호법, 문화 예술 진흥법, 도시 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건설 산업 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공간 및 시설의 정의, 건축물의 용도변경, 조경,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만 있음 - 문화/복지공간의 기능성, 상징성, 심미성 등 디자인 요소에 대한 항목이 전무함
	시민회관, 역사 공간, 체육관, 경기장, 공연장, 국공립 복지시설, 국공립 의료시설, 보육원, 기념관, 박물관, 미술관, 휴게소		
역사 시설 공간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지하철역, 공항, 항만, 고속도로 휴게실, 버스정류장, 택시 정류장	건축법, 수도권 신공항 건설 촉진법, 여객 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 기준에 관한 규칙, 신항만 건설 촉진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건축물의 용도 변경, 조경기준, 시설 기준에 대한 항목 있음 - 각 항목별 제작·설치·운영·관리 주체가 달라 효율성 확보가 어려우며, 디자인 요소에 대한 항목 없음

	교육 연구 공간	국공립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유아원, 교육원, 훈련원, 연구소, 도서관, 연수원 혹은 기타 유사 기능의 공간디자인	건축법, 도시 재정비 촉진 을 위한 특별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용도 변경, 조경기준에 대한 항목있음 - 교육/연구 공간의 기능성, 상징성, 심미성 등 디자인 요소에 대한 항목이 전무함
공공 시설 디 자 인	교통 시설	도로, 터널, 철로, 고가도로, 교량, 보행 신호등, 펜스(Fence), 볼라드(bollard), 가드레일(guardrail), 가로표식, 에스컬레이터, 정류장, 자전거 주차대, 육교, 지하도, 보행 유도등, 시각 장애인 유도 블록, 신호등, 교통차단물, 속도 억제물, 주차시설, 주차요금징수기(parking meter), 톨게이트, 공공기관 소유 차량	도로 교통법, 도로법, 고 속국도법, 도시 철도법, 건널목 개량 촉진법, 유료 도로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 률, 지하 공공 보도 시설 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 준에 관한 규칙, 도시 교 통 정비 촉진법, 교통 약 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자전거 이용 시설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 한 법률, 농어촌 도로 정 비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시설의 정의, 분류,구 조, 시설의 기준에 대한 항목 있음 - 동일공간에 조성되었을 경우에도, 시설 각 항목 별로 주체가 달라 효율성 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심미성, 기능성, 상징성 등 디자인적 요소에 대한 기준이 없음
	편의 시설	벤치, 의자, 쉼터(shelter), 옥외용 테이블, 휴지통, 음수대, 재떨이, 화장실, 세면장, 매점, 플랜터, 트렌치, 무인 키오스크(kiosk), 자동판매기, 신문가판대	자연공원법,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공 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산업 표준화 법, 산업디자 인 진흥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시설의 정의, 및 j 범 위, 설치 기준 및 관리에 대한 항목 있음 - 동일공간에 조성되었을 경우에도, 시설 각 항목 별로 주체가 달라 효율성 확보가 어려우며, 심미 성, 기능성, 상징성 등 디자인적 요소에 대한 기 준이 없음
	공급 시설	하수처리장, 관개/배수시설, 상하수도시설, 맨홀, 발전소, 전신주, 보행등, 신호개폐기, 전력구, 분전반, 환기구, 우체통, 소화전, 방재시설, 범죄예방장치, 신원 확인 장치, 공중전화, 풍향계, 시계, 운습도계, 인포부스(info booth), 관광안내시설, 지역 안내도, 교통 정보관, , 무인 민원처리기 등과 같은 시설물의 디자인	공중전화소 시설 및 표지 에 관한 규정, 건설 산업 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산업디자인 진흥 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 설치, 시설물의 항 목 등에 대한 기준만 있 으며, 심미성, 기능성, 상징성 등 디자인적 요소 에 대한 기준이 없음
공공용품 디자인		각종 집기와 도구, 제복, 가구, 문구	법정 경위 및 방호원의 제 복에 관한 규칙, 산업 표 준화 법, 산업디자인 진흥 법, 물품 관리법, 여권 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종류 및 형상에 대 한 기준이 있으나 심미 성, 기능성, 상징성 등 디자인적 요소에 대한 기

				금 여자 공무원 복제, 소 방 공무원 복제 규칙 등	준이 없음
공공정보디자인	지시 유도	이정표, 교통표지판, 지역/관광 안내도, 버스노선도, 지하철노선도 방향유도사인 , 규제사인, 자동차 번호판, 각종 픽토그램, 신호체계	벽화(mural painting), 수퍼그래픽(super graphic), 미디어 아트(media art) 등과 같은 시각매체의 디자인	문화 산업 진흥 기본법, 도로 표지 규칙, 자동차 관리법,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산업디자인 진흥 법, 국어 기본법, 공공 기 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표시의 경우 표지판, 글자 및 지주의 규격, 색 체에 대한 규정이 있음 - 옥외광고물의 경우, 분류와 일반적 표시방법에 대한 규정 있음 - 그 외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제작·설치·운영·관리 주체에 의해 임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 심미성, 기능성, 상징성 등 디자인적 요소에 대한 기준이 없음
	광고 홍보	광고판, 현수막, 포스터, 게시판, 간판, 배너(banne r), 기(flag), 홍보영상, 전광판			
	행정	각종 증명서, 공문서 서식, 각종 출판물 표지, 각 기관 웹 페이지, 표찰, 각종 신분증, 화폐, 여권, 교통카드, 채권, 기념주화, 우표			
	상징	국가상징사인, 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사인, 국가기관 상징사인		상표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상표의 종류 및 정의가 있음 - 상표와 관련된 디자인 서식 및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공공환경 매체디자인		오감 연출 매체, 야간 조명 계획, 음향 연출 계획 (소리, 빛, 냄새 같은 무형의 공공 환경 매체)			

자료 : 문화관광부, 공공디자인 진흥법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 2006, 재정리

4) 검토종합

건축디자인과 관련하여 관련법 및 제도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관련 법 및 제도상 그 목적에 있어서는 디자인적인 질적 성숙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이러한 것은 총론적은 사항으로서 21세기를 맞이하여 무미건조한 환경에 대한 반론으로부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는 공통된 점이다.

둘째, 그 적용범위에 있어서 법 및 제도의 특성에 따라 그 적용범위가 상이하다.

건축기본법은 생활환경 전반에 대하여 개별 영역을 정의하고 있는 반면, 경관법 해당 지역 전체나 일부분으로 정의하고 있고, 공공디자인은 개별사업위주로 한정된다.

건축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디자인 기준을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모든 사업 및 민간영역의 사업까지 영역으로 삼고 있다. 즉, 장소기반의 지역성과 유연성을 담보한 체계라고 할 수 있다.

경관법은 법에서는 경관계획의 대상이 지방자치단체의 전부나 일부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중점적으로 경관관리를 추진코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경관지구나 미관지구로 지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제한을 받는다.

공공디자인은 개별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의 결과에 대한 디자인적 접근을 추구하다보니 각 항목마다 적용사항이 달라 그 제작·설치·운영·관리가 어려우며,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못해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셋째, 관련 법 및 제도의 특성상 주요 적용대상이 상이하다. 이것은 디자인 관련 대상에 대한 위상과 관련된 것으로, 건축기본법은 건축디자인 기준에 대한 원칙을 정하고, 관련계획과의 제도를 연계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획, 계획·설계, 시공, 사용에 이르는 전반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반면, 경관법과 공공디자인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즉, 현재까지의 법률이 건조행위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물에 대한 방향을 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수립하여 적용하였다고 하면, 건축기본법은 그 행위 자체를 관리함으로써 근본적인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이다.

2. 선진 건축디자인 관련 정책 및 제도

1) 영국의 건축정책 사례

영국은 지난 반세기 이후 최대규모의 공공건축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와 관련하여 CABE(건축·건조환경위원회 Commission for Architecture and the Built Environment)를 중심으로 영국의 공공건축정책이 수행되고 있다. CABE는 건축과 도시계획, 공공 공간에 대한 정부의 조언자 역할을 맡은 기구이며, 건축가, 계획가, 디자이너, 개발자, 건축주와 직접 협력하면서 프로젝트에 대한 길잡이의 역할을 함. 공원과 오픈스페이스 등 공공공간에 중점을 둔다.

(1) CABE (건축·건조환경위원회)

CABE는 건축주가 요구하는 공간에 대해 보다 더 나은 디자인을 통해 더 나은 가치를 얻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하며, 사업 초기부터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고 최선의 방식을 취할 수 있도록 고무한다. 디자인 평가를 통해 건축주에게 하지 말 것과 할 수 있는 기회에 관해 권고한다. 기본적으로 CABE는 공공의 편에 있으며, 공공이 건물과 공간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요청하도록 고무한다.

CABE는 1999년에 설립되었고 이제는 법적기구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문화·미디어·체육부(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와 커뮤니티·지방정부부서(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2) CABE의 업무

CABE는 정책입안자들을 지원하여 그들의 기획을 도우며, 세부활동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축주, 건축가, 계획가들에 대한 조언 - 공간과 건물에 대한 중요한 제안들에 대한 디자인 검토하고, 둘째, 우수디자인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조언 - 신축건물, 마스터플랜, 도시구상이나 녹지공간조성계획 등과 관련된 공공기관에 무상으로 조언한다. 셋째, 공공기관 내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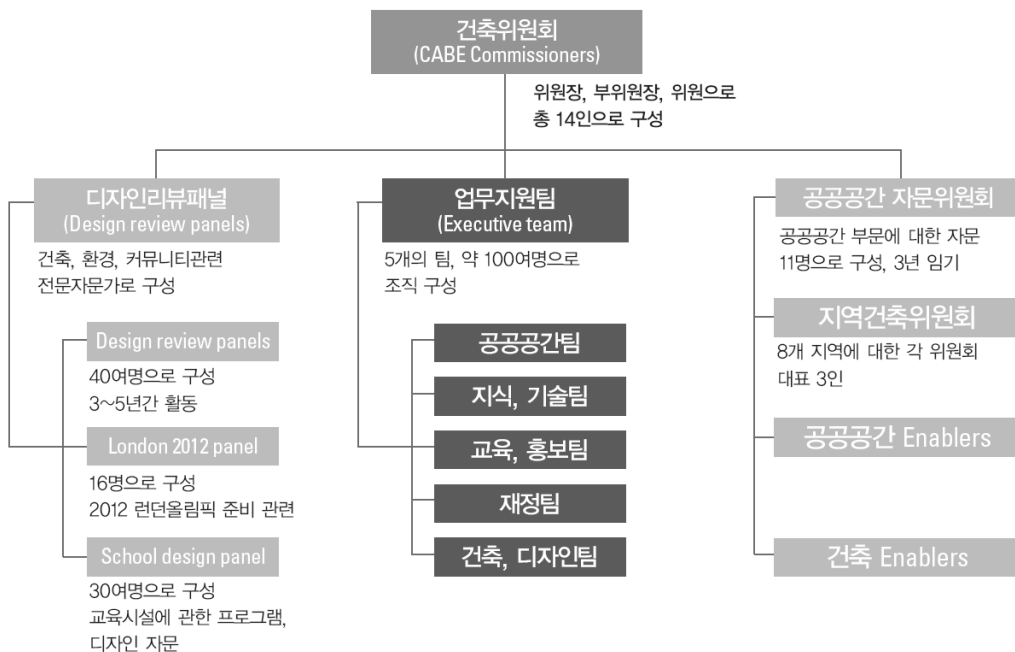
서 전문 지식과 디자인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넷째, 건조 환경을 위한 더 나은 교육, 기술, 경험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공공 공간의 디자인에 대한 연구와 홍보활동 전개 - 일반인들에게 더 높은 공공 디자인 의식 고취한다.

(3) CAFE의 조직 및 역할

약 350명의 인원을 갖춘 CAFE는 상임운영위원회와 위원 16명에 의해 주도된다. 또한, 건축가와 관련기술자, 계획가, 환경전문가, 학자 등을 포함한 자문단과 실무팀으로 구성된다.

런던에 본사를 두고 100여명의 실무직원이 있으며, 영국 전역에 걸쳐 전문가집단으로서 지역 대표가 활동하는 네트워크가 조직되어 있다.

〈그림 3-4〉 CAFE의 조직체계



자료 : 영국의 공공건축 디자인 관리정책, Auri Brief, 2009. 7. 20

위원회는 Desing Review를 통해 국가적인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고, 공공기관에서 심의를 담당하는 주요 건축·도시계획사업 등에 대해 직접적인 권고를 함으로써 디자인 개선 유도과 자체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디자인 기술을 지원한다. 더불어서 교육여건개선과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건축과 디자인, 공공공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캠페인을 통해 공공분야의 수준향상을 도모한다.

우리나라의 전문가 그룹과도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자문단을 구성운영하는데 약 200여명의 분야별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여기에 참여하는 자문단은 건축가, 도시계획 및 설계, 조경, 프로젝트 관리자, 엔지니어 등 매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해당 전문가는 사회 환원적 측면에서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문위원의 임명은 공개경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4) CABE의 투자부문

CABE는 공공공간과 도시계획, 건축에서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부문에서 공적자본을 사용한다.

우선, 관련 단체와의 공동기금이다. 삶을 위한 건축(Building for Life) 상 - CABE와 Home Builder Federation 은 새로운 주거 건축과 디자인에서 좋은 성과가 도출되도록 협력하며, 매년, Building for Life 상은 산업기준을 만족하는 집합주택 계획에 시상한다.

영국의 건조환경에 예술가를 참여시키는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이것은 국가 자본에 의해 운영되는 새로운 기금으로서 공공 공간에 대한 참신한 계획과 더 나은 도시 계획을 위한 생각을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CABE와 A&B(Arts& Business)에 의해 지원되며, 영국과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지역에서의 예술, 문화, 디자인, 교육, 환경, 의료복지, 주거부문을 포괄한다.

다양한 형태의 공모전과 시상을 시행하는 바, 더 나은 공공건물(Better Public Building)상은 공공 디자인 질에서의 우수성과 정부조달 수행력에서의 우수성을 획득한 건물을 시상하기 위한 것이다. 유로판(Europan)은 격년제로 열리는 젊은 건축가들을 위한 주거공모전임. 혁신적인 집합주거 아이디어에 대한 시상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의 건축·건조환경을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9개의 건축·건조환경센터 (Architecture and Built Environment Centres)를 운영한다. 이 단체는 영국 인구의 약 4분의 1 규모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지역기금 프로그램 (Regional Funding Programme)을 운영한다. 이 기금은 건조 환경의 디자인의 품질향상과 관련된 주제 속에서 대중과 젊은이를 계몽하고 환경에 대한 공공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함이며, 영국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건축·건조환경센터를 지원한다.

(5) 디자인의 지속적 관리 제도

영국은 CABE는 디자인 관리를 위해서 CABE의 각 주체별로 디자인을 개선권고와 더불어 디자인의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우선 건축 위원회 산하 디자인 리뷰패널을 두고, 여기서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분야별로 디자인 정책을 전문가가 참여하여 활동한다.²⁴⁾

Review제도는 Desing Enabling을 통해 디자인 절차와 방법론을 컨설팅하고, 계획단계부터 구체적인 디자인 개선을 권고한다. 현재 약 400건을 선별하여 디자인 리뷰를 진행하고 있는데, 공공의 프로젝트는 전체 프로젝트의 3%에 해당되어, 민간 영역 디자인 리뷰제도의 참여가 활성화 되어 있다. 민간프로젝트의 경우는 민간이 신청시 심사를 거쳐 디자인 리뷰를 진행한다. 디자인 리뷰를 진행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프레젠테이션, 내부패널, 데스크탑 리뷰로 구분되어 적시적인 리뷰를 진행하고 있다. 진행방식에 있어서도 일방적인 권고가 아닌 토론과 의견취합을 병행하여 디자인의 질적 성숙을 지향하고 있다.

영국의 디자인 관리제도의 큰 특징중의 하나가 DQI(Design Quility Indicator)이다. DQI는 건설산업위원회 주관으로 공공건축에 대한 디자인 품질 향상과 지속적으로 관리도구를 확보하기 위해 개발을 추진한 것으로 공공 또는 민간 발주자, 개발업자, 재무관리자, 건축사, 건설

24) 현재는 국가디자인리뷰패널, 런던2012패널, 학교디자인패널, 크로스레일디자인패널 등 4개 패널이 활동 중이다.

회사. 등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사용하는 도구로서 개발되었다.

DQI는 크게 기획단계에서 사용하는 Briefing Tool과 설계단계 이후에 사용하는 Assessment tool로 구분된다. Briefing tool은 프로젝트의 평가지표를 선정하기 위해 활용되고, Assessment tool은 단계별로 In-use, Mid Design, Ready Occupation 버전으로 나뉘고 각 단계별 워크숍을 통해 디자인 품질지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DQI 질문지는 안전성, 유용성, 심미성의 10가지 질문 유형별로 짧고 간단하게 구성되며, 중요도는 목표치에 따라 “Fundamental”, “Added value”, “Excellence”의 3단계로 구분된다.

2) 네덜란드의 건축정책

(1) 개요

네덜란드 정부는 1991년부터 지금까지 세 개의 건축정책문서를 작성하여 시행하였다. 이 정책의 수립에는, 주택공간계획환경부(VROM), 교육문화과학부(OCW), 농업자연식품부(LNV), 교통공공시설수자원관리부(VenW)와 경제부(EZ) 등의 정부관련부처가 공동으로 관여하였다.

네덜란드 정부는 건축정책을 통해 공간의 품격·품질을 유지·향상하기 위한 여러 과정을 연계하려고 하며, 특히 문화정책문서에 근간을 둔 문화정책을 건축정책과 연계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국가건축가를 통하여 국가건축정책 및 공공프로젝트 발주에 참여하도록 하고(2000년), 건축센터를 설립하여 이를 통해 지속적인 건축교육과 건축정책에 관한 선도적인 작업을 지원한다. 건축문화 연구를 위한 공공기관(건축지원재단, 베를라헤 재단 등)도 설립하였다.

(2) 국가건축가

국가건축가는 교육문화과학부 장관에게 건축 정책의 작성과 시행에 관한 제언을 하고, 그 정책에 합당한 방향에 따라 국가건축가는 주택공간계획환경부(VROM)와 다른 부처에도 건축, 도시와 농촌 계획, 기반시설, 조경 개발 등의 전략적 개발에 관한 자문을 한다. 또한 법률 제정, 규제, 교육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도 업무에 포함한다.

국가건축가는 외무부(BUZA), 교육문화과학부(OCW), 국방부, 교통공공시설수자원관리부(VenW) 등 건설과 건설 재정에 관계된 부처의 요청에 따라 설계방향에 대한 조언을 하고 건축가를 추천하기도 한다.

(3) 관련기구

건축 및 문화유산 관련 기구들은 중앙정부의 정책 작성과 시행을 지원한다. 이러한 적극적인 참여는 국가 및 지방 정부의 정책 작성자와 공무원, 도시 및 농촌 계획가, 개발업자와 건설업자, 건축디자인, 문화·역사 관련 전문가 커뮤니티 그리고 일반 대중 사이에 새로운 지식을 발굴하고 전파하고 공유하는데 있어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각 행정구역과 지자체에 지식 센터와 기구의 네트워크가 있다. 이러한 지식센터와 기구에는 ‘네덜란드건축가협회(NAi)’, ‘네덜란드건축지원기금(SfA)’, ‘건축지역센터(Architecture Local)’, ‘베를라헤건축학교(Berlage Institute)’, 유로판 네덜란드(Europan), 네덜란드 시각예술·디자인·건축재단(Fonds BKVB), Archprix, ArchiNed, BONAS, 국가기념비 자문기구(NCM), 네덜란드 고고학 카운슬(SNA), 지역 고고학자 협회(CGA), 기념비·고고학 지역기구(SPN) 등이 있다.

(4) 건축정책 재정

네덜란드정부가 건축정책과 벨베데어정책(문화정책)에 투입하는 재정투자는 건축기구 및 벨베데어프로그램에 대한 일반재정과 프로그램활동에 대한 특별사업예산으로 구성된다. 일반 재정 규모만 해도 인구 1인당 (네덜란드 인구 1600만명) 1유로에 달한다.

〈표 3-8〉 네덜란드 건축정책 재정

구분		주요내용
일반 재정	건축기구 지원	VROM(주택공간계획환경부)와 OCW(교육문화과학부)는 건축기구에 매년 1,050만 유로를 지급하여 건축지원계획을 실행. - 450만 유로: 네덜란드건축협회에 배정. - 330만 유로: 네덜란드건축재정에 배정.
특별 사업 예산	벨베데어 프로그램 지원	1. VROM, LNV(농업자연식품부), OCW는 2000년에서 2009년까지 10년 간 벨베데어정책을 위한 재정을 연간740만 유로의 예산으로 책정. - 설비비 및 벨베데어 프로젝트청 활동비, 보조금(연간 140만 유로), 농촌개발시 문화요소 투자비(2005, 2006년에 225만 유로)에 배정됨. 2. VROM과 OCW는 2005년에서 2009년까지 도시재개발 시 문화요소 투자 재정(ISV)에 매년 400만 유로 지급.
	프로그램 활동	실천프로그램상의 시범사업과 기타 특별활동에 대해서는 관련 일곱 정부부처가 재정 지원. ‘공간계획 및 문화 실천프로그램’용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더 큰 사업의 예산으로부터 재정을 지원 받음.

주) 공간문화 실천방안 2005-2008 보고서, 재정리

3) 일본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1) 추진배경 및 목적

구마모토의 아트폴리스 프로젝트는 호소카와가 지사로 재직할 당시, 특색없고 허술한 건축물과 도시구조물들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바탕으로 일본 도시의 미관을 고쳐보려는 취지 하에서 시작된 도시정책이다.

호소카와 지사는 1987년 베를린 국제건축전에 의한 도시개발 및 개조계획 현장을 둘러보고 유사한 유형의 사업을 구상하다가, 1988년 각종 도시건축물들을 오래도록 사랑받을 수 있는 것으로 만들자며,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일명 KAP(Kumamoto Artpolis Project) 도시미화정책을 수립하였다. 구체적으로 ‘풍요로움이 가득찬 생활창조 구마모토’라는 주제 아래에 주민들의 다양하고 자유로운 가치추구에 대응하고, 21세기를 준비하는 자리로서 구마모토 아트폴리스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구마모토 아트폴리스의 목적은

첫째, 대내적으로 주민들에게 자신들이 거주하는 주택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변과 동네를 중요시한다는 측면에서 환경디자인 및 도시설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나아가서 지방의 주체성과 창의를 살리며, 양질의 생활환경 창조와 지역문화의 향상을 도모하며, 그 결과로서 지역활성화에 공헌한다.

둘째, 대외적으로는 구마모토를 세계적인 건축문화 및 생활문화의 도시로 부각시키는데 있다.

이상을 포함하는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품격의 건축물을 만듦으로써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지역 고유의 문화유산을 창조·재생하고, 건축문화의 향상을 통해 도시·지역문화의 향상을 도모하며, 이러한 바탕 위에 세계로 향한 정보발신기지 구마모토를 지향하는데 있다.

(2) 구마모토 아트폴리스의 전략²⁵⁾

아트폴리스 프로젝트는 구마모토현 전체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독특한 문화 유산을 배경으로 하며, 도시지역은 물론이고 소규모 산촌지역사회까지를 포함하는 광역적인 사업이다.

모든 프로젝트는 주변 환경과 문화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 자연지역에서는 환경적인 감각을 높이거나 풍부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시되고, 도시지역에서는 경제적 효율성만을 고려하기보다는 혁신적인 디자인이 강조된다. 궁극적으로 모든 아트폴리스 프로젝트는 그 지역의 독특한 특징을 부각함으로써 지방문화를 활성화하려는 목적 하에서 유도된다. 이는 한마디로 건축 및 도시(환경) 디자인에 의한 지역활성화의 도모라 말할 수 있다.

또한, 문화전략으로서 도시·건축 디자인을 추구하였다.

건축의 문화적·공공적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어 왔으며, 특히 주변 지역사회의 환경과 문화에 대한 기여를 극대화 하고자 하였다.

모든 계획 과정에서 이용자와 지역주민에 대해 아트폴리스 프로젝트의 가치를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병행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새로운 가치에 의해 기존의 환경과 문화를 재평가하는 계기를 만들어 가고자 하였다.

그 결과, 지금까지 만들어진 구마모토 아트폴리스는 그 주변의 환경과 기존건축물에 대해 크게 영향을 미쳐왔다. 몇몇 지역사회에서는 전통예술이 되살아나고 문화운동이 시작되기도

25) 김정연(2002), 구마모토의 아트폴리스 프로젝트 및 경관행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충남발전연구원, p22-28.

하였으며, 파노라믹한 개발 프로젝트의 핵심이 된 경우도 있다.

이상과 같이, 구마모토 아트폴리스는 그 효과가 점(點)→선(線)→면(面)으로 확대되는 파문 효과(波紋效果, rippling effect)를 추구하며, 특히 문화적 측면을 중시하고 있는 만큼 이를 문화적 도시화(cultural urbanization)라고도 한다. 이를 위해, 강행규정을 두지 않고 예술적 효과를 낳는 우연한 사건이나 영감에 의존한다. 따라서 건축가의 혁신적인 디자인 능력이 개별 건축의 독특한 성격을 크게 결정한다.

(3)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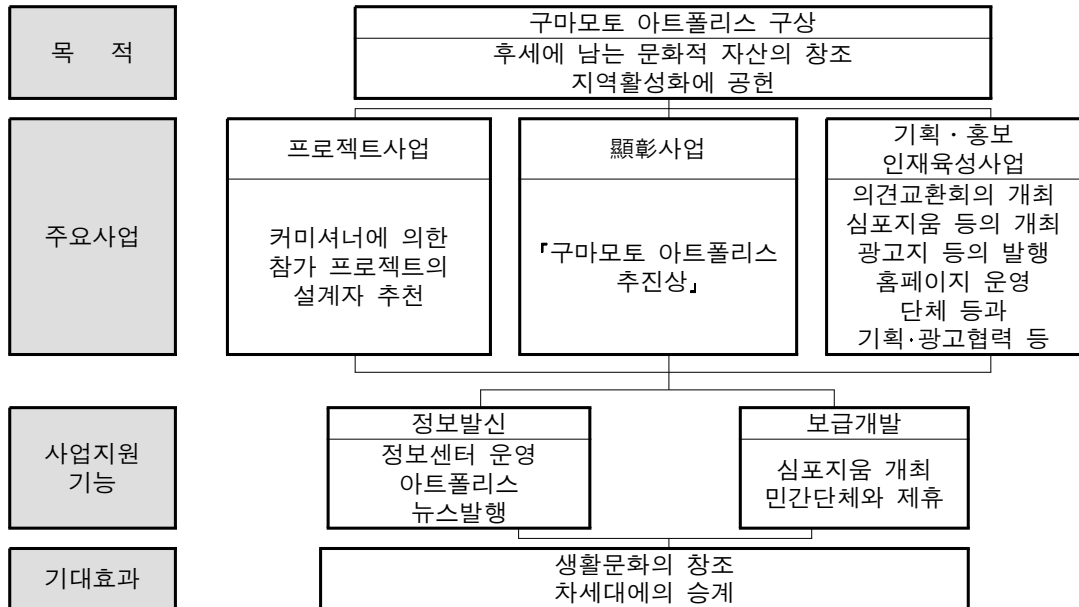
문화적 자산창조를 위해 건축물은 물론 도시설계 등의 구조물 및 도시재개발 등의 환경정비 계획 등도 포함시켜 현 전역에서 실시하며, 현 자체만이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촌 및 민간에게도 널리 참가를 요청하고 있다. 대상 프로젝트의 실시는 세계 환경디자인의 지표가 되는 것으로서, 커미셔너가 일본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건축가나 디자이너를 비롯하여 장래가 유망한 신진기예들을 추천한다. 그리고 자문위원회를 비롯한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조직이 지원·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커미셔너 제도의 도입은 당시 다이 일본에서 설계자 선정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던 위원회 방식과 현상공모방식에 의한 건축가 선정방식의 한계에 대한 실천적 대안으로 호소가와지사는 위원회방식에 의한 설계자 선정은 최종적으로 보편적이고 무난한 안을 선택할 수는 있으나 무미건조하고 획일적이며 표준적인 도시를 조성하는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다양한 건축물을 통한 개성있고 활력있는 도시창조를 위해 커미셔너 방식을 도입한다.²⁶⁾

현재까지 구마모토 아트폴리스의 커미셔너는 3대째 이어지고 있으며, 초기 커미셔너는 호소가와 지사의 추천으로 선임되었고, 2기부터는 선임 커미셔너가 추천하고 지사가 선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6) 영주시, 영주시 건축디자인기준 설정연구, 2010,p.41

〈그림 3-5〉 KAP의 추진체계



자료 : 김정연(2002), 구마모토의 아트폴리스 프로젝트 및 경관행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충남발전연구원.

(4) 추진사업의 종류

문화적 자산창조를 위해 건축물은 물론 도시설계 등의 구조물 및 도시재개발 등의 환경정비 계획 등도 포함시켜 현 전역에서 실시하며, 현 자체만이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촌 및 민간에게도 널리 참가를 요청하고 있다.

대상 프로젝트의 실시는 세계 환경디자인의 지표가 되는 것으로서, 커미셔너가 일본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건축가나 디자이너를 비롯하여 장래가 유망한 신진기예들을 추천한다. 그리고 자문위원회를 비롯한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조직이 지원·협력하고 있다.

① 기획 및 홍보활동

구 분	주 요 내 용
기획운영	① 기본방침의 확인 및 검토 ② 환경디자인에서부터 마을 만들기의 기획 및 제안 ③ 대상 프로젝트의 기획 및 제안 ④ 관련된 마을 만들기 계획과의 제휴
홍보활동	① 보도기관을 통한 홍보 ② 포스터, 팸플렛, 뉴스 등의 발행 ③ 해외에 대한 소개지 발행 ④ 심포지움 등의 개최 ⑤ 각종 단체의 협력 요청

② 대상 프로젝트

대상 프로젝트는 환경디자인의 점적인 질의 향상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그 영향이 선적 또는 면적으로 발전이 기대되는 것들로서 아래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① 거리조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 ② 자연환경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것
- ③ 관광·리조트 지역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정비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것
- ④ 주택단지 등 시가지에 있어서 지구 규모의 배려가 필요한 것
- ⑤ 그 이외 특별히 배려가 필요한 것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라면, 건축주(현·시정촌·민간)와 프로젝트 내용(건축물·다리·공원 / 구상·계획 등) 및 그에 따른 용도·구조·규모 등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다.

③ 대상 프로젝트에의 참가조건

설계자는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건축가나 디자이너를 비롯하여, 장래가 유망한 신진기예들을 커미셔너가 추천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설계를 하거나 설계 공모전을 제안한다.

설계자의 결정은 커미셔너의 추천을 기초로 사업주가 설계자를 결정하며, 또 계약에 관해서는 수의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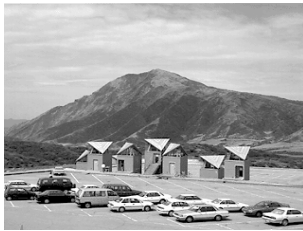
설계기간은 건축의 용도나 규모에 따라 다르며, 기간은 우선적으로 설계자의 의도에 따른다.

설계비의 산정은 건물의 설계료는 “건축사무소의 개설자가 그 업무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보수의 기준(1979년 건설성 고지 제1206호)”에 따라 산정한다. 건물 이외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하여 산정한다.

공사비는 문화적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적절한 공사비가 확보되도록 한다.

현청은 원칙적으로 『구마모토 아트폴리스』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나 조성제도는 없지만, 공모전에 의해 건축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250만엔을 지원한다. 그 외에 사업실시에 대한 지원이나 협력을 행하여, 완성된 건물 등을 국내외에 널리 소개한다.

〈그림 3-6〉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사례



아소산 공중화장실



구마모토 북경찰서



시로가와교 경관정비

4) 국내사례(서울시, 영주시)

(1) 서울시

서울시는 도시디자인의 실행 및 관리를 일체화하는 통합적 추진을 위하여 문화관광디자인 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문화관광디자인본부는 기존의 디자인총괄본부를 증대한 것으로 그 운영에 있어서 그동안 분산되었던 디자인 업무를 통합하고, 도시혁신정책과 전략을 수립하여 민간 미술전문가를 본부장으로 임용하여 전문적인 차원까지 포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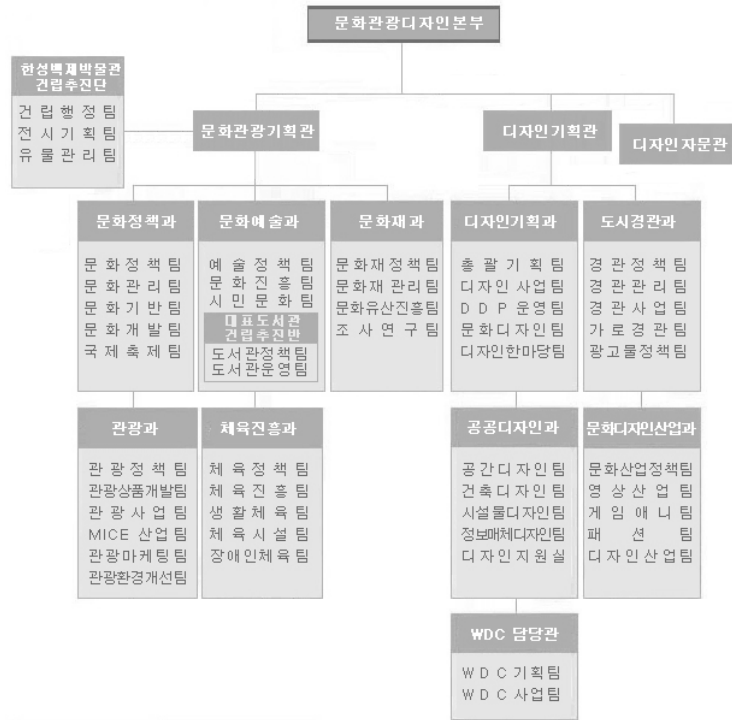
① 관련 조직

서울시는 기존의 디자인 관련조직을 통합하여, 디자인 기획, 도시경관, 공공디자인, WDC담당, 문화디자인산업으로 크게 구분하여 나누었으며, 그 구성에 있어서는 기술직 공무원, 행정직공무원, 심의위원, 자문위원으로 구성하였다.

분야는 디자인과 관련된 건축, 공간디자인, 환경디자인, 시각디자인, 산업디자인, 색채, 조경, 조명, 전기, 도시계획, 토목, 광고, 미술, 문화, 역사, 사회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디자인 총괄본부의 위상은 지자체장 직속 도는 총괄부서 소속으로 하였던 바, 이는 통합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실행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실과와 수평적 관계가 아닌 직속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는다.

〈그림 3-7〉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조직도



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

② 위원회 및 재단

서울시의 디자인과 관련된 위원회 및 재단은 크게 3개로 구성된다.

첫째는 서울디자인위원회로 서울시가 행하는 모든 디자인 정책 및 계획에서부터 그 구체적인 개별시설물의 디자인에 이르는 분야까지 심의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각 분야별 100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서울시 디자인 위원회는 공공공간과 건축디자인을 담당하며, 그 기능과 대상은 도시디자인 추진에 관한 심의 및 자문,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도시디자인 대상시설물 및 가로환경조성사업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도시디자인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행한다.

위원회는 현재 100인으로 구성되며, 건축분야 24인, 도시 및 토목분야 12인, 조명분야 6인, 광고·미술·디자인분야 41인, 시의원 등 당연직 11인으로 구성된다.

둘째, 디자인서울포럼은 서울시의 디자인 정책개발 아이디어 발굴 및 정책자문을 위한 학계, 전문가 단체, 연구기관, 언론, 문화, 예술분야 및 디자인 행정공무원으로 총 41명으로 구성된다.

셋째, 디자인 재단은 서울의 디자인 사업 진흥 및 디자인 문화확산에 필요한 각종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신설된 재단으로 서울의 디자인 경쟁력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영주시²⁷⁾

영주시는 2009년 건축기본법 제23조에 의거하여 다른 지자체보다 먼저 공공건축가를 위촉하여 운용하고 있다.

2009년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공동 추진중인 ‘공공건축을 통한 영주시 도심재생방안 연구’와 관련하여 도시공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축·도시관련 기획 및 설계업무에 대한 총괄조정 및 관리와 도심재생 용역과 관련한 총괄 조정을 담당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의 참여가 요청됨에 따라 협의를 거쳐 활동기간 2년을 단위로 공공건축가 3인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 공공건축가는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의 하나로 추진중인 ‘마스터플랜개발연구용역’의 총괄기획가로 참가하고 있으며, 공공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한 설계자문을 하고 있으나 이는 심의위원보다도 영향력이 미미한 실정이다.

영주시는 도시디자인과내에 도시계획, 도시미관, 도시정비, 도시개발등을 모두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건축디자인과 관련하여서는 디자인 관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영주시 디자인 관리단은 공공건축가팀, 운영팀, 사업협의체+지역코디네이터, 총괄계획가 등

27) 영주시, 영주시 건축디자인기준 설정연구, 2010. P39.

이 참여하는 시장 직속상설기구로 구성하고 있으며, 별도의 디자인 검토위원회를 디자인 관리단에 편제하고 있다.

디자인관리단장과 공공건축가팀, 운영팀은 상설조직이며, 총괄계획가, 사업협의체+지역코디네이터 조직은 영주시 직할사업 디자인 관리를 위한 비상설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디자인 검토위원회를 두어 영주시 직할 이외의 사업디자인 관리를 위한 비상설조직을 두고 있다.

5) 시사점

건축정책 추진의 배경과 목적에 있어서 무엇보다 당면한 획일화, 무미건조화라는 공간환경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되었고, 건축가 등 건축 관련 전문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있으며, 건축에 대한 공공의 인식을 진작하고 있다.

디자인 행정업무의 수행방식은 다양한 형식으로 운영될 수 있는데, 국내외 사례 검토결민간 전문가가 지자체의 디자인 행정업무에 어떠한 조직형태로, 어떠한 업무분장을 갖고서 참여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선진사례 검토를 요약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축디자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통합적인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그 형태가 지방자치단체내의 행정조직으로 구성하느냐 비행정조직으로 구성하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분산되어 있던 디자인 업무를 통합한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영국은 중앙에 건축·건조환경위원회(CABE), 지방에 건축·건조환경센터를 두고, 네덜란드에서는 중앙에서는 국가수장건축가를 통해 조직을 구성하고, 지방에서는 전국에 Architectuur Lokaal센터를 두어서 통합된 조직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서울시와 영주시도 같은 통합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둘째, 전문분야 및 행정의 개선을 위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효율성 증대와 통합적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건축관련 추진기구를 조직운영하고, 본 추진기구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속기관으로

두어 그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점이다.

영주시의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디자인관리단을 구성하고 운영함에 있는 바,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여 대안으로 파생된 방식이라 하더라도 중소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내의 상설조직으로 서울시와 같이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많은 수의 공무원을 참여시킬 수 없으나, 업무의 독립성, 효율성, 업무 조정성, 주민참여도 면에서는 보다 효율적이다.

셋째,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부터 디자인 심의 및 자문기능을 강화하고, 민간부문으로 병행 및 확대하고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지자체가 발주하는 주요사업에 대한 디자인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일선의 행정조직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민간전문가가 심의 및 자문토록 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진 전문가의 역량과 노력에만 의존하여 장기적으로는 지속성을 갖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그 민간전문가는 자율적으로 디자인업무에 참여한다.

넷째, 공공재단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발굴·기획·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물론 외국의 경우, 하나의 페스티벌 성격과 개별 프로젝트 운영의 형식을 펴고 동시에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이미지를 혁신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 재단을 조직하고, 그 해당 조직에서 재정적 지원과 다양한 사업을 발굴 시행하고 있다.

다섯째, 건축디자인의 근본적인 질적 제고를 위하여 건축단계별 평가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건축기본법 제정의 취지와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서 기존의 심의 및 자문의 기능이 건축행위로 인한 결과물에 초점이 맞추어졌다고 하면, 기획-계획·설계-시공-운영의 전단계에 있어서 디자인 Process별 가이드라인 및 자기체크리스트를 적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영국의 DQI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 도입시 문제점

1) 충청남도의 건축디자인 행정체계 현황

건축기본법이 장소기반의 디자인 코드를 접목시킴으로서 디자인적인 질을 제고한다는 측면에 있어 논의의 방향은 광역지방자치단체보다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전개한다.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조직상 시장·군수 또는 부시장·부군수 직속의 부속기관을 두고 있다.

이러한 직속기관의 경우, 대부분이 해당 시·군의 정책적 방향에 따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부문에 국한되거나 정책변화에 따른 기획기능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일례로 대부분의 시청에서는 정책실, 공보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을 직속실과로 배속하여 운영하고 있다.

건축·도시 조성 관련사업을 운영하는 부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부서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부시장산하의 직속기관으로 경제활성화와 투자유치등의 부서가 해당한다. 충청남도의 경우, 직속실과중 정책실과 기획예산부서가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산시의 경우, 미래전략팀, 첨단산업팀, 투자유치팀등으로 구성되어 운영중이다.

둘째, 주민생활과 관련하여 주민복지관련부서, 회계부서, 새마을봉사부서, 문화관광부서, 인재양성부서등이 해당한다. 이러한 부서는 소규모의 건축행위 및 민원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회계관련은 계약과 관련하여 건축직인 전담인력으로 배치되고 있다.

셋째, 건축디자인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부서이다. 이러한 조직은 건설, 도로, 도시계획, 건축, 도시디자인, 교통행정 등이 포함된다. 이중 디자인과 직접적인 업무를 조직 형태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충청남도는 건축도시과에 건축문화계와 공공디자인계에서 건축디자인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건축문화담당이 광역건축정책기본계획을 담당하고, 공공디자인담당이 공공디자인과 경

관디자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시군에서 과형태의 조직으로 통합적인 디자인행정을 운영중인 곳은 아산시가 유일하며, 아산시는 도시디자인과 아래 건축디자인, 가로환경디자인, 도시경관디자인계를 두고 있다.

팀·계형태의 조직을 운영중인 시군은 천안, 공주, 보령, 논산, 서천, 홍성, 당진이며, 보령시는 도시디자인계를 별도로 두고, 도시디자인, 경관, 건축디자인, 가로환경디자인, 광고물, 야간경관에 대한 통합적 추진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시군은 디자인에 대한 통합적 접근보다는 경관이나 공공디자인에 대한 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다.

넷째, 앞에서 언급한 건축디자인을 언급하지 않는 시군의 경우는 대부분 통상적인 계약 및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건축디자인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

〈표 3-9〉 충청남도 건축디자인 관련 조직 형태

구분	국	과	팀·담당	비고
충청남도	건설 교통국	건설정책과	건설정책 지역계획 도시계획 건설기술 연안항만 항만개발	
		건축도시과	주택정책 건축문화 도시기반 공공디자인	건축문화 : 광역건축정책 및 디자인 공공디자인 : 공공디자인, 경관
천안시	건설 도시국	건설도로과	건설정책팀 농지기반팀 하천관리팀 도로지원팀 도로시설팀 보상팀	
		도시과	도시계획팀 도시정비팀 기반조성팀 재개발팀 지적관리팀 새주소팀 신도시T/F팀	
		건축과	건축행정팀 도시디자인팀 건축팀 주택팀 살기좋은지역팀	경관, 경관·미관지구 관리

		미래도시개발과	균형발전팀 비즈니스파크조성팀 경전철팀 복합테마파크타운T/ F팀	
공주시	발전 기획단	미래도시팀	문화도시 행복도시지원 공공디자인 체육지원 레저시설조성 도민체전 T/F	공공디자인
		5도2촌팀	주말도시 지역개발 새마을특화 국토미화 사이버시민	
	산업국	건설과	건설행정 농지관리 도로계획 도로시설 조명	
		도시건축과	도시행정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주택 주거환경	
보령시	경제개 발국	건설과	지역개발 농지 개축 건설지원	
		도시주택과	도시계획 도시개발 도시디자인 건축행정 주택	도시디자인, 경관, 건축디자인 가로환경디자인, 광고물, 야간경관
아산시	건설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 개발행위 지구단위 도시정책	
		건축과	건축행정 일반건축 건축지도 주택개발	
		도시디자인과	건축디자인 가로환경디자인 도시경관디자인	경관위원회 운영 광고물 도시경관 야간경관
서산시	건설 도시국	도시과	도시계획 지구단위 도시개발 도시정비	

		건축과	건축행정 주택 건축허가 건축신고 토지산림 환경하수	
논산시	산업 건설국	도시과	도시행정 도시관리 도시개발 개발허가	
		건축과	건축행정 주택 공공디자인	
계룡시		건설과	건설행정 도로 상수도	
		도시주택과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주택	
금산군		건설과	건설행정 도로 지역개발 농촌개발 개발촉진	
		도시건축과	도시계획 도시개발 도시디자인 건축 주택	경관, 옥외광고물, 가로등, 노점상
연기군		건설과	관리 농촌개발 도로 지역개발	
		도시건축과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주택	
부여군		도시주택과	도시 지역계획 지역개발 건축 주택	
서천군		건설과	건설정책 농촌개발 도로 개발촉진지구	
		생태도시과	도시정책 도시개발 건축 지역개발	경관

청양군		민원봉사실	건축	
		건설도시과	건설도로 기반조성 도시 개발 공공시설	
홍성군		건설교통과	건설정책 도로 농촌개발 교통행정 교통지도	
		도시건축과	지역계획 도시기반 도청이전지원 주택 건축	경관
예산군		건설교통과	건설행정 기반조성 도로시설 도로관리 교통	
		도시건축과	도시계획 도시개발 주택 건축 복합민원	
태안군		건설도시과	건설행정 도로 도시계획 도시개발 농촌개발	
당진군		건설과	도로관리 기반조성 지역개발 도로시설	
		도시건축과	도시계획 지역계획 도시개발 신도시개발 건축 도시경관 주택	경관

출처 : 각 시군 홈페이지

이처럼 충청남도는 건축·도시관련사업은 대부분 기존의 관리중심의 형태로 여러부서에 걸쳐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이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은 아산시와 보령시가 유일하고, 그 외의 도·시·군은 건축디자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건축디자인 관련 관리체계

대부분의 심의제도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근거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법에 근거한 건축위원회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근거한 설계자문위원회, 경관법에 근거한 경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국제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도시관련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주요 심의대상은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충청남도의 도·시·군은 제안된 안전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 단점이 있다.

건축위원회는 건축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으며, 이는 개별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주요 심의대상은 도·시·군의 조례에 의거하여 건축물 심의가 이루어진다.

설계자문위원회는 건설기술관리법(제5조의 2)에 근거하여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구성할 수 있으며, 주요심의사항은 일반적으로 7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하여 공사시행의 적정성, 건설공사의 타당성 및 구조물의 안전, 새로운 기술과 공법 등의 적용범위와 한계,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경관위원회는 경관법에 의해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구성할 수 있으며, 주요 심의 사항은 경관법에 의거하여 위임된 사항으로 심의와 자문을 병행할 수 있다.²⁸⁾

충청남도는 경관위원회의 근거가 되는 경관조례를 제정한 곳은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보령시, 당진군이며, 규칙을 제정한 곳은 충청남도, 천안시이고, 훈령까지 제정한 곳은 아산시이다. 한편, 별도로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한 곳은 충청남도와 아산시이다.

28) 경관위원회의 기능(경관법 제24조)

경관심의 : ①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경관계획의 승인, ② 경관사업의 승인, ③ 경관협정의 인가, ④ 다른 법령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시행령 제17조 2항), 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시행령 제17조 3항)

경관자문 : ①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②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③ 경관조례의 제정에 관한 사항, ④ 경관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⑤ 경관협정의 체결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⑥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임

3) 건축·도시관련 업무 수행 현황 및 문제점

(1) 해당부서내 업무 수행상의 문제점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의 건축·도시관련 업무는 여러부서에 걸쳐 자체적인 지역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과 중앙·광역자치단체 및 외구공공기관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 그리고 민간 사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시군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건축·도시관련 사업은 사업별로 여러부서가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동일한 대상지 여러 개의 사업이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사항은 개별법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당연히 되는 결과로서 공공주도의 건축물 공사를 일례로 들면, 학교시설을 보완하기 위한 도로확장공사를 추진하면서, 담당허물기 사업과 주거환경정비사업이 동일 부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각각의 사업관리는 여러 부서에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또한, 사업의 추진은 기획단계에서부터 해당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며, 각 단계별로 관련된 부서의 협조를 받아 진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다만, 사업의 발주방식 결정은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회계과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291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프로젝트의 성격에 관계없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수의계약 또는 저가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하여 5천만원이하의 건설기술용역에 대해서는 지역건축가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건축디자인과 관련하여 심각하게 고려해야할 부분이 발주부서에 건축직 관련 전담인력이 없을 경우, 시공단계에서 공사의 관리감독을 위해 건축직 전문인력에게 협조를 얻어야하며, 이때 건축직 전담인력중 업무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은 담당자를 선정하여 관리하도록 함에 따라 프로젝트의 성격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디자인 관리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행정절차상의 단순업무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로 꼽을 수 있다.²⁹⁾

29) 관련공무원 인터뷰 내용 중 일부 발췌

(2) 중앙·광역자치단체 및 외부공공기관 시행사업시 문제점

중앙이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공공건축물 조성 사업은 건축법 제29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³⁰⁾에 따라 건축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주택법 제16조 ‘사업계획의 승인’³¹⁾ 및 제 17조 ‘다른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에 의제 등’³²⁾에 의해 협의하여 추진 할

-
- 30)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나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제11조나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의한 건축물에는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31)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1, 2010.4.5>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②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5>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의 결정[제17조 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擬制)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權原)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말한다. 이하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서 같다] 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의 사업계획은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하는 데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공공청사 등의 용지의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간선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⑦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승인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⑧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⑨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제7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32)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등) 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결정·승인 또는 신고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3.25, 2009.6.9, 2010.4.15>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 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의 승인
 3. 삭제 <2010.4.15>
 4.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및 같은 호 다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49조제1호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7.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 또는 협의
 8.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9.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10.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1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임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13.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14.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15.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6.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7.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등록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19.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
 20.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축법 제3조 '적용제외'³³⁾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조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학교시설 또한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에³⁴⁾ 따라 교육청 자

-
22.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
23.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시행의 허가
2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②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후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승인권자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인·허가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 33) 제3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가지정(假指定) 문화재
2.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운전보안시설
나.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다. 플랫폼
라. 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給水)·급탄(給炭) 및 급유(給油) 시설
3.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4.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된다)
-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의 예정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34) 제4조(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등) ①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규모 및 재원 등이 포함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이하 "감독청"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미 학교시설사업을 마치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에서 합격한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안에서 학교시설의 건축·축조·대수선(大修繕) 또는 용도변경(이하 "건축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의 시행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은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자는 감독청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감독청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제5조 각 호의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면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제5조 각 호의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학교시설사업을 마친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에서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려는 경우의 시행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체내에서 허가, 착공, 준공한뒤 해당 지자체에는 승인 통보만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어 해당 지자체에서 별도의 디자인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시군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와 관련하여 농어촌공사와 같은 고공기관에서 조성하는 건축물은 일반 민간건축물과 같이 건축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원칙적으로는 해당 지자체에서 관여하여 디자인관리가 가능하나 현재 법률 검토 수준에 머물러 있고, 형식적인 디자인 관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종합하면, 시군의 중앙·광역정부 및 외부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은 주택 및 지적과의 민원계로 접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기에 따른 비정규적으로 부서 해당 담당자로 구성된 실무회의를 통해 인허가 도면 및 관련법을 한번에 검토하여 특이한 사항이 없을 경우 허가 및 협의가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반면, 형식적인 법적 사항 검토에만 머물러서 위치의 적절성, 디자인 검토 등의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4)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문제점

국가에서 추진하는 건축디자인 정책은 좋은 건축물과 공간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이를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가로, 공공공지등의 공공공간과 각종 시설물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장소를 만듦으로써 지방도시의 특성과 문화적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
- ⑤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감독청이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고 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작성하려는 경우 그 시행지 안에 제10조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이 필요한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이나 그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가 있으면 그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⑦ 감독청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제3항과 제6항에 따른 협의기관과 이해관계인에게 각각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에 따른 협의를 마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⑧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과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의 건축등에 관한 승인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이면서도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건축디자인 기준은 정책 실현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건축디자인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관행적인 행정중심의 관리체계로 인하여 디자인 기획기능이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들 수 있다. 특히, 공공이 관리하는 건축물과 공간환경 조성사업의 경우, ‘디자인 기획업무’가 전문가의 참여없이 예산편성을 위한 단순 행정업무로 수행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능력부재는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빈번한 설계변경과 예산변경을 수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디자인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컨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한 전문적인 사전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진하는 별도의 예산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직종별, 주체별 업무분장체계로 인하여 건축디자인의 근본적인 취지인 디자인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분업적 행정체계로 도시계획, 건축설계, 토목설계, 조경설계 등 직종별로 설계 업무를 분리시키고 있으며, 건축물과 도로, 가로시설물, 조경시설 등 공간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하나의 디자인 단위로 수행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장소만들기라는 통합된 디자인 수행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충청남도는 아산시와 보령시만이 통합추진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였을 뿐, 다른 시군은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건축디자인의 품질제고를 위한 조성 프로세스 체계가 미정립되어 있다. 이것은 현재, 공급자 중심의 일방향적 의사결정 방식으로 진행되는 디자인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특히, 공공건축물의 경우 해당지역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지역행

정기관에서 수행하는 설계심의회나 허가과정도 거치지 않고 단순 행정협의나 통보만으로 설계가 확정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로 인하여 공공건축물이 통합된 지역경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단순 용역형태로 진행되는 설계과정은 최종 사용자나 관리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분산된 업무 추진으로 인하여 주민, 전문가, 관리운영 주체 등과의 협의 및 의견수렴 과정이 없다는 점과 행정 편의의 발주방식으로 인한 디자인 품질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설계기준 및 지침을 준거로 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사안에 대한 관리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설계자문위원회, 건축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를 통해 설계자문을 거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이 일회적이고 단편적인 자문으로 설계의 품질관리에 한계가 있다. 더불어서 설계가 완료된 상태에서 공공건축가의 자문을 추진하는 방안도 동시에 이루어져야할 필요성도 있다.

넷째, 장소만들기에 입각한 건축디자인사업의 추진시 기존의 경관법과 같은 관련법과의 혼선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즉, 경관과 건축디자인의 개념 정립 안되어 있으며, 그 이전에 건축디자인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다는 점이다.

중앙정부는 건축기본법에 의거하여 건축디자인기준을 제정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지만, 그 정확한 적용 대상과 적용범위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건축디자인 기준이라는 것은 수단으로서 작동하기 마련이고, 이는 경관계획에 의거한 경관 설계지침³⁵⁾과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교육이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경관계획은 특정한 지역이나 장소 또는 개발단위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디자인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라면, 건축디자인 기준은 사이트 중심의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각 참여주체가 해야 할 역할이나 의사결정방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디자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누구나 참고해야할 규범적인 원칙을 정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35) 경관설계지침은 경관위원회의 심의의 근거로 활용되므로 첨예한 사항인 바, 현재의 경관설계지침은 사이트 중심의 경관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에서 담아야할 건축선, 셋백, 건축물의 형태와 재료, 색채 등의 상세한 규정을 담고 있고, 그 적용대상을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섯째,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 발주 건축물과 인허가 대상인 민간건축물에 대한 디자인 관리방안의 부재를 꼽을 수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중앙 및 광역지자체, 또는 외부 공공기관의 사업에 대해서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협의권을 갖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공간의 품격을 유지하기 위한 디자인에 대해서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개진하기 보다는 수동적인 수준의 대응에 머물러 있어 도시공간의 통합적 활용 및 디자인 개선사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이 상당히 어렵다.

또한 도시경관의 대부분을 결정하는 건축물의 80%는 건축심의를 받지않는 소규모 건축물로 매년 지자체에서는 신고대상이 허가대상보다 약 2배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전체적인 경관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민간건축물에 대한 디자인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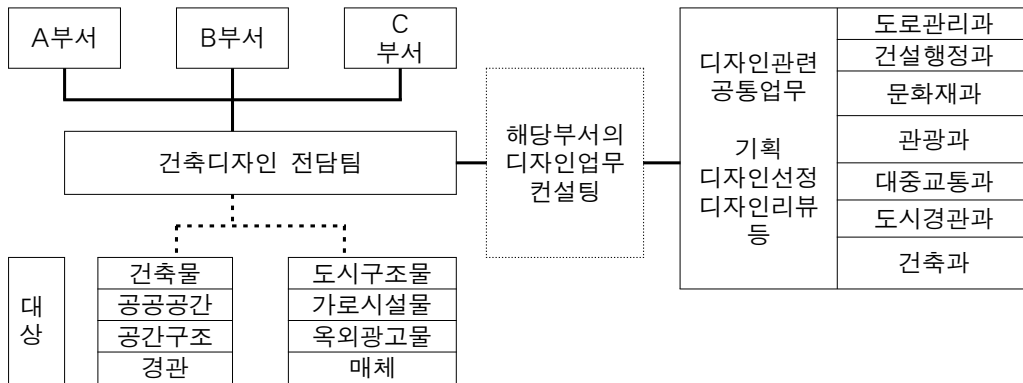
(2) 개선방향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 건축디자인과 관련된 통합적 관리를 위한 전문조직을 구성해야한다.

충청남도에서는 공공디자인을 시작으로 경관계획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공감하고 있으나 관련조직의 통합부서화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통합부서를 조직한 시군이더라도 아직은 디자인 관리차원의 협력체계가 아니라 행정지원 차원의 협력체계라고 볼 수 있으며, 도시공간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협력체계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따라서, 디자인 전담조직은 신규로 설치하거나 기존 조직에서 담당하게 하는 등 적절한 구성안을 지방자치단체가 선택하여야 하며, 디자인 전담조직의 구성할 경우 무엇보다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림 3-8〉 지자체의 건축디자인 관련부서 협의 시스템(예)



자료: 국토해양부, 살고싶은 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경관건축디자인 설정방안 연구 재정리, 2008

둘째, 디자인의 질적향상을 위한 건축디자인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디자인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의 역량에 따라서 그 결과물의 수준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일반적이며, 이로 인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디자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즉, 디자인 과정에 참여하는 행정, 전문가, 사업주체, 주민 등 다수 주체간 합의 형성 과정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말하며, 사업유형별, 각 단계별 디자인 평가를 위한 지표를 개발하여 디자인 심의나 협의과정 참고가능한 판단기준으로 활용가능한 지표를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재 충청남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건축물의 조성과정에 있어서 능력있고, 우수한 전문가의 초기 참여가 배제되어 있고, 디자인 기획과정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도적 측면에서 행정편의의 발주제도를 제도적 한계로 인하여 당장에는 시정이 불가능하더라도 기획단계에서 계획, 시공, 유지관리까지 일관된 디자인의 가치가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주체들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협력적 설계관리체계 미비를 그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현실적 대안으로서는 2009년 국가건축디자인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가 제시한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어떻게 접목시켜야 하는 지를 고민하여야 하며, 디자인 과정

에 참여하는 각 주체들의 역할, 건축과 도시, 조경 등 각 분야를 통합하는 협력디자인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근본적으로 지켜야할 원칙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단기적으로는 공공에서 디자인관리를 시작하고, 장기적으로는 민간건축물에 대한 디자인관리를 위한 검토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디자인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시행한 부문이 공공부문일 것이다. 공공부문에 있어서도 중앙과 광역지자체 발주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 심의제도를 본격적으로 가시화하여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매년 증가하는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사업 허가전에 디자인 검토제도를 시행하여 기본계획,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안)에 대하여 기획단계에서 설정한 목표 및 방향에 부합하는지 향후 시공과정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도록 한다. 사업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세부단계별로 시행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이는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종합적으로 판단 조정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높다.

넷째, 공공건축가 중심의 디자인 거버넌스를 구축해야한다.

그동안의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과 공간환경 조성에 있어서 행정절차와 법적규제를 중심으로 디자인 프로세스를 운영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문가의 역량이 반영되지 못하였다. 특히, 도시경관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소규모 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성에 전문가 참여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정관료가 주도하던 디자인 관리 업무를 디자인 전문가 중심의 구도로 전환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특히, 다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력설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사분야간 협업(건축, 도시, 조경 등)과 이종분야간(사회학, 인문학, 경제학 등) 긴밀한 네트워크에 의한 설계풍토를 조성하여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인 틀이 건축기본법 제23조의 민간전문가 활용이며, 각 개별사업에서는 프로젝트 단위의 디자인책임제도를 도입하여 책임자에게 최종 건축물의 설계, 시공, 관리에 이르기까지 디자인 전과정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공공건축가는 지방자치단체내 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성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개별 사업단위의 디자인 책임제도를 도입하여 기획단계에서 설계, 시공, 운영관리단계까지 총괄 책임을 질수 있는 역량있는 전문가로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4장 충청남도 건축디자인 제도 도입과제 및 운영의 실효성 제고방안

1. 건축디자인 전문조직 구축 운영

1) 건축디자인 전문조직의 유형

디자인 전문조직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325호(2009년12월 28일 고시한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에서 정한 기준을 전제로 그 유형을 판단할 수 있다.

(1) 디자인 전담인력을 중심으로 하는 전담조직의 신설

이 유형에서는 현재의 조직에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을 선임하여 디자인 전담조직을 새롭게 구성, 편제하는 방식과 현재의 도시디자인과 담당 업무를 재조정하고 새로운 디자인관리업무를 부가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유형은 현재의 충청남도 아산시와 보령시에서 보이는 건축디자인관련 조직과 유사한 형태로서 디자인 총괄조정이라는 고유한 업무에 비추어 봤을 때 독립성을 확보하기에는 한계를 노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상 전담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근래의 행태를 고려할 시 어울리지 않는 인상을 주고, 기존의 다양한 조직이 가지는 관련사업 추진과정에서 수평적으로 협조해야할 새로운 조직이 새롭게 생긴다는 점에서 기존 조직과의 화합이나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이 상존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전담조직을 구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위상적인 측면에 있어서 부시장이나 부군수 아래의 직할조직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2) 기존 조직에 디자인 관리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식

이 유형에서는 기존의 디자인을 비롯한 경관·공공디자인 업무와 주택·지적과 등의 분장 업무를 일부 조정하고, 기존의 경관·공공디자인 부서에서 건축디자인 기준 운영 업무를 총괄토록 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유형은 충청남도 및 일부 시군에서 행해지는 경관·공공디자인 업무에 건축디자인 업무를 추가하는 방안으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으나 기존의 업무 대비 새로운 건축디자인 업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과중한 업무부담에 따른 행정 피로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관행을 그대로 유지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드러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3) 디자인 관리단의 신설

디자인 관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상설기구로 구성하는 방안으로 현재부서별로 추진하거나 예정하고 있는 사업 중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디자인기준을 준용해야할 사안에 대해서 기획하고 검토하고 협의하는 동시에 해당사업에 대한 디자인 자문과 더불어 사업추진과정 전반에 대해 관할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 형태이다.

관리단의 업무는 전문화가 관건으로 계약직 공무원이나 비상근 전문가를 디자인 관리단장으로 위촉하고 독립적 사업에 대해 별도의 총괄계획가를 위촉하여 관리단에 편제하는 방식이다.

사업단위별로 사업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직할사업 이외의 사업에 대한 디자인

관리를 위한 디자인 검토위원회를 두어 지자체 직할사업과 그 이외의 사업에 대한 디자인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해야할 것이다. 또한 디자인 관리단은 중장기적으로 구성될 지방자치단체 건축정책위원회의 운영 주관부서로 활동하며, 부서별 기획단계 업무에 프로젝트 디자인을 조정하는 총괄계획가가 적극 참여하여 디자인 업무 전반에 대한 일관적인 조정을 담당한다.

2) 건축디자인 전문조직의 단계별 추진방안³⁶⁾

위에서 언급한 3가지의 조직유형은 충청남도·시·군의 행정여력과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해당 지자체의 기존조직의 활용 여부, 업무의 독립성, 효율성, 조정능력, 주민참여 등의 측면에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표 4-1〉 디자인 전문조직 유형별 특성 평가

구분	기존조직 활용여부	업무 독립성	업무 효율성	업무 조정성	주민참여 정도
전담조직 새롭게 구성	×	○	△	○	△
기존업무 재구성 + 디자인업무	○	△	△	△	△
기존조직 활용	○	△	○	△	△
디자인관리단	△	○	○	○	○

주) ○: 강함, △: 보통, ×: 약함

충청남도·시·군의 조직은 현재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바, 단기적으로는 해당 시·군의 예산과 인력 등의 현실적 조건을 고려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행정참여 촉진과 주민참여 행정의 구현이라는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36) 영주시, 영주시 건축디자인기준 설정연구, 2010, p 98. 재정리

장기적으로는 전담조직 및 상설기구 형태인 디자인 관리단의 형태로 추진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항은 조례나 규칙 제정 등의 여건변화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바, 최종의 형태는 시장·군수 직속의 전담조직으로 그 위상을 강화하면서 독립적 예산편성권을 가진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동시에 추가적으로 할당되는 전담인력의 우선 충원방식으로 조직과 업무내용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디자인 조정기능의 강화와 행정 책임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효율적이고 신속한 디자인 판단과 사업시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전문조직의 위상과 역할

(1) 디자인 관리단의 구성과 역할³⁷⁾

장기적으로는 건축디자인 관리단의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한 조직형태인바, 디자인 관리단의 구성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외국 선진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조직은 디자인관리단 산하에 공공건축가팀, 운영팀, 사업협의체+지역코디네이터, 총괄계획가등으로 구성하고, 기구의 위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직속 상설기구로 구성한다. 그리고 별도의 디자인검토위원회를 디자인관리단에 편제시킨다.

운영팀은 건축디자인 분야 기술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3명이상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의해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지역 전문가 1-2명이 추가되는 형태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와의 협조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된다.

사업협의체는 사업단위별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독립사업 단위로 지역코디네이터를 둘 수 있으며, 서로 다른 각각의 사업에 서로 다른 협의회를 구성하고 대표를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선임토록 행정적으로 지원하며, 해당사업의 이행과정에 참여하는 코디네이터도 주민협의회와 함께 디자인 관리단에 참여하여 건축도시 디자인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37) 영주시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인터뷰 정리

이러한 사업협의제도 선진국의 디자인 조직과 같은 형태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역할을 매개하는 코디네이터를 두는 것이 행정과 민간의 시각적인 마찰을 최소화하는 중립적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는 우선은 지역개발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지역주민의 사업계획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지역현실에 대해서 익숙하고 문제점을 익히 숙지하고 있는 주민을 디자인 관련 업무에 까지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디자인관리단은 관리단장이 관리단 운영을 통솔하며, 별도의 계약직 공무원이나 비상근 전문가를 위촉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정된 인원과 재원에 의해 계약직 공무원을 위촉하여 참여시키는 것이 상당부분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지자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비상근 전문가를 위촉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는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이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전문가를 섭외 및 정기적인 자문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이다. 뒤에서도 언급되겠지만, 이러한 전문가를 위촉하여 활용함에 있어 충청남도의 경우 공공디자인을 추진하면서 충남발전연구원의 공공디자인센터가 그 역할을 그나마 수행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공공디자인 능력 우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 공공디자인 포럼³⁸⁾을 운영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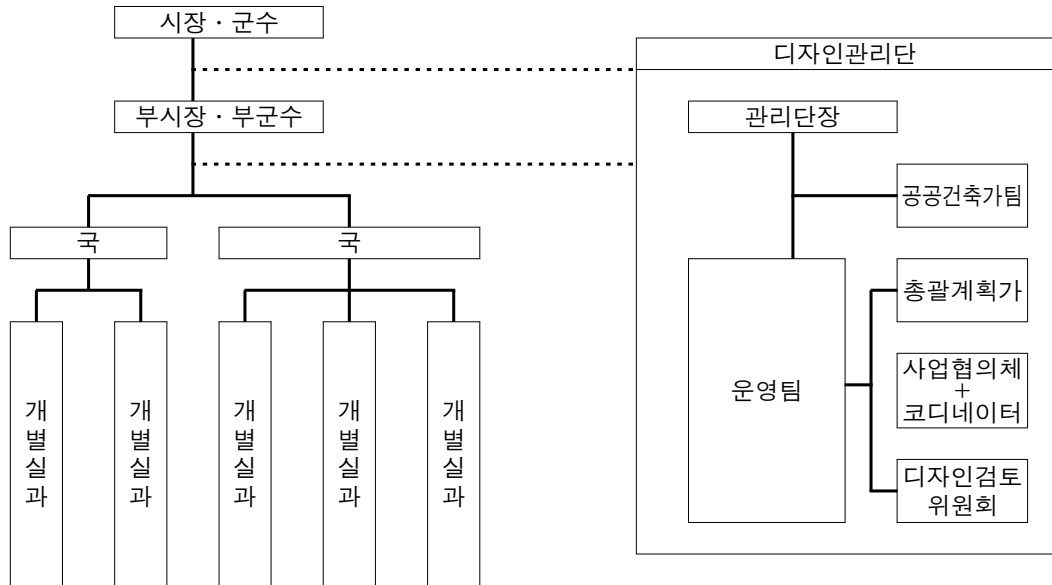
이러한 디자인 관리단의 독립적 운영을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민간전문가 활용에 따른 보수³⁹⁾가 포함되어야 한다. 더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고려하고 민간전문가와 합의의를 거쳐 정하되 심의비, 자문비, 기타 비용은 별도로 확보하여야 한다.

38)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공공디자인 관련 공사, 물품, 용역계약이 주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진행되고, 낙찰찰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98호)을 중심으로 우수한 디자인 능력을 갖춘 사업자를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환으로 지방의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위하여 디자인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공공디자인 포럼을 구성하여 운영코자 계획중이다. 이러한 사항은 2010년 9월 공공기관에서 계약체결시 우수한 디자인 능력을 갖춘 사업자선정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의거하여 추진되고 있다.

지역 공공디자인 포럼은 2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공간환경 8명, 공공시설 7명, 공공용품 7명으로 그 역할은 공공디자인 발전과 확산을 위한 법·제도개선 연구 및 자문, 행정안전부 선도사업 발굴 및 자문, 지방자치단체 포럼·자문단 연계 및 활성화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39) 보수기준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매년 고시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가운데 기술사 단가를 준용한다.

〈그림 4-1〉 디자인 관리단의 행정조직체계상의 위상과 구성(안)



4) 공공건축가의 역할 강화

공공건축가의 자격은 민간전문가의 디자인 참여를 권장하고 있는 건축기본법 시행령을 준수하되⁴⁰⁾ 국내외의 건축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를 위촉하는 기본 요건으로 하여야 한다.

공공건축가는 기존의 심의기구인 도시계획위원회, 설계자문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가 주로 민간건축물물에 대한 기술과 디자인 심의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공건축가는 공공사업을 위주로 직간접적으로 간여하며, 민간사업에 대해서는 일정한 계도를 목적으로 그 역할을 이원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공공건축가가 참여하여야 하는 범위는 기존의 법적 심의기구가 기획부터 관리까지 전 과정을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공건축가는 공공건축물의 기획-계획-설계-시공-유지관리 단계에 이르는 전과정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단계별로는 기획내용을 자문하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원칙을 제시하고 바람직한 결과로

40) 건축기본법 제23조 민간전문가의 참여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민간전문가의 참여

유도하기 위한 발주방식 제안 등의 업무로부터 시작하여 각종 심사기준과 절차의 방향을 설정하고, 심사위원 풀을 추천하는 등 심의의 공정성 확보와 심사의 투명성 확대 등을 위한 조정기능을 추가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2. 제도적 위상 확보

1) 단기 조례제정의 문제점

건축디자인을 제도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서 조례의 제정은 강력한 제도이다.

그러나 조례의 제정은 상당기간의 준비기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과 주민을 비롯한 일선 공무원의 의식변화에 따른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의회의 동의와 일정기간 동안의 설득이 필요하다는 점이 단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한 개정 사유 발생시 탄력적인 변경이나 대응력이 저하된다는 점등에서 제도적 실효성이 강함 반면 운용의 탄력성은 보장받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즉, 건축기본법에 의한 건축디자인 조례의 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제도적, 법적기반이라고 할수 있으나 제도가 가지는 내생적 한계를 극복하기에는 많은 시행착오가 예상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디자인과 유사한 경관조례의 예를 들어서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구성적인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총론적은 부문과 경관계획의 수립, 경관위원회의 운영, 경관사업으로 이루어진다. 총론부문에 있어서 원칙과 기본방향 등을 다루는 것에 국한하고 조례에서 상당한 내용을 지침에 따르도록 위임함으로써 제도적 실천성을 담보하는 동시에 도시공간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도시공간과 건축환경의 질적 쇄신을 이루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경관계획의 수립, 위원회의 운영, 사업시행이라는 측면은 근거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실효성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 기인한다.

예를 들면, 충청남도의 경우 경관조례를 제정한 시군은 천안시, 아산시, 보령시, 당진군의 4개 시군이며, 이러한 시군은 현재 경관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수립중이다. 이러한 경관계획이 중앙정부로부터 지적을 받는 사항중의 하나가 국제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상 부문별 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데,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의 차별성 문제가 거론되고 있으며,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이 경관법의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천편일률적인 획일화된 경관계획으로 수립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법적 선결조건인 경관계획에 대한 수요는 있지만, 이를 지역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특색있는 경관계획을 정밀하게 수립할 수 있는 시장형성이 되질 않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경관계획의 실효성면에서 경관계획의 내용이 기본경관계획과 특정경관계획으로 구분되고, 점차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다.⁴¹⁾ 그러나, 경관계획도 건축디자인과 마찬가지로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관조직의 전문화와 제도적 기반이 뒤따라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경관계획만 수립할 뿐 경관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경관가이드라인을 경관계획에서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실질적인 경관관리를 위해 경관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경관위원회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타 법률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중복심의 문제, 공통된 심의 기준 마련의 미흡 문제, 심의 이전에 사전 자문제 및 모니터링 제도의 도입·운영에 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나, 현재, 개별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경관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들은 건축디자인에도 그대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위임조례에 의한 제정은 건축디자인에 대한 실무적인 운용을 거쳐서 문제점을 검토, 보완하여 의회의 동의를 거치는 것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제도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마련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41) 현재 경관법이 개정중에 있으며, 경관계획의 체제가 기존의 기본경관계획, 특정경관계획에서 경관관리계획으로 재편을 논의 중에 있다. 이것은 경관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법적인 성격이 아닌 실체법적인 성격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2) 훈령과 예규를 통한 건축디자인 제도의 성숙 유도

위임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장기적인 대안이라면, 훈령과 예규를 통한 건축디자인 제도의 질적 성숙을 유도하는 것은 단기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건축디자인제도라는 것이 좋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원칙과 방법을 제시하되 일정한 수준의 강제력을 가지는 제도적 기반을 가질 때만 그 실효성을 담보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자치법규⁴²⁾ 제정 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건축디자인 기준의 실효성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규칙⁴³⁾으로서 만들어지는 훈령과 예규의 형식이 있는 바, 훈령과 예규는 모두 행정규칙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나 훈령은 상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임에 반하여 예규는 법규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행정사무실의 기준을 제시하는 문서이다.

건축기본법에 의한 건축디자인기준은 원칙적으로 행정사무의 기준을 정하는 특성이 강하다는 점이다. 이것은 예규로서의 제도적 위상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이 가능하므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행정사무의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치단체장의 확고한 의지와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으로 실현되는 방안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 국한하는 특정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42) 자치법규란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법규적 성격을 갖는 규범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조례와 규칙이 포함되며, 상위법에서의 위임사항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다.

43) 행정규칙은 내규로도 불리며 훈령과 예규가 있다.

훈령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방적으로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규칙의 일종이다. 훈령은 법규적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대내적으로 하급관청을 구속함에 그칠뿐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것으로서 훈령에 위반된 행위는 하급관청을 구성하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에 그치며, 이에 위반하여도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상급관청은 훈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하급기관의 권한을 대행하지 못하며 다만, 감독권에 의한 징계가 가능하다.

예규는 법규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대하여 그 행정사무의 처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하며 훈령과 마찬가지로 행정 규칙의 일종으로서 법규적 성질을 가지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다. 예규는 반드시 행정사무의 기준을 제시하는 문서여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와 함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훈령이 행정사무의 기준을 제시하는 문서로 작성되었다면 그것은 동시에 예규가 되는 것이며, 합리성, 계속성, 능률성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의 지속적인 관리와 명령 이행에 대한 실천여부에 대한 감시가 전제되어야지만 그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약점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건축디자인 전담조직구성 방법이 일정한 제도적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상호 동일한 위상을 확보할 수 없는 평등성의 측면에서는 한계를 보인다.

구체적으로 디자인 조직 운영지침과 지자체 건축디자인 기준등이 모두 포함된 별도의 실무지침을 제작하여 이를 지자체의 공공사업에는 반드시 적용되도록 하고, 행정권역내의 민간사업에도 일부 권장되거나 원용될 수 있음을 명기하는 예규로 운영함으로써 일정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예규로 정하여 일정기간의 시행을 거치게 되면 전국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경쟁을 통해 배분되는 포괄적 지방교부금을 획득할 수 있는 전제조건인 동시에 중앙정부에서 건축기본법에 의한 시범사업의 다양화와 확대가 예상되는 바, 다양한 건축도시 공간환경 만들기 경쟁사업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더불어, 조례제정의 약점이었던 관련 공무원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자료를 단기간내에 수행할 수 있으며, 의회에서의 심의 등의 절차적 과정을 거치지 않는 실무지침으로 작동할 수 있어서 단기적인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긍정적인 제도적 기반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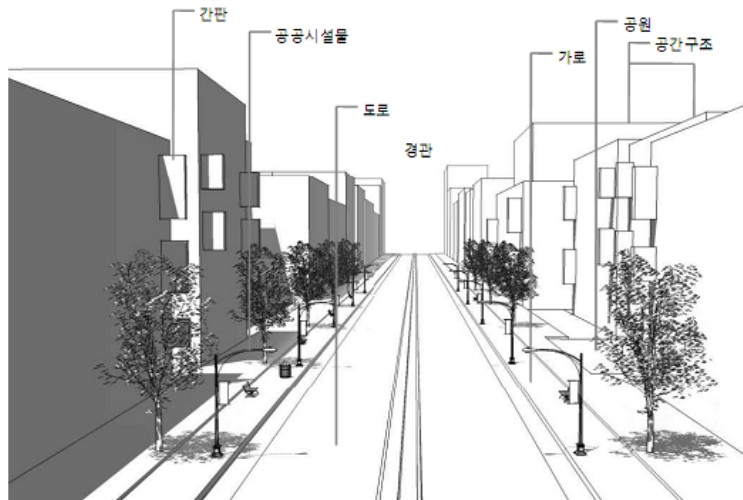
3. 건축디자인 기준 설정 및 적용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디자인 기준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디자인(기획, 설계, 개선)할 때 준수해야 할 업무체계와 수행절차, 그리고 디자인의 목표를 규정한 기준으로서 지자체내 건축물 및 공간환경 시설물의 소유자·관리자인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에게 따라도록 권장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건축기본법 제3조, 제21조, 시행령 제19조의 기준을 따른다.

1) 적용대상별 방향 설정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디자인 기준은 건축기본법 제3조에서 말하는 관할행정구역내의 건축물,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 가로·공원·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의 이용하는 시설물 및 경관을 기획·설계하는 업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2〉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디자인 기준의 적용대상



출처 : 서수정 외, 살고싶은 도시조성을 위한 도시·경관·건축 디자인 설정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08, p216

(1) 적용대상지역

건축디자인 기준은 지역 특성차이를 고려하여 설계기준이나 지침이 아니라 건축디자인 업무에 대한 절차를 정하는 기준이다. 따라서 관할 행정구역내에서 시행되는 건축디자인 업무는 지역차이를 불문하고 동일한 행정조직의 업무로 시행되므로 건축디자인 기준은 이러한 지역차이를 불문하고 관할 행정구역내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2) 적용대상사업

적용대상사업의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서는 관할행정구역내에 조성되는 건축물 및 공공환경을 디자인하는 사업을 특성별로 분류하여 기준의 적용의 적절성, 적용이 필요한 건축디자인 기준의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 사업대상에 따른 유형

사업대상에 따른 유형은 크게 단위사업과 지역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단위사업은 사업대상이 특정필지의 건축물(군)이거나 특정 공공공간, 혹은 특정 시설물(군)에 국한되는 사업으로서 디자인 업무 역시 대상물의 특성에 따라 특정부서나 특정 전문가(업체)가 전담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다.

지역사업은 복수필지와 공공공간들을 포함하는 일정 지역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통상적으로 대상지역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업무의 후속으로 포함된 건축물·공공공간, 구조물, 가로시설물 등을 말한다. 디자인업무도 대상물에 따라 서로 다른 부서와 전문가(업체)가 나누어 수행함으로써 이들간의 협력과 조정이 필요하며, 각, 디자인 대상마다 조성 시기가 달라 지역차원에서의 일관된 디자인 관리가 수행되어야 하는 업무이다. 여기에는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같이 독립적인 도시관리수단으로 수립되는 지구단위계획까지도 포함된다.

② 사업주체에 따른 유형

사업주체에 따른 유형은 크게 지자체 직할사업, 중앙·광역정부 및 외부공공기관시행사업, 민간사업의 3개로 크게 나뉜다.

지자체 직할사업은 지자체가 사업주체가 되어 발주·시행하는 단위사업 및 지역사업을 말한다. 대부분 단위사업은 지자체 직할사업으로 시행가능하며, 지역사업 중에는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을 제외한 사업들이 지자체 직할사업으로 시행될 수 있다.

중앙·광역정부 및 외부 공공기관 시행사업은 해당 지자체가 허가·승인권력을 갖는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으로 나뉜다.

중앙·광역정부 및 외부 공공기관 시행사업 중 허가·승인권력을 갖는 사업은 중앙정부의 부처 및 산하 공공기관⁴⁴⁾, 상위 광역지방정부(충청남도) 및 산하 공공기관(지방공사 등), 교육청 등이 사업주체로서 발주·시행하는 단위사업 및 지역사업으로서, 디자인 업무 역시 각 사업주체들이 관할한다.

중앙·광역정부 및 외부 공공기관 시행사업 중 지자체가 허가·승인권력을 갖지 못하는 사업은 국가나 지자체가 시행하는 건축사업, 지방교육청이 승인권력을 갖는 학교건축사업, 중앙정부나 광역정부가 승인권력을 갖는 택지개발사업,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은 기초자치단체가 허가·승인권력을 갖지 못하고 있어 디자인 내용관리를 위한 별도의 절차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예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축물 건축사업(건축법 제29조)의 의한 사업,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의 2에 의한 학교건축사업,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른 철도시설건설사업 등이다.

다만, 택지개발사업,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은 국토해양부 장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지구 지정권 및 사업승인권력을 가지며, 기초자치단체는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사업시행자와 협의하는 형식으로 계획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44)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민간시행사업은 민간이 발주·시행하는 단위사업 및 지역사업을 말하며, 민간이 시행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단위사업이 대부분이나 민간 도시개발사업 등 지역사업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건축디자인 기준 적용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2〉 사업유형별 건축디자인 기준 적용방향

구분		단위사업	지역사업
기초지자체 직할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지자체 직접 발주사업 → 건축디자인 전면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지자체 직접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가로환경개선사업 등 → 건축디자인 전면 적용
중앙 광역 정부 및 외부 공공 기관 시행 사업	기초지자체 허가승인권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지방공사 시행사업 - 건축디자인 전면 시행 곤란 허가권을 활용하여 사전에 디자인 내용을 검토·협의·조정 가능 → 사업초기부터 디자인내용 검토·협의·조정이 가능한 절차 기준 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지방공사 시행 주거환경개선사업 - 건축디자인 전면 시행 곤란 → 사업초기부터 디자인내용 검토·협의·조정이 가능한 절차 기준 정립
	기초지자체 허가승인권 미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 각부처 및 교육청 사업 - 건축디자인 전면 시행 곤란 → 협의 의견제시과정에서 디자인 내용 검토·협의·조정 절차 기준 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광역정부가 승인을 갖는 택지개발, 도시개발사업 등 - 건축디자인 전면 시행 곤란 → 협의 의견제시과정에서 디자인 내용 검토·협의·조정 절차 기준 정립
민간시행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 - 건축디자인 전면 시행 곤란 허가권을 활용하여 사전에 디자인 내용 검토·협의·조정 가능 → 사업초기부터 디자인내용의 검토·협의·조정가능 절차 기준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등 - 건축디자인 전면 시행 곤란 허가권을 활용하여 사전에 디자인 내용 검토·협의·조정 가능 → 협의 의견제시과정에서 디자인 내용 검토·협의·조정 절차 기준 정립

2) 지방자치단체 건축디자인 기준 설정 기본방향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디자인 기준은 국가 건축 디자인 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법적인 측면에 있어서 제도적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적합한 변형은 필요하겠지만, 그 골격에 있어서는 국가건축디자인기준을 따라야 할 것이다.

기준 항목의 순서 및 구성체계 역시 가급적 국가디자인기준과 동일한 체계로 구성하되, 국토해양부 고시로서 법령체제로 구성된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의 구성체계를 따를 경우 각 기준 항목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담기 곤란하므로, 각 기준항목에 대한 해석 및 보완 설명이 첨부된 국가건축디자인 기준의 구성체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디자인 업무 절차기준으로서의 건축디자인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건축기본법의 취지에 적합하도록 계획·설계내용을 특정방향으로 규제하거나 유도하는 설계기준이나 지침이 아닌 계획·설계안을 수립하는 디자인 관련업무의 수행절차 및 지침을 규정하는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해지는 사업 유형별로 건축디자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체에 따라 사업시행절차 및 업무내용에 차이가 있으며, 디자인 관련 의사 결정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범위와 방식 역시 차이가 난다. 따라서 사업주체에 따른 유형별로 ‘단계별 건축디자인기준’과 ‘디자인 검토기준’을 구분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넷째,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분장 체제 및 업무절차에 대응하여야 한다.

사업영역 및 종류별로 각기 다르게 분담하여 추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볼때, 각 부서 업무수행과정에서 디자인 내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업무단계에 디자인 검토·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업무절차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더불어서 사업추진시 각 부서가 추진하는 행정업무 절차 및 과업단위에 대응하는 업무기준으로 설정함으로써 현행 업무추진절차안에서 건축디자인기준을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다섯째, 디자인의 검토·조정업무에 디자인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디자인 관련사업이 기획부터 유지관리까지 전 업무단계별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과정을 수반한다는 점에 비추어 봤을 때 디자인 전문인력이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기본법 제23조와 시행령 21조에서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장소별 설계기준 및 지침의 편철 구성이 요구된다.

지역사업중 당해 사업범위에 포함된 복수의 단위사업들의 설계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용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업별로 설계기준 및 지침을 수립하여 건축디자인 기준에 편철하여 첨부할 수 있는 체제로 구성되어야 한다.

3) 단계별 건축디자인 기준 설정 안)

우선 항목은 국가건축디자인기준의 구성체계를 따르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직할사업을 중심으로 단계별 건축디자인 기준을 설정한다. 이러한 항목은 건축디자인 관련사업 시행시 건축디자인 업무에 준수해야할 기준이 된다.

국가건축디자인 구성체계를 따르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업무단계에 대응하여, 각 업무단계별로 건축물과 공간환경 조성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들이 따라야 할 업무 절차를 기준으로 구성한다.

이와같은 업무단계별 건축디자인기준 항목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표 4-3〉 단계별 국가건축디자인기준과의 비교

업무 단계	세부 항목	주요내용	국가건축디자인기준 항목	지자체 적용가능 사항
기획	사업기본계획 수립	-소요예산책정 -후보부지 검토, 선정 -프로그램 개요, 시설 규모 및 사업추진방식 결정 -계획·설계용역·공사 발주방식 결정	-사업추진체계준비 -사전조사 -목표, 방향, 비전 설정 -프로그램 및 사업 추진방식 결정	-사업추진체계, 사전조사, 목표·방향·비전, 주요프로그램 및 사업추진방식 수렴 -발주방식과 통합설계 시행여부 추가 검토
	세부사업계획 수립	-세부사업내역작성		
계획·설계	계획·설계용역발주	-과업지시서/계획·설계지침작성, 계획·설계자 선정, 계약		-과업지시서/계획·설계지침작성, 계획·설계자 선정, 계약 항목 추가
	계획·설계과정관리	-계획·설계자가 진행하는 내용을 수시로 검토·관리 -소관부서, 설계자문위원회 등의 검토·협의	-대상지분석	-상위계획 추가
			-기본계획 및 통합 디자인 시행	-통합설계는 기획단계로 이동
			-기본안 검토 및 최종안 작성	-수렴
			-실시설계	-수렴
			-디자인검토 및 타당성 평가	-디자인검토기준에 관련기준을 별도로 설정
시공	공사발주	-시공자 및 공사감리자 선정, 계약	-디자인감리의 도입	-현행 법률체계에 적합하게 수정
	시공과정관리	-시공자가 진행하는 공사내용을 수시 검토·관리 -설계변경(소요발생시)	-협력체계 구축 -설계변경	-수렴
사용	사용 및 유지관리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사용, 운영 및 관리	-운영체계 구축	-수렴
			-지속적 관리	-모니터링으로 변경

(1) 기획단계

국가건축디자인기준에서는 프로그램 및 사업방식 결정 항목에 발주방식, 사업추진방식, 법적 계획수단을 결정하는 절차를 모두 담고 있으나, 실제 업무에서는 사업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사업이 포함하는 주요시설의 종류 및 규모, 사업추진방식과 예상조달 방법, 계획·설계 및 공사발주방식, 동원되는 법정 계획수단 등을 결정하며, 사업 시행방침이 결정된 이후에 세부사업계획 수립에서 계획·설계발주를 위해 세부 프로그램 내역을 작성하는 절차로 업무가 수행된다.

따라서, 국가건축디자인 기준의 프로그램 및 사업추진방식 결정 항목을 실제 업무수행 단계에 맞추어 주요 프로그램 및 사업추진방식 결정, 계획·설계 및 공사발주방식 결정, 세부 프로그램 내역결정으로 세분하여 기준항목을 추가함으로써 각 주요 업무단계에서 따라야할 절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통합설계 시행에 관련한 절차를 별도의 설계용역을 발주하거나 과업지시서 등에 명시하는 일이 필요하므로 사업기획단계에서 통합설계 시행방침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요 시행사항으로는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위한 절차기준을 기획단계부터 참여시켜 원칙화하고, 사업협력체 구성을 위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더불어서 각 사업의 시행방침 결정이전에 이루어지는 기획단계 업무수행을 전문가 참여업무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에 소요되는 예산의 확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통합설계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도시·건축·조경설계를 통합한 3차원 설계를 시행해야함을 기준화하고, 통상적인 도시계획 용역을 통해 시행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 용역으로 발주하여 별도 예산과 수행체제를 갖춘 설계업무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화하여야 한다.

(2) 계획·설계단계

국가건축디자인기준에서는 계획·설계용역 발주를 위한 과업지시서 및 계획·설계지침 작성업무에 대한 절차 기준이 분명치 않으며, 계획·설계용역 발주단계에서 발주방식별로 계획·설계자 선정에 대해 진행하는 업무에 대한 기준도 담고 있지 않다. 이러한 업무는 계획·설계 질 확보와 좋은 계획·설계자 선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업무로서 이에 대한 명확한 업무절차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서는 과업지시서 및 계획·설계지침은 계획·설계자가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과 창의적 노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적절하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계획·설계자의 선정에 대해 평가나 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목표와 취지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총괄계획가가 평가·심사에 반드시 참여토록 명시하여야 하며, 선정된 계획·설계자는 계획·설계수행과정에서 총괄계획가 및 관련주체들과 협력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시공단계

국가건축디자인기준에서 시공단계 업무에서 도입토록 하고 있는 디자인감리를 현행 국토해양부 고시내용(2009-129호)⁴⁵⁾에 적합하도록 사후설계관리업무로 변경하여야 한다. 이로서 설계자에 의한 사후설계관리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기준화하여야 한다.

사후설계관리업무는 시공의 품질과 안전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시공감리업무와는 달리 설계도서의 해석, 자문, 현장여건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설계업무를 말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설계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협력체계구축을 원칙화할 필요성이 있다.

복수의 단위사업들을 포함하는 지역사업의 경우 단위사업별로 시공주체가 다르므로 조화로

45)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운 공간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이들 각각의 연계·조화를 위한 협의 및 조정이 중요하게 대두되는 바 시공업체들간의 협력을 위한 시공협의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4) 사용 및 유지관리 단계

사용 및 유지관리단계는 크게 운영체계 구축과 디자인 모니터링으로 크게 양분된다. 운영체계구축은 시설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운영 관리주체가 시설운영체계 구축을 업무기준화하여야 한다.

시설의 범위와 운영관리주체가 명확한 시설은 사용자와 관련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운영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 완료이후 주민들의 개별적인 자력개발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지역사업에서는 이들 개발행위들이 당초의 정비계획등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코디네이터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디자인 모니터링제도는 평가와 환류로 양분되는데, 디자인의 성패의 판단은 유지관리단계에서 평가되는 것이며, 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관련 업무를 개선하는 노력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운영관리주체로 하여금 시설의 사용실태 및 사용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기록하도록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시설 운영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차후 유사사업의 개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기준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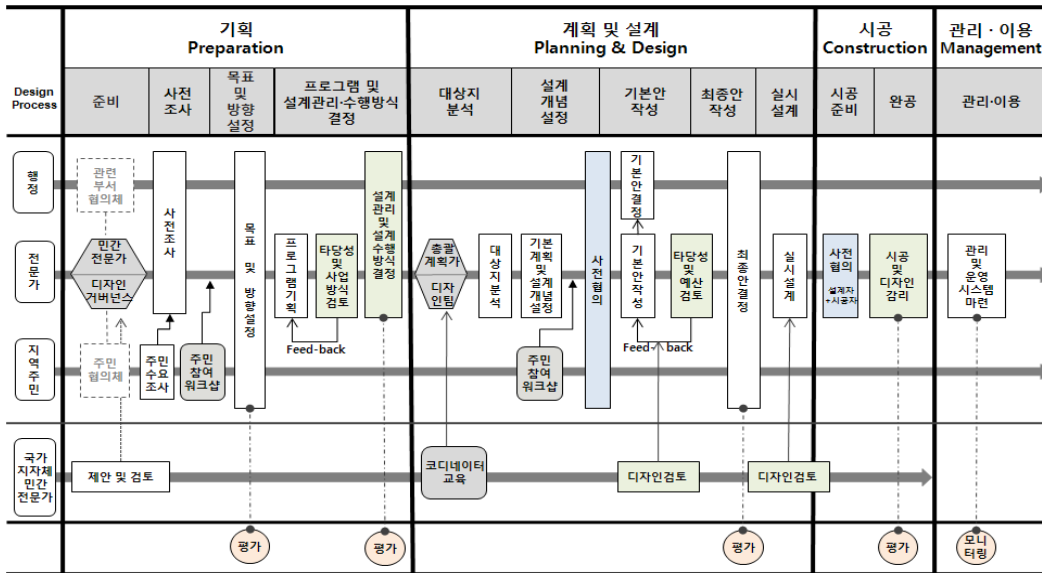
〈표 4-4〉 단계별 건축디자인기준에 따른 업무단계별 수행업무 및 주체

구분		업무절차	수행필요업무	수행주체
기획	사업 기본 계획 수립	사업추진체계준비	-기획업무 예산마련	담당부서
			-총괄계획가 위촉	디자인부서+담당부서
			-사업협의체 구성	디자인부서+담당부서
		사전조사	-조사 실행계획 수립	담당부서+총괄계획가
			-사전조사 실행	담당부서
		사업목표 및 방향, 비전설정	-사업협의체 등 협의	사업협의체+총괄계획가
			-목표방향비전설정	총괄계획가+사업협의체
	주요 프로그램 및 사업추진방식 결정	-프로그램 및 사업추진방식 결정	담당부서+총괄계획가	
		계획·설계 및 공사 발주방식 결정	-발주방식검토, 결정	담당부서+총괄계획가
			-통합설계방침 결정	담당부서+총괄계획가
시행 방침 결정				
세부 사업 계획 수립	세부프로그램 내역 결정	-내역작성 및 결정	담당부서+전문업체+총괄계획가	
계획 설계	계획 설계 용역 발주	과업지시서, 계획·설계지침 작성 및 계획·설계자 선정	작성업무수행	담당부서+총괄계획가
			통합설계자 선정	담당부서+총괄계획가
			계획 설계자 선정	담당부서+총괄계획가
	계획 설계 과정 관리	상위계획 및 대상지 분석 기본계획안 검토 및 최종안 작성 실시설계	-분석업무수행	계획·설계자
			-검토 및 협의체 협의	사업협의체+계획·설계자
			-실시설계협의회 구성	디자인부서+담당부서
	-설계협의	총괄계획가+실시설계협의회 +계획·설계자		
시공	공사 발주	(사후설계관리업무)	-(사후설계관리업무 발주)	담당부서
	시공 과정 관리	협력체계구축	-시공협의체 구축	담당부서
		설계변경	-설계변경 여부 결정	담당부서+총괄계획가
			-설계변경 설계수행	계획·설계자+총괄계획가
사용	사용 및 유지 관리	운영체계 구축	-운영관리협의회 구축·운영	담당부서
			-코디네이터조직 구성·운영	담당부서+디자인부서+총괄 계획가
		모니터링	-사용실태 모니터링	담당부서+운영관리협의회
			-결과 검토, 필요조치	담당부서+총괄계획가

자료 : 영주시 건축디자인 기준 설정연구, p87, 재정리

이러한 건축디자인기준은 가장 보편적으로 직면한 건축물 및 공간환경디자인의 문제에 대응하여 디자인 행위가 유발하는 부적합한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각 개발행위 및 계획수립허가 과정에서 행정적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주요대상으로 하는 경관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3D 시뮬레이션에 의한 계획을 수립할 때 지켜야 할 규범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신도시조성사업을 비롯하여 도시정비사업 등 다양한 유형의 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디자인과정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3〉 디자인 과정 전체 단계별 디자인 기준



4. 건축디자인 적용 및 확대방안

1) 건축기본계획의 수립

건축기본법 제12조에 의거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건축기본계획을 선택적으로 수립, 시행할 수 있으며 법적 근거를 가지는 법정계획으로 건축과 공간환경의 미래상을 다져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에 의거하여 충청남도는 도시간 경쟁시대에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선도 지자체로서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시·군은 선택적으로 계획을 수립 할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중에서는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가 광역건축기본계획을 현재 작성중이라는 점에서 충청남도에게는 자극제가 될 수 있다.

또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김해, 안양, 포항 등이 도시가 발 빠르게 각종 도시예술축제와 디자인 전담팀을 구성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으나 충청남도의 시·군은 기초건축기본계획 작성을 위한 실천적 행보에 있어 그 시도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은 자치단체의 선택적 사안일지라도 21세기의 도시경영에 있어 가장 효율적인 실천수단임을 감안하고, 디자인의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는 효율적인 장치임을 고려할 경우에는 전략적 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2) 교육 및 홍보방안

충청남도의 공무원에 대해서 사전 조사시 관련공무원은 건축기본법 및 건축디자인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건축디자인 기준에 대한 실무자 교육과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야할 것이다.

첫째, 건축디자인제도는 행정실무자뿐만 아니라 주민 및 관련단체의 참여가 절실한 바, 행정주도의 계몽적 교육프로그램이나 일방향적 홍보는 과거의 전례를 답습하는 수준에 머무를 것이므로 흥미와 참여가 전제되는 교육과 홍보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건축디자인기준 홍보자료 제작·배포, (가칭) 건축과 공간환경 강연시리즈, (가칭) 건축디자인 포럼, 현장중심의 체험학습 프로그램, 담당 및 관련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선진지 벤치마킹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건축과 공간환경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행정만의 노력으로 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참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우선 건축도시지원센터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행재정적 공간을 우선 시행하고 점진적으로 시민사회단체의 구성원과 관할지역을 사업지역으로 하는 건축가, 도시계획가, 조경가 등 전문가들의 연대체제를 구성하도록 행정이 지원해야한다.

셋째, 건축 및 공간환경 답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한다. 지역의 다양한 건축문화자산을 알리고 이를 통해 애향심과 자긍심을 증진함으로써 건축디자인기준의 조기정착과 실효성을 획득할 수 있다. 그 일환으로 건축 공간환경 답사 프로그램을 평생교육프로그램의 하나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정책제언

21세기 도시중심시대로 흐르면, 개별 도시들은 공간의 가치가 부각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하는 삶의 질 향상과 도시브랜드 제고, 관광수입 증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창조적인 도시디자인을 적극 도입코자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입장에서 단기간내에 가장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제도적인 틀을 구축 데에 목적이 있다. 이러한 충청남도의 건축디자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구축 방안을 도출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목적하에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선진사례 검토시 건축디자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통합적인 조직을 구성한다는 점, 전문분야 및 행정의 개선을 위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효율성 증대와 통합적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건축관련 추진기구를 조직운영하고, 해당 추진기구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속기관으로 두어 그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점,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부터 디자인 심의 및 자문기능을 강화하고, 민간부문으로 병행 및 확대하고 있다는 점, 넷째, 공공재단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발굴·기획·운영하고 있다는 점과 건축단계별 평가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었다.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도입하기 위해 해결해야할 과제로는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 건축디자인관련한 통합적 관리를 위한 전문조직을 구성해야한다는 것이다. 충청남도에서는 공공

디자인을 시작으로 경관계획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공감하고, 이에 대한 관련조직의 통합부서 운영이 아산시와 보령시를 보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통합부서는 아직은 디자인 관리차원의 협력체계가 아니라 행정지원 차원의 협력체계라고 볼 수 있으며, 도시공간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협력체계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둘째, 디자인의 질적향상을 위한 건축디자인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디자인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의 역량에 따라서 그 결과물의 수준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일반적이며, 이로 인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디자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셋째, 단기적으로는 공공에서 디자인관리를 시작하고, 장기적으로는 민간건축물에 대한 디자인관리를 위한 검토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건축가 중심의 디자인 거버넌스를 구축해야한다.

충청남도·시·군에서는 전담조직을 조직하는데 있어 현재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바, 단기적으로는 해당 시·군의 예산과 인력 등의 현실적 조건을 고려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행정참여 촉진과 주민참여 행정의 구현이라는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담조직 및 상설기구 형태인 디자인 관리단의 형태로 추진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도적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축디자인을 제도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서 조례의 제정은 강력한 제도이나, 조례는 상당기간의 준비기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과 주민을 비롯한 일선 공무원의 의식변화에 따른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의회의 동의와 일정기간 동안의 설득이 필요하다는 점이 단점으로 거론되므로, 단기적으로는 훈령과 예규를 통한 건축디자인 제도의 질적 성숙을 유도하는 전략을 취해야 할 것이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건축기본법에 의한 시범사업의 다양화와 확대가 예상되는바, 다양한 건축도시 공간환경 만들기 경쟁사업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2.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에서는 문헌검토와 관련 공무원 인터뷰를 통해서 추진방향에 대한 설정측면에서는 정책적 함의를 얻을 수 있지만,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제로 남게 된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광역건축기본계획과 기초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해당지역의 현실에 맞게끔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건축디자인과 관련하여 시행상에 발생할 문제에 대한 법적인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아직 건축디자인 제도는 우리나라에 생소한 제도이고, 이를 시험적으로 추진하여 경험적으로 얻어진 결과가 없다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그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전반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둘째,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에 감안한 건축기본계획의 수립과 더불어 관련주체간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것은 단시간내에 이루어지는 사안이 아닌만큼 장기간에 걸친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건축디자인관련하여 타 위원회와의 중복성을 탈피하기 위한 심의·자문기준 마련을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타위원회에서 행해지는 심의내용과 자문내용을 검토하고, 건축디자인이 자리잡아야할 심의 기준 마련 또는 통합적 심의를 구축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강인호, 건축기본법의 이해와 건축정책의 새로운 방향 모색, 건축정책위원회 세미나, 2009.
- 김득근, 도시경관 정체성 제고를 위한 가로시설물 디자인 개선방안, 청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김상호,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디자인 개선을 위한 출발점, 대한건축학회 건축문화위원회 자료집, 2008.
- 김상호, 건축정책기본계획의 구성과 특징, 건축 통권제53권, 제12호, 2009.
- 김성보, 공공디자인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방안 : 서울시 공공디자인 정책을 중심으로 , 홍익대학교 대학원, 2009.
- 김정연, 구마모토의 아트폴리스 프로젝트 및 경관행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충남발전연구원, 2002.
- 김한배, 도시경관계획의 작성방식에 관한 비교연구, 국토계획, 제38권 5호, 2003
- 김혜정, 건축기본법과 제 1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역할, 건축 통권제53권, 제12호, 2009.
- 김효정 외 , 도시경관관련 법률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4
- 김효정, 건축문화 중장기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8.
- 나한주, 경관법 제정에 따른 도시경관행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민범식 외2, 도시경관관리제도 정비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05
- 민현준, 도시 공간환경 디자인에 있어서의 프로세스적 접근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34권 제9호, 2008
- 서수정, 건축기본법에 의한 지방정부 건축디자인 기준의 바람직한 기획운영, 건축과사회, 제13권, 2008
- 신두식, 건축의 공공성 향상을 위한 건축문화진흥정책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9.
- 오준걸, 건축적 관점에서 본 공공디자인의 개념과 영역, 대한건축학회 건축발전모임 자료집, 2008.
- 윤의식, 경관법 제정을 통해 본 국토 경관정책 방향, 도시문제 9월호, 2006
- 이상진, 공공디자인을 위한 국가건축문화정책의 역할과 방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제24권

제8호, 2008.

- 이여경 · 이정형, 우리나라 경관시책의 현황에 관한 연구, 2007 한국도시설계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 한국도시설계학회, 2007
- 이인성, 경관관련 기존제도의 문제점과 경관법의 제정방향, 도시문제 9월호, 2006.
- 이정만, 건축기본법 시대에 건축의 기본을 찾기 위해서, 건축, 2008
- 이주영, 건축기본법 및 경관조례 제정과 울산도시디자인 방향, 울산발전연구원, 2008.
- 이형복, 지방자치단체의 경관행정과 경관법, 도시문제 9월호, 2006
- 정성구, 건축정책기본계획과 건축디자인 기준의 수립방안, 광주발전연구원, 2009.
- 조성용, 이탈리아의 건축기본법 제정과 건축사의 지위, 건축과 사회 제17권, 2009
- 조임식 · 김광현, 건축의 공공적 인식과 참여를 증진시키는 해외 건축센터의 역할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2009.
- 최환용(2005), 일본의 경관보호법제, p36.
- 하태석, 건축기본법과 건축계, 건축과 사회, 제10권, 2007.
- 한상욱, 공공디자인 관련법규 및 정책, 충남발전연구원, 2009.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영국의 공공건축 디자인 관리정책, Auri Brief, 2009. 7. 20
- 국토해양부, 건축기본법 연구, 2006.
- 국토해양부, 공공도시건축과정에서 민간전문가 참여방안 연구, 2007
- 국토해양부,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기획, 2009.
- 국토해양부, 살고싶은 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경관건축디자인 설정방안 연구, 2008.
- 국토해양부, 수변공간 도시 디자인전략 연구, 2009.
- 국토해양부, 행정중심복합도시 좋은건축물 지정제도 도입방안 연구, 2007.
- 대한건축학회, 건축기본법 및 건축정책기본계획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2008.
- 대한주택공사,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조경학회, 경관법제정을 위한 연구, 2006.
- 문화관광부, 공공디자인 진흥법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 2006.
- 영주시, 영주시 건축디자인기준 설정연구, 2010.

무 료

<부록 1> 건축기본법 및 시행령

<p>건축기본법 [법률 제8852호, 2008.2.29, 타법개정]</p>	<p>시행령 [대통령령 제222697호, 2010.7.12, 타법개정]</p>
<p>제1장 총칙</p> <p>제1조 (목적) 이 법은 건축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정하고 건축정책의 수립·시행 등을 규정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공동의 노력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의 안전·건강 및 복지에 직접 관련된 생활공간의 조성 2.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조정하고 수용하며 경제활동의 토대가 되는 공간환경의 조성 3. 지역의 고유한 생활양식과 역사를 반영하고 미래세대에 계승될 문화공간의 창조 및 조성 <p>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속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공간환경(공간환경)"이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공공공간 및 경관을 말한다. 3. "공공공간(공공공간)"이란 가로·공원·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건축디자인"이란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조성으로 건축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설계하고 개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5. "품격"이란 주변환경과의 관계, 규모, 형태, 구조, 재료, 시공수준 등을 통하여 그 목적과 지역의 정체성을 창출할 수 있는 적절성을 말한다. 6. "품질"이란 안전, 보건, 기능, 쾌적, 자원절약과 재활용 등의 객관적 성능을 말한다. 7. "건축"이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p>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 「건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1조제1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제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p>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단체의 장 등에게 소관별 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가건축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관별 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0조에 따른 건축정책기본계획(이하 "건축정책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의 배경 및 목적 2.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3. 소관별 계획의 작성요령 <p>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소관별 계획을 제출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관별 정책 또는 사업이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과 부합하는지 여부 2. 소관별 정책 또는 사업의 타당성 3. 소관별 정책 또는 사업 간의 상충 여부 4. 소관별 정책 또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중요도 5. 소관별 정책 또는 사업의 기대효과 6. 소요 재원의 확보 가능성

<p>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건축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건축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직접 발주하거나 건축주가 되는 경우 우수한 건축디자인을 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홍보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분야 전문지식의 발전과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p> <p>제5조 (국민의 의무) ①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축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건축주 및 발주자는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하여 설계자와 시공사 등을 선정하고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며, 소유자 및 관리자는 제2조에 따른 건축의 공공적 가치가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p> <p>③ 건축 관련 전문가는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이에 근거하여 독립되고 공정한 입장에서 국민의 건축에 대한 이해를 돕고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건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건축정책의 기본방향</p> <p>제7조 (건축의 생활공간적 공공성 구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고 그 안전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④ 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 조사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제11조 각 호의 사항과 관련이 있는 각종 통계자료·보고서·도서 및 문서 등을 말한다.</p> <p>제3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11조제1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진흥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에 대한 국민 교육과 홍보 2.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보존에 관한 사항 3.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4. 건축물과 공간환경에 관한 기록자료의 구축 5. 건축문화진흥 관련 주민자치기구의 설립과 운영 지원 등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건축문화진흥을 위하여 의결한 사항 <p>제4조(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광역건축기본계획 및 기초건축기본계획(이하 "지역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건축기본계획 중 해당 계획의 기본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p> <p>제5조(당연직 위원)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0.3.15, 2010.7.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획재정부장관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3. 외교통상부장관 4. 통일부장관 5. 법무부장관 6. 국방부장관 7. 행정안전부장관 8.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사용자의 건강과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의 이용을 배려하여 조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제8조 (건축의 사회적 공공성 확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다원적(다원적) 문화에 부응하고 미래사회의 문화적 요구변화와 기술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건축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이 미래세대에 계승되는 사회·경제적 자산으로서 조성되고, 그 가치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p> <p>③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조성하고 사용하는 과정 등에 있어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재이용과 재생을 촉진함으로써 자연과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p> <p>제9조 (건축의 문화적 공공성 실현) ①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조성하여 사용하는 전 과정에서 건축의 문화적 가치가 향상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문화적·산업적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창의성이 존중되어야 한다.</p> <p>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이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풍토나 역사 또는 환경에 적합하게 조성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유산을 보전하고, 새로운 건축물 및 공간환경이 기존의 공간환경과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조성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시행한 건축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책성파를 평가하는 등 건축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3장 건축정책의 수립</p> <p>제10조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건</p>	<p>9.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10. 지식경제부장관 11. 보건복지부장관 12. 환경부장관 13. 고용노동부장관 14. 여성가족부장관 15. 국토해양부장관 16. 법제처장</p> <p>제6조(위촉위원의 임기) 법 제1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p> <p>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국가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대표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8조(위원회 회의) 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②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9조(간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 제17조에 따른 기획단의 장이 된다.</p> <p>제10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정책조정분과위원회, 국토환경디자인분과위원회 및 건축문화진흥분과위원회를 둔다.</p> <p>② 제1항의 정책조정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정책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중앙행정기관 간 건축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기획·설계 등에 대한 심의·조정 4. 건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다른 분과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	--

<p>축정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제13조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 후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08.2.29></p> <p>③ 건축정책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p> <p>④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에게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 등에 관한 소관별 계획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⑤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정책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⑥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1조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 건축정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건축의 품격 및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4.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대책 6. 우수한 설계기법 및 첨단건축물 등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7. 건축분야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건축디자인 등 건축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9. 건축문화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p>아니하는 사항</p> <p>③ 제1항의 국토환경디자인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디자인 향상에 관한 사항 2.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3. 제21조제2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추천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한 경관조성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p>④ 제1항의 건축문화진흥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초 건축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3. 전문 건축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4. 건축교육정책에 관한 사항 5. 건축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우수 설계기법의 연구 지원 및 첨단기술의 개발 지원 <p>⑤ 각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위원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중에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p> <p>⑥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⑦ 분과위원회 및 자문단의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p> <p>제11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요청)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제12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p>
---	---

<p>10. 건축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 및 선도시범 사업에 관한 사항</p>	<p>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p>
<p>11.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시행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진흥에 필요한 사항</p>	<p>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2조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지역의 현황 및 사회·경제·문화적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을 위하여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광역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필요한 경우 건축정책기본계획 및 광역건축기본계획에 따라 시·군·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초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p>	<p>제13조(수당 등)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 직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광역건축기본계획 및 기초건축기본계획(이하 "지역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제18조에 따른 시·도건축정책위원회 또는 시·군·구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p>	<p>제14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p>
<p>③ 지역건축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p>	<p>제15조(건축 기본조사)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p>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기초건축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1. 건축 선진국의 건축 현황과 건축정책에 관한 사항</p> <p>2. 건축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전망</p> <p>3. 건축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양성·활동 및 해외진출 등 현황</p> <p>4. 건축물 및 공간환경에 관한 기록 자료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5. 건축문화유산의 유지·관리 및 보존 현황</p> <p>6.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에의 지원 실태</p> <p>7. 그 밖에 법 제15조에 따른 국회 보고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⑤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6조(기획단) ① 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제4장 건축정책위원회</p>	<p>1.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회의 준비</p> <p>2.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작성</p> <p>3.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p> <p>4. 그 밖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모든 업무 지원</p>
<p>제13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①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관계 부처의 건축정책의 조정 및 그 밖에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건축정책</p>	

<p>위원회를 둔다.</p> <p>② 제1항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가건축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건축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 자 ④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p>제14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정책기본계획을 포함한 건축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건축분야 발전에 관한 주요 사업의 지원 3.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4. 건축문화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5. 국민의 건축문화 향유기회의 확대에 관한 사항 6.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7. 건축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건축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p>제15조 (건축정책 국회보고)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건축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2년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성과 등에 관한 사항 2. 미래사회의 건축환경 변화 전망 및 대책 3.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과 사업 등에 관한 사항 	<p>② 기획단의 장은 대통령실의 건축정책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이 겸직하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p> <p>③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계약직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기획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p> <p>제17조(지역건축위원회)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위원회"란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건축위원회를 말한다.</p> <p>제18조(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려면 사전에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의 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의 사항을 포함한 재정지원 계획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20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보존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 2. 건축문화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 3. 건축물과 공간환경에 관한 기록자료의 구축사업 4. 그 밖에 건축문화진흥을 위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p>제19조(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디자인 기준을 설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건축디자인 체계의 확립에 관한 사항 2. 건축디자인 기준의 목표 및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 3. 건축디자인 기준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	---

<p>4. 건축환경, 문화 창달을 위한 지역의 풍토성 및 전통성 계승에 관한 시책</p> <p>5. 건축제도·기준 등의 국제화에 관한 사항</p> <p>6. 건축기술·건축설계의 발전,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p> <p>7. 그 밖에 건축에 관한 중요 사항</p> <p>제16조 (건축 기본조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축에 관한 각종 통계, 건축물 현황, 건축에 관한 인식도 및 기대수준, 그 밖에 제15조제2항 각 호와 관련되어 필요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제1항의 조사사항 중 일부에 대하여 이를 직접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p> <p>제17조 (기획단) 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기획단을 둔다.</p> <p>②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8조 (지역건축위원회) ① 지역의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및 그 밖에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건축정책위원회(이하 "광역건축위원회"라 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건축정책위원회(이하 "기초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② 광역건축위원회 및 기초건축위원회(이하 "지역건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조직,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위원회가 이</p>	<p>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하는 건축디자인의 조성 목표와 그 수행 과정에 관한 사항</p> <p>제20조(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또는 법 제18조에 따른 시·도건축정책위원회(이하 "광역건축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경우: 광역건축정책위원회.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로 한다. <p>② 법 제22조제1항제3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역이나 지구의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건축구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라 결 정된 경관지구 또는 미관지구 <p>③ 시범사업 중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또는 광역건축정책위원회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범사업의 사업자는 시범사업의 건축디자인에 관한 조정 및 심의를 담당할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시범사업의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정하거나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④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시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를 시범사업의 기획·설계·총괄·조정 등의 업무 담당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p> <p>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시범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획제안(시범사업의 목표와 내용 등을 검토하고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구를 통합적으로 수렴하여 시범사업의 개발 방향·규모 및 추진계획 등을 제안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선제안(기존의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p>
--	--

<p>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p> <p>제19조 (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 지역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지역의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해당 지역의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3.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사항 <p>제5장 건축문화의 진흥</p> <p>제20조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국고 보조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문화 관련 시설의 설립 및 운영 2. 출판·전시·축제 등 건축문화 관련 사업 3. 국민의 건축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4. 건축 관련 해외 진출 및 국제교류 5. 제21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6. 제22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7. 그 밖에 건축문화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p>제21조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축디자인(공공공간을 제외한다)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공공간의 건축디자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의 범위 안에서 지역 내 건축디자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p>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물 및 공간환경 시설물의 소유자·관리자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에 따르도록 권장할 수 있다.</p>	<p>을 지속가능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유지·관리 방안과 성능 향상 방안, 용도변경 등을 통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보존·재활용 및 재생 방안 등을 제안하는 용역을 말한다) 및 설계공모 등 건축디자인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p> <p>제21조(민간전문가의 참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기술사(「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를 말한다) 3. 대학에서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p>②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건축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민간전문가로 추천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건축·도시 관련 기획 및 설계 업무에 대한 조정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정책에 대한 자문과 건축민원 업무의 처리 3. 다수의 사업자 또는 설계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및 관리 4. 건축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과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에 대한 기획·설계 등 <p>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p> <p>부칙 <대통령령 제20852호, 2008.6.20>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p> <table border="1" data-bbox="763 1489 1120 1564"> <tr> <td colspan="2">국토해양부 건축문화팀</td></tr> <tr> <td>연 락 처</td><td>(02) 2110 - 8228</td></tr> </table> <p>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3.15> (보 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p>	국토해양부 건축문화팀		연 락 처	(02) 2110 - 8228
국토해양부 건축문화팀					
연 락 처	(02) 2110 - 8228				

<p>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 설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2조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건축디자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건축디자인을 개선하는 개발·정비사업 3. 민간에서 발주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p>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절차, 건축디자인 기준의 적용, 재정지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3조 (민간전문가의 참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조정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민간전문가의 자격·업무범위·보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4조 (설계공모의 시행)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우수한 건축물 및 공간환경 설계의 선정을 위하여 설계공모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부칙 <법률 제8783호, 2007.12.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제11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1. 보건복지부장관 14. 여성가족부장관 <p>⑧부터 <187>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7.1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3. 고용노동부장관 <p>⑪부터 <136>까지 생략</p>
---	---

<p>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1>까지 생략</p> <p><552> 건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0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12조제4항 본문 및 단서,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제2항 전단,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1항·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p> <p>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p> <p>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p> <p><553>부터 <760>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	--

<부록 2> 경관법 및 시행령

경관법 [법률 제8974호, 2008.3.21, 타법개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847호, 2009.11.26,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토의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하여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관"이란 자연, 인공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2조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에 따라 법 제6조에 따른 경관계획(이하 "경관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작성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광역시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제안을 경관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을 경관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하려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것 외에 경관계획의 수립 제안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 경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1. 지역의 고유한 자연·역사 및 문화를 드러내고 지역주민들의 생활 및 경제활동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지역주민의 합의를 통하여 양호한 경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2. 개발과 관련된 행위는 경관과 조화·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 3.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함과 동시에 새롭게 형성되는 경관은 개성 있는 요소를 가지도록 유도할 것 4. 각 지역의 경관이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적인 경관행정 운영방식을 권장하고, 지역주민이 이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5. 국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	제3조 (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8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여야 할 구역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이하 "경관사업"이라 한다)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쾌적하고 양호한 경관형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하여	

<p>야 한다.</p> <p>③ 국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p> <p>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경관계획</p> <p>제6조 (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광역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이하 "경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관계획의 대상지역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한다. 2. 경관계획의 대상지역이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3. 경관계획의 대상지역이 2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해당 시장·군수가 요청하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수립한다. 4.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한다. <p>제7조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제6조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자에게 제안내용을 첨부하여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경관계획의 제안, 제안서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하는 사항</p> <p>제4조 (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농산어촌 경관 및 시가지 경관에 대한 장기적 방향을 제시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할 것 2. 지역적 특성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경관계획의 독창성과 다양성이 확보되도록 할 것 3. 경관계획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수립되도록 할 것 <p>② 법 제8조제2항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물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산림청장을 말한다. <개정 2008.2.29></p> <p>제5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의 대상) 법 제9조에 따라 기초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형, 지세(地勢), 수계(水界) 및 식생(植生) 등 자연적 여건 2. 인구, 토지 이용, 산업, 교통 및 문화 등 인문·사회적 여건 3. 경관과 관련된 다른 계획 및 사업의 내용 4. 그 밖에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 <p>제6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경관계획의 수립 지역을 주된 보급 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3.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p>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p>
--	---

<p>제8조 (경관계획의 내용) ① 경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이하 "경관지구"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미관지구(이하 "미관지구"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경관관리 행정체계 및 실천방안에 관한 사항 6.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p>② 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p> <p>③ 경관계획은 도시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부합되어야 하며, 경관계획의 내용이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p> <p>제9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이미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p> <p>제10조 (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제7조 (경관계획의 승인 등) ① 시장·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면 경관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9조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 3.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해당 지방의회 의견 4.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포함한다) 및 자문(시장·군수가 자문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결과 <p>② 법 제1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경관계획의 공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p> <p>제8조 (경관사업 사업계획서)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의 목표 2. 사업주체 3. 사업 내용 및 추진방법 4.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5. 유지관리 방안 6. 사업비용 7.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p>제9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소유자 2. 지상권자 3. 그 밖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중 그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 <p>제10조 (경관협정의 내용) 법 제16조제4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p>
---	---

<p>③ 도지사는 제6조제3호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기한을 명시하여 경관계획안을 관계 시장·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경관계획안을 송부받은 시장·군수는 명시된 기한 이내에 그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p> <p>제11조 (경관계획의 승인 등) ① 시장·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을 승인하거나 제6조에 따라 직접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p> <p>③ 시·도지사는 경관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④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⑤ 도지사가 경관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관계 서류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제12조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관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를 경관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p> <p>제3장 경관사업</p>	<p>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녹지, 가로, 수변공간(水邊空間) 및 야간조명 등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2. 경관적으로 가치가 있는 수목이나 구조물 등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p>제11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이하 "경관협정운영회의"라 한다)의 대표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의의 설립을 신고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서를 설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명칭 및 소재지 2. 대표자 및 회원명단 3. 운영 목적 및 방법 4. 기능과 역할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p>제12조 (경관협정의 공고 등)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공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경관협정이 유효한 기간 동안 경관협정 관련 서류를 해당 시청·군청 또는 관할 지역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제13조 (경관협정의 승계자) 법 제2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신고한 자를 말한다.</p> <p>제14조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	---

<p>제13조 (경관사업의 대상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경관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2. 지역의 녹화와 관련된 사업 3.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4.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의 경관을 살리는 사업 5.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p>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외의 자는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그 경관계획을 수립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경관사업을 승인하기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제14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시민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경관사업추진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p> <p>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사업계획의 수립, 경관사업의 추진 및 사후관리 등의 단계에 참여하여 경관사업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제15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관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의 목표 2.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 3.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4. 사업비용(지원이 필요한 금액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p>제15조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08.6.20, 2009.11.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2. 「건축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건축위원회 3.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도시공원위원회 6.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위원회 <p>제16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와 경관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려면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p> <p>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경관위원회 및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경관위원회 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하며,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p> <p>③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	---

<p>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p> <p>제4장 경관협정</p> <p>제16조 (경관협정의 체결) ① 토지소유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쾌적한 환경 및 아름다운 경관형성을 위한 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을 경관협정 체결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협정의 효력은 경관협정을 체결한 소유자등에게만 미친다.</p> <p>② 일단의 토지 또는 하나의 토지의 소유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그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구역을 경관협정 대상지역으로 하는 경관협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소유자 1인을 경관협정 체결자로 본다.</p> <p>③ 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을 체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1인이 경관협정을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p>④ 경관협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08.3.2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의 의장·색채 및 옥외광고물(「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2. 공작물(「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축조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건축설비의 위치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외부공간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5. 역사·문화경관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⑤ 소유자등이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경관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경관협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관협정의 명칭 2. 경관협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범위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것 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제17조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비용 등을 지원받는 경관협정의 결정 2. 다른 법령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 <p>제18조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경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경관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p> <p>③ 경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회의의 의원 2.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경관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디자인·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p>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p> <p>⑤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⑥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⑦ 경관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p> <p>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것 외에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	---

<p>3. 경관협정의 목적 4. 경관협정의 내용 5. 경관협정 체결자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명칭 및 주소 6. 경관협정의 유효기간 7. 경관협정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경관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p> <p>제17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① 제16조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는 경관협정서의 작성 및 경관협정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정체결자들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운영회(이하 "경관협정운영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 및 위원을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18조 (경관협정의 인가) ①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경관협정서를 작성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가신청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인가를 하기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인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제19조 (경관협정의 변경) 제16조 및 제18조는 경관협정의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p> <p>제20조 (경관협정의 폐지) ①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경관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p> <p>② 제18조제2항은 경관협정의 폐지에 관하여 준용한다.</p>	<p>부칙 <제20376호, 2007.11.13> 이 영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농림부장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으로 한다.</p> <p>⑫ 부터 <138> 까지 생략</p> <p>부칙(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0854호, 2008.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p> <p>② 부터 <22> 까지 생략 제6조 생략</p> <p>부칙(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1847호, 2009.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p>
--	--

<p>제21조 (경관협정의 준수 및 승계) ① 경관협정의 대상이 되는 구역 안에서 제16조제4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협정체결자는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인가된 경관협정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p> <p>② 경관협정이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후 경관협정의 대상이 되는 구역 안에서 협정체결자인 소유자등으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받은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경관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p> <p>제22조 (경관협정에 관한 지원)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경관협정서 작성 등의 자문 등 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경관위원회</p> <p>제23조 (경관위원회의 설치) ①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소속으로 경관위원회를 둔다. 다만, 경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p> <p>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건축 등 경관 관련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와 경관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칠 수 있다.</p> <p>제24조 (경관위원회의 기능) 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 경관계획의 승인 3. 경관사업의 승인 4. 경관협정의 인가 5.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한다.</p> <p>제1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3.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p> <p>③ 부터 <20> 까지 생략</p> <p>제6조 생략</p>
--	--

② 경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경관조례의 제정에 관한 사항
4. 경관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경관협정의 체결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25조 (경관위원회의 구성·운영)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8478호, 2007.5.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55> 까지 생략

<556> 경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5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건축법) <제8974호, 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경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2호 중 "제72조제1항"을 "제83조제1항"으로 한다.

⑤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록 3>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325호, 2009년 12월 28일)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기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건축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설계하고 개선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격 및 역할) ① 이 기준은 디자인 자체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만들기 위한 의사결정과 관련한 원칙과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다.

② 이 기준은 건축·도시 관련 행정담당자, 사업시행자, 관련 전문가, 지역주민 등 공공부문 건축디자인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들이 따르거나 참고하여야 할 지침이다.

제3조(기본방향) ① 좋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업의 목표, 방향, 사업방식 등 큰 틀을 결정하는 초기 기획업무가 강화되어야 한다.

② 초기 기획과정에서 정해진 사항은 계획 및 설계, 시공, 운영 및 관리 등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

③ 좋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장소만들기 관점에서 건축, 토목, 조경 등 관련된 각 분야가 통합된 디자인이 구현되어야 한다.

④ 통합디자인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의 역할이 중시되어야 하고, 관련되는 여러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력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① 이 기준은 「건축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명시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지역 내 건축디자인 기준을 따로 정할 경우 지역의 특성에 따라 적용대상을 세분하여 정할 수 있다.

제5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건축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

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에 적용된다.

② 이 기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기획·설계하고 개선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적용될 수 있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3. 가로특화사업,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등
4.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물 조성사업 등

③ 이 기준은 민간에서 시행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기획·설계하고 개선하는 사업에도 적용될 수 있다.

제6조(지역 기준의 설정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이 기준의 범위 안에서 적용대상·범위, 디자인 단계별 기준, 실효성 확보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지역 내 기준을 따로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의 특성이나 여건을 반영하여 필요한 경우 이 기준에서 제시된 내용을 선별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기준에 따라 하천, 교량, 공공청사 등 구체적인 시설별 디자인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때에는 사업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이 기준 및 지역 기준과 조화되도록 별도로 사업별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기준, 지역 기준 및 사업별 기준을 토대로 좋은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나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구성체계) ① 이 기준은 「건축기본법」에 따른 건축의 공공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추구하여야 할 5가지 주안점과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디자인 단계별 기준 및 실효성 확보방안으로 구성된다.

- ② 디자인 단계별 기준은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기획, 계획 및 설계, 시공, 운영 및 관리의 4단계(이하 “디자인 단계”라 한다.)로 구분되고, 기획단계에서 결정된 사항이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각 단계별로 지켜야 할 원칙과 방향 등을 제시한다.
- ③ 실효성 확보방안은 이 기준의 효율적 운영과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사항, 지원 사항, 제도적 운영수단 등을 제시한다.

제8조(5가지 주안점) ① 좋은 건축물과 공간환경은 친환경적이고,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며, 재사용이 용이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합하도록 지속가능하게 기획·설계·개선되어야 한다.

② 좋은 건축물과 공간환경은 누구에게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되고, 재해·범죄·사고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기획·설계·개선되어야 한다.

③ 좋은 건축물과 공간환경은 성별, 연령, 소득계층, 인종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누구나 공평하게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획·설계·개선되어야 한다.

④ 좋은 건축물과 공간환경은 변화하는 사회적·시대적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다양성과 융통성을 확보하고 장소의 특성에 따라 적정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기획·설계·개선되어야 한다.

⑤ 좋은 건축물과 공간환경은 지역의 고유한 사회·문화적, 인문·지리적, 경제적 특성을 고려하고,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전통적인 자산을 보존·활용하며 미래에 가치 있는 자산으로서 창조될 수 있도록 기획·설계·개선되어야 한다.

제2장 디자인 단계별 기준

제9조(일반사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기준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확보, 관련부서 또는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 전담조직 구성 등 인력·조직 구축방안을 강구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초기 기획단계에서부터 사업추진과 관련된 부서간 또는 관련 기관간 긴밀한 협의 또는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기본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디자인 단계별로 사업의 성격에 적합한 관련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강구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자격, 업무범위,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건축·도시 관련 기획 및 설계 업무에 대한 조정, 다수의 사업자 또는 설계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및 관리,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에 대한 기획·설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민간전문가(이하 ‘총괄계획가’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총괄계획가는 사업 규모나 성격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로 구성될 수 있으며, 토지이용 계획, 마스터플랜, 기본계획 등 공간의 이용에 대한 골격을 규정하는 상위계획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총괄계획가는 사업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사업의 추진·운영·관리방안 등을 제안하거나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계획·설계 조직, 운영 및 관리조직 구성에 대하여도 제안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

3. 총괄계획가는 통합적인 디자인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사업별 기준을 설정·운영하거나 또는 설정·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적절히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지역주민들에게 사업관련 추진현황 등 관련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는 한편, 지역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와 수단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한다.

2.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면담조사, 공청회, 설명회 등 다양한 지역주민 참여 방안을 강구한다.

3.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경관법」에 따른 “경관협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디자인 단계별 기준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각 단계별로 디자인검토와 평가를 실시한다.
-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디자인검토와 평가를 실시할 경우 디자인 단계별로 주요사항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환류과정을 거쳐 수정·보완하도록 한다.
- ⑨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디자인 단계별로 실시한 다양한 조사와 분석 자료 및 진행경과를 기록하고 축적하여 향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 ⑩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전문가 이외에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절 기획단계

제10조(사업추진체계의 구축)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디자인 단계별로 참여할 이해관계자 범위 및 역할 설정, 주요 업무 및 수행방안, 사업 추진조직 구성방안 등을 포함한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한다.

제11조(사전조사)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고유한 여건과 맥락을 고려하여 사전조사를 시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전조사는 입지조사, 역사·문화자원조사, 자연·사회환경조사, 수요조사, 유사사례조사, 지역경제여건조사 등 적정한 조사항목을 설정하고 설문, 면담조사 등 효율적인 조사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한다.
2. 사전조사 결과물은 향후 활용될 수 있도록 공개하여 중복조사에 따른 자원낭비를 방지하도록 한다.

제12조(비전, 목표, 사업추진방향 등의 설정)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전조사결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반영하여 사업의 성격에 적합한 비전, 목표, 사업추진방향 등을 설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비전, 목표, 사업추진방향 등을 설정할 때에는 사업예산, 공사기간, 완공 후 운영 및 관리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새로운 기법 또는 재료 적용, 고도의 기능 채용, 공사비 절감 등이 중요한 경우 사업추진

진방향을 설정할 때 기술개발 등 기술관련 추진전략을 포함한다.

3. 이해관계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설문조사, 면담조사, 공청회, 설명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방안을 강구한다.

제13조(프로그램 및 사업추진방식의 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전조사결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사업의 규모와 성격을 구체화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의 유형, 규모, 성격, 자금조달, 예상편익, 기술적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사업타당성을 분석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타당성분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주방식 등 사업추진방식을 결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시공과정에서 과도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 일정 계획, 자금조달계획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추진방식을 결정한다.

2. 사업추진방식을 결정할 때에는 수주실적과 저가입찰에 의한 선정방식보다는 건축가나 계획가의 능력과 설계안의 우수성이 반영되어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3. 계획 및 설계비용은 공사액에 대비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 사업의 성격과 디자인 품격 확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정사업(경관사업, 건축디자인시범사업 등)과 법정계획수단(특정경관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등을 최대한 활용한다.

제2절 계획 및 설계단계

제14조(대상지 분석,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기본계획의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지의 형태, 지형, 역사, 관련된 상위계획(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등 여건을 반영하여 기획단계에서 설정된 사업의 목표와 추진방향 등에 부합하도록 디자인 개념을 설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제15조(통합디자인의 시행)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력설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건축·토목·조경·기계·전기 등 분화된 업무를 총괄·조정할 수 있는 총괄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계획가가 선정된 경우에는 총괄계획가가 총괄·조정 업무를 담당한다.

2. 건축물, 도로, 가로시설물, 조경 등이 개별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통합디자인이 구현되도록 건축·도시·조경·디자인·토목 분야 등 여러 관련 분야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16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체적 공간계획, 시설물별 세부상세계획 등을 거쳐 디자인 개념을 발전시킨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안)을 도출한다. 이 경우 시공단계에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제17조(디자인검토 및 타당성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안)에 대하여 기획단계에서 설정한 목표 및 방향에 부합하는지 향후 시공과정에 문제가 없는 지를 검토하는 디자인검토를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디자인검토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세부단계별로 사업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디자인검토 시행여부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안) 등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점검하는 타당성 평가를 시행하고 환류과정을 거쳐 수정·보완하도록 한다.

제3절 시공단계

제18조(협력체계의 구축)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건축·토목·조경·설비·구조·전기 등 다양한 분야의 시공 담

당주체간 협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제19조(디자인감리의 도입 및 설계변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공감리만으로 사업의 목표 및 방향, 디자인 개념 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설계자가 설계안대로 시공이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디자인감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디자인감리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설계자의 의도가 시공단계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자가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공단계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의 목표 및 방향, 디자인 개념, 공사기간, 예산범위 등을 고려하고 설계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최적의 설계변경(안)을 도출하도록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폭적인 설계변경으로 사업의 목표 및 방향, 디자인 개념을 재설정하여야 할 경우 사전조사,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전부 또는 일부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4절 운영 및 관리단계

제20조(운영체계의 구축)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성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에 대한 운영프로그램을 수립할 때 활용도 제고를 위해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제21조(지속적 관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의 목표와 추진방향, 디자인 개념 등의 구현여부와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모니터링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사업의 목표와 추진방향, 디자인 개념 등을 반영하여 시설물 변경, 운영프로그램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모니터링한 내용은 데이터로 구축하여 향후 유사한 타 사업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제3장 실효성 확보 방안

제22조(구성 및 적용) ① 실효성 확보방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 기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주요한 행정사항, 지원사항, 운영수단 등으로 구성된다.

② 실효성 확보방안에서 제시되는 주요한 행정사항, 지원사항, 운영수단 등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사항을 생략하거나 변용하는 등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3조(민간전문가 참여의 활성화)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좋은 건축물과 공간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디자인 단계별로 관련되는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민간전문가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조언, 총괄계획가 업무수행, 디자인리뷰 등 다양한 업무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의 업무범위, 권한, 직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품격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디자인 단계별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력설계를 시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력설계는 장소만들기 관점에서 건축·토목·조경 등 관련 분야를 통합하는 디자인을 추구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협력설계에 참여하는 각 분야 민간전문가의 역할, 권한, 책임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협력설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제24조(자발적 주민참여의 활성화)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좋은 건축물과 공간환경이 지역사회에 가져다주는 의미, 가치 등에 대한 지속적인 계몽활동과 함께 경제적인 인센티브, 행정지원 등의 각종 시책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자발

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좋은 건축물과 공간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관련 사업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디자인단계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한 방법으로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25조(디자인검토의 시행) ①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품격과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디자인검토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디자인검토를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디자인검토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위하여 건축·도시·조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디자인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디자인검토 결과는 공개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사업추진과 관련한 주요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방지하며, 아울러 사업추진과 관련한 행정관청의 각종 심의나 인·허가 및 향후 유사한 사업추진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제26조(디자인평가지표의 도입)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기준에 따른 세부이행사항을 항목별로 체계화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디자인평가지표(Design Quality Indicator)를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디자인평가지표는 사업별로 차이 없이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사항과 사업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 특성화되거나 강조될 필요가 있는 특화사항 등으로 대별하여 구성한다.
2. 디자인평가지표는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판단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별로 정량지표, 정성지표를 적절하게 설정한다.
3. 디자인평가지표는 관리 및 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인터넷기반의 전산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27조(디자인 전담조직의 운영)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디자인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디자인 전담조직은 각 기관별 특성에 따라 신규로 설치하거나 기존 조직에서 담당하게 하는 등 적절한 구성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2. 디자인 전담조직의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전문가를 채용하는 등 전문 인력을 확보한다.

제28조(디자인 자문단의 운영)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련 사업의 추진 및 디자인정책의 추진에 있어 전문적인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9조(기획제안, 개선제안, 설계공모의 활성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품격 및 품질 제고를 위하여 「건축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5항에 따른 기획제안, 개선제안 및 설계공모 등을 적극 활용한다.

제30조(교육 및 홍보)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이 기준의 내용에 대하여 교육과 홍보를 적극 시행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자별 특성을 감안하여 교육 및 홍보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교육 및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보급한다.

제3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 27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록 4> 영주시 디자인관리를 위한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영주시를 아름답고 품격 있는 전통과 역사의 도시로 조성하여 정체성을 확립하고, 창조적이며 경쟁력 있는 도시공간을 만들고자 추진하는 디자인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그리고 디자인전문가의 위촉과 활동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영주시의 디자인 관리를 위해 시장이 위촉하여 건축, 도시, 토목, 조경, 조명, 색채, 산업디자인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2. “디자인전문가”란 영주시의 디자인 관리를 위해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시장이 위촉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그 밖에 시장이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영주시 소재의 공공기관에서 요청하는 디자인자문과 관련된 사항
 2. 영주시 각종 위원회에서 디자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자문은 건축물과 시설물의 디자인을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하여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건축물과 시설물이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증진시키도록 한다.

제4조(디자인전문가의 위촉 등) ① 디자인전문가는 1명으로 건축 및 디자인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관계전문가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디자인전문가를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그 밖에 시장이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③ 디자인전문가의 자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으로서 3층 이상이거나 495㎡ 이상 건축물과 부속물
2.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승인대상
3. 공공시설물의 기획 및 계획과 설계에 관한 사항
4. 디자인 관련 각종 시범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변경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자문은 건축물과 시설물의 디자인을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하여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건축물과 시설물이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증진시키도록 한다.

제5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설계경기, 협상 등 현상공모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디자인 계획. 다만, 공모안은 자문 대상
2.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또는 응급조치를 행하는 경우

제6조(회의개최 등) ① 위원회의 자문회의는 사업시행부서의 요청에 의해 디자인관리 담당 부서에서 소집하고 회의를 개최한다.

② 디자인전문가의 자문은 사업시행부서의 요청에 의해 디자인관리 담당부서에서 디자인 전문가에게 자문 7일 전에 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디자인전문가는 매주 2일 이상 영주시에서 자문을 한다.

제7조(협조요청) 디자인전문가와 디자인자문위원은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주·설계자 등 이해관계인과 시의 관계부서에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디자인관리 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디자인관리업무담당자로 한다.

제9조(회의록) 위원회 및 디자인전문가는 회의록 및 자문일지를 작성하고 비치한다.

제10조(실비변상) 디자인자문위원 및 디자인전문가가 사전 검토를 하거나 회의에 참석, 직무상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사전 검토 수당 1건당 : 30,000원 이하
2. 일비 및 여비 : 「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금액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집 필 자 ■

연구책임 · 한상욱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 · 서수정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도시연구본부장

기본연구 2010-14 · 충청남도 건축디자인 제도 도입과제 및 운영의 실효성 제고방안

글쓴이 · 한상욱, 서수정 / 발행자 · 박진도 / 발행처 · 충남발전연구원

인쇄 · 2010년 12월 31일 / 발행 · 2010년 12월 31일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금홍동 101 (314-140)

전화 · 041-840-1143(직통) 041-840-1114(대표) / 팩스 · 041-840-1129

ISBN · 978-89-6124-148-9 03350

<http://www.cdi.re.kr>

© 2010, 충남발전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